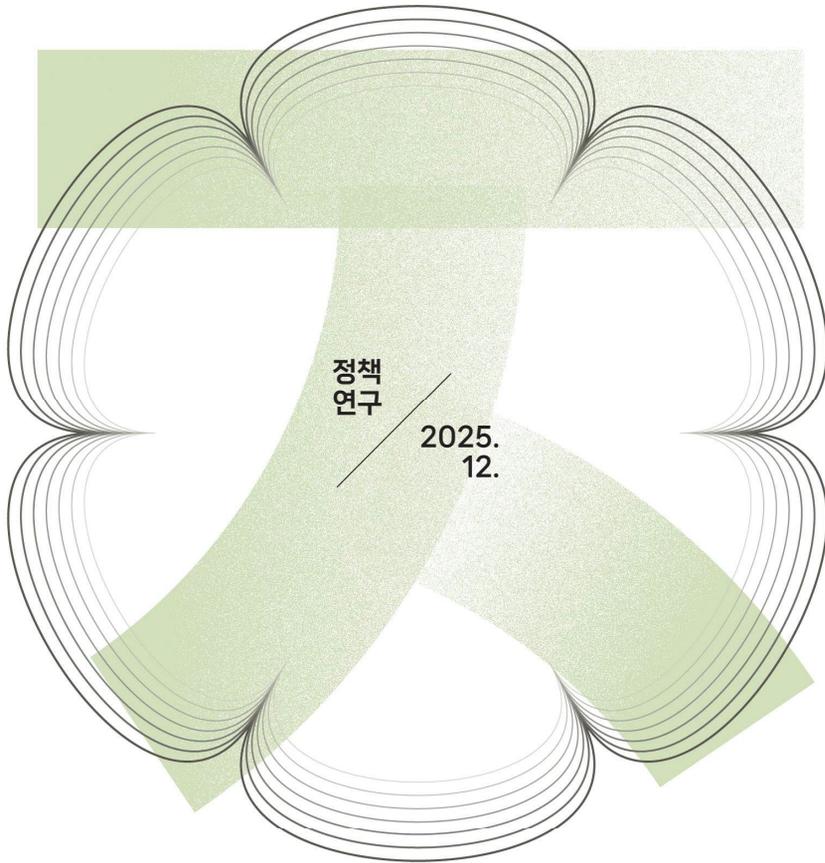


●●● 정책연구 2025-06

출입국·이민정책 기구 김해시 유치를 위한 기초연구

전현진·강순경·김선형



연구진 profile

전현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책임• 도시교통환경연구부 연구위원
강순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연구• 경제산업연구부 연구위원
김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연구(비상임연구위원)•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책임연구위원

| 요약 및 정책함의 |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이민행정 수요 증가와 외국인 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출입국·이민정책 기구의 김해시 유치 당위성과 정책적 적합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아울러 김해시가 이민정책 실증·선도 도시로 기능할 수 있는 잠재력과 추진 전략을 도출하고자 함

▣ 김해시 유치 당위성

- 김해는 입지·수요·행정 역량을 갖춘 동남권 이민정책 최적 도시

정책적 측면	· 국가균형발전형을 위한 이민행정 도시로 도약 가능
공간적 측면	· 동남권을 연결하는 요충도시, 공항·항만·도로가 결합된 광역 복합거점
사회문화적 측면	· 외국인 주거·교육·복지 인프라와 허황후 설화 기반 다문화 수용성 보유
행정적 측면	· 외국인 지원 인프라와 전담부서 확보로 즉시 지원 가능
정책 수요	· 비수도권 외국인 인구 1위, 산업인력 중심의 이민정책 실수요 집중 지역

▣ 김해시 출입국·이민정책 기구 유치 전략

- 유치 중심의 외부 전략과 정주·통합 중심의 내부 전략을 병행하는 다층적 추진체계로 접근

외부지향 (유치 중심)	· 동남권 관문도시의 입지적 강점을 활용한 권역형 이민행정 기능 유치 및 분산 이전 대응
내부강화 (정주·사회통합)	· 외국인이 실제로 살고 일하고 정착할 수 있는 생활·복지·교육·사회통합 기반 강화
행정혁신	·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이민행정 체계 구축을 통한 행정 효율성 및 대응력 제고
국제협력	· 글로벌 인재 유입, 국제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개방형 이민정책 실현

▣ 정책제언

- 외국인 관리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정주·사회통합 중심의 이민정책으로 전환하고, 국제협력 강화와 글로벌 인재 유입을 통해 동남권 이민행정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I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범위 및 방법	4
II	외국인 정책 동향 및 중앙행정기관 유치 사례	6
1.	출입국자 및 외국인 체류현황	6
2.	중앙정부의 외국인 정책 기조 변화	20
3.	중앙행정기관 지역 유치 사례	28
4.	국내 출입국·이민정책 기구 유치 전략 분석	41
5.	시사점	52
III	출입국·이민정책 기구 김해시 유치 당위성	58
1.	출입국·이민정책 기구의 역할 및 기능	58
2.	김해시 외국인 정책 및 정주 기반	64
3.	김해시 유치 당위성	89
IV	출입국·이민정책 기구 김해시 유치 전략	96
1.	전략 방향 도출	96
2.	세부 추진전략	101
3.	추진 로드맵	106
V	결론 및 정책 제언	108
1.	결론	108
2.	정책적 제언	110
	참고문헌	112

I 서론

1 |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국가 차원의 인구구조 위기와 이민정책 전환의 가속화

-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지역소멸 위기가 국가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이러한 인구 위기 속에서 정부는 기존의 내국인 중심 인구정책만으로는 대응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인식하에, 외국인의 유입·정착을 국가 성장동력의 핵심 요소로 포함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있음
- 특히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서는 출입국·이민관리청의 신설, 이민행정 체계 개편, 외국인 정주지원 강화 등이 명시되었고, 관련 법률안 발의가 지속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임
- 이는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향후 대한민국의 인구·노동·사회정책 전반에서 ‘이민정책의 제도화’가 핵심 국가 아젠다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함

□ 지방분산형 이민정책 기구의 필요성과 경상남도의 전략적 기반

- 현행 이민행정 체계는 수도권 및 일부 광역도시에 행정 기능이 편중되어 있어, 외국인 인구의 전국적 증가 추세와 지역별 산업·노동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
- 특히 외국인 인구는 이미 지방 중소도시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정착·생활하고 있으나, 출입국·체류·정주 지원과 같은 핵심 행정 서비스는 수도권 중심으로 제공되어 지역 간 행정 접근성의 공간적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출입국·이민정책 기구의 기능은 기존의 중앙집권적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지방분산형 이민행정 체계

로의 전환이 요구되며, 이는 필연적으로 권역별·지역 거점 중심의 행정체
계 구축 필요성을 동반함

- 한편, 경상남도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등록외국인 인구를 보유한 지
역으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 따른 지속적인 외국인 노동력 수요와
함께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정주형 외국인 인구가 안정적으로 형성되
어 있음
- 아울러 다문화 수용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과 생활·복지·교육 여건이 축적
되어 있어, 단순 체류 관리를 넘어 정주·통합을 포괄하는 이민정책 수요가
복합적으로 존재함
- 이러한 특성은 경상남도가 지방권 이민행정 기능을 수용·확산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을 갖춘 지역임을 보여주며, 지방분산형 이민행정 체계 구축에
있어 전략적 거점으로서의 적합성이 높음을 시사함

▣ 동남권 이민정책의 전략적 요충지, 김해시

- 경상남도 내에서도 김해시는 등록외국인 인구가 가장 많고 체류자격 유형
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이민정책에 대한 실질적 수요가 높은 도시로
평가됨
- 또한 김해공항과 직접 연계되고, 가덕신공항과의 접근성, 부산·경남과의 생
활권 통합 구조는 김해가 동남권 관문형 이민정책의 실행 거점이 되기에
충분한 입지적 조건을 제공함
- 더 나아가 김해는 다문화 가구 비중이 높고, 동상동 외국인 거리·다문화
축제·지원센터 등 자생적 커뮤니티와 시민사회 기반이 안정적으로 형성되
어 있어, 이민정책 기구가 실제로 기능하기 위한 사회적 수용성과 정주 기
반을 갖춘 도시임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와 정부의 이민행정 개편 추진이라는 국가적 정
책환경 변화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입국·이민정책 기구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경쟁하는 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수행됨
- 최근 경기도·충청권·전라권·경북권 등 여러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유치 전략 수립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민행정 거점 유치의 정책적·경제적 파급효과 분석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 그러나 외국인 등록 인구·산업 기반·정주 특성 면에서 가장 높은 수요를 가진 김해시는 이러한 전국적 논의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정책 대응이 늦은 상황에 놓여 있음
- 김해는 외국인 인구 규모, 산업단지 중심 노동수요, 역사적 결혼이민 기반, 김해공항 및 광역교통망과의 연계성 등 측면에서 출입국·이민정책 기구 유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및 광역 단위 논의에서 충분히 부각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다음의 목적을 지님
 - 첫째, 출입국·이민정책 기구의 기능 전환 및 확대라는 국가 정책 흐름을 분석함
 - 둘째, 타 지역의 출입국·이민정책 기구의 유치 전략과 정책 논리, 추진 사례를 비교·검토하여 김해시의 정책적 위상과 차별적 경쟁 요소를 도출함
 - 셋째, 김해시의 공간적 입지, 외국인 인구 특성 및 사회·문화적 기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출입국·이민정책 기구 유치의 정책적·공간적 당위성을 구조화함
 - 넷째, 향후 국가 차원의 이민정책 결정 및 제도 개편 과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김해시 맞춤형 출입국·이민정책 기구 유치 전략과 단계별 정책 과제를 제시함
-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김해시가 단순한 행정기관 유치 차원을 넘어, 동남권 이민행정의 핵심 거점이자 글로벌 이민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과 전략적 방향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본 연구는 2025년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국가 이민정책 정책 변화, 김해시 외국인 정책 및 정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음

□ 공간적 범위

- 국가 차원: 중앙정부의 이민정책 개편 방향과 출입국·이민정책 기구 신설 논의, 관련 법·제도 변화 등 국가 이민행정 체계 전반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함
- 광역 차원: 동남권(부산·울산·경남) 권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인구 분포 및 광역 연계성을 검토하여, 지방분산형 이민행정 체계 구축에 있어 권역 단위의 유치 당위성을 도출함
- 김해시 차원: 김해시의 외국인 인구 현황과 정주·사회통합 기반, 산업·교통 인프라 등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출입국·이민정책 기구 유치에 대한 정책 수요와 당위성을 도출함

□ 내용적 범위

- 국가 이민정책 전환의 흐름과 제도개편 동향 분석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의 핵심 과제를 분석하고,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의 정책적 배경과 법제도적 논의 과정을 검토함
- 외국인·이민정책 기구 유치 경쟁의 구조와 지방 분산의 필요성 검토
 - 수도권 및 일부 광역시 중심의 행정집중 문제를 짚고, 지방 분산형 이민행정체계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지자체 유치 경쟁의 실태를 분석함
- 김해시의 유치 당위성 도출
 - 타 지역과 비교하여 김해시의 상대적 강점 및 보완점을 도출하고, 김해시의 외국인 정책 수요, 정주 여건, 교통 접근성, 시민사회 기반 등을 중심으로 유치 논리를 구성함

- 김해시 유치 전략 제안
 - 김해시가 추진할 수 있는 유치 전략을 제시함

2) 연구의 방법

▣ 문헌·정책자료 분석

- 중앙정부 정책자료, 기본계획, 법률안, 국회·부처 보고서 검토
- 출입국·이민정책 관련 국내외 사례 비교
-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전략, 조례·계획 등 정책문서 분석

▣ 통계자료 및 정량 분석

- 법무부·행정안전부 등의 공공데이터 기반 외국인 인구 및 체류 현황 분석

▣ 비교사례 분석

- 인천·청주·경기도 등 출입국·이민기관 유치를 공식화한 지자체의 전략·행정 조직·공문화 사례 분석

▣ 전문가 의견 및 정책 방향 검토

- 이민정책·외국인 정책·도시행정 분야 전문가의 자문
- 법무부·지자체·민간기관 자료를 통해 실효성 검토

▣ 전략도출

- SWOT 분석을 기초로 하여 김해시 유치 전략 도출

II 외국인 정책 동향 및 중앙행정기관 유치 사례

1 | 출입국자 및 외국인 체류현황

1) 주요 용어의 설명

□ 비자의 개념 및 종류

○ 비자의 개념

-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해당 목적과 체류 기간에 부합하는 유효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일종의 정부가 부여하는 입국 허가증에 해당함
- 비자는 “사증(査證)”이라고도 하며, 입국의 종류와 목적,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등이 명시되어 외국인의 체류 합법성을 보장함

○ 비자의 종류

-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유형화한 것으로 영어 알파벳 A계열부터 H계열을 두고 있음

<표 2-1> 계열별 비자의 종류

계열	설명	체류자격
A	외교, 공무, 국가 간 협정에 따라 체류하는 사람	A-1(외교), A-2(공무), A-3(협정)
B	사증면제협정, 상호주의 등에 따라 입국이 허용된 사람	B-1(사증면제), B-2(관광통과)
C	90일 이내 일시 체류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C-1(일시취재), C-3(단기방문), C-4(단기취업)
D	교육, 문화, 투자 관련 활동을 위해 체류하는 사람	D-1(문화예술), D-2(유학), D-3(기술연수) D-4(일반연수), D-5(취재),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D-10(구직)
E	전문분야, 비전문분야 활동을 위해 체류하는 사람	E-1(교수), E-2(회화),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홍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F	가족동반, 거주, 동포, 영주,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하는 사람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
G, H	협정에 의한 취업, 인도적 사유로 체류하는 사람	H-1(관광취업), H-2(방문취업) G-1(기타)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2)를 참조하여 저자 재구성

▣ 주요용어¹⁾

○ 체류외국인

- ‘관광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내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 ‘91일 이상 장기 거주하는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등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모든 체류 외국인
- 장기체류 외국인: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 단기체류 외국인: 관광, 친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90일 이내에 단기간 체류하는 외국인

○ 등록외국인

- 입국한 날로부터 91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고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국국적동포가 91일 이상 체류하기 위해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거소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자
- 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불법체류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 제 1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출국하지 아니한 외국인

○ 결혼이민자

- 국민과의 혼인관계를 바탕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F-2-1(국민의배우자 구 체력자격), F-5-2(결혼이민 영주자격), F-6-1(국민의 배우자), F-6-2(자녀양육), F-6-3(혼인단절) 체류 자격 소지자

○ 유학생

- 체류자격 D-2(유학), D-4-1(일반연구), D-4-7(외국어연수)을 소지하고

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3)를 인용함

체류중인 외국인

▣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및 외국인주민 통계

-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 통계: 비자·체류자격 기준의 국가 행정 통계
 - 분류기준: 체류자격(비자 유형) 중심
 - 분류방식: 단기체류, 장기체류, 영주, 불법체류 등 행정적 체류 상태 기준
 - 실제 거주 여부보다는 체류 자격과 법적 지위에 초점
-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통계: 거주·정주 기준의 지역 인구 통계
 - 분류기준: 거주 및 생활 실태 중심
 - 분류방식: 지자체 내 3개월 이상 거주 여부 기준

2) 출입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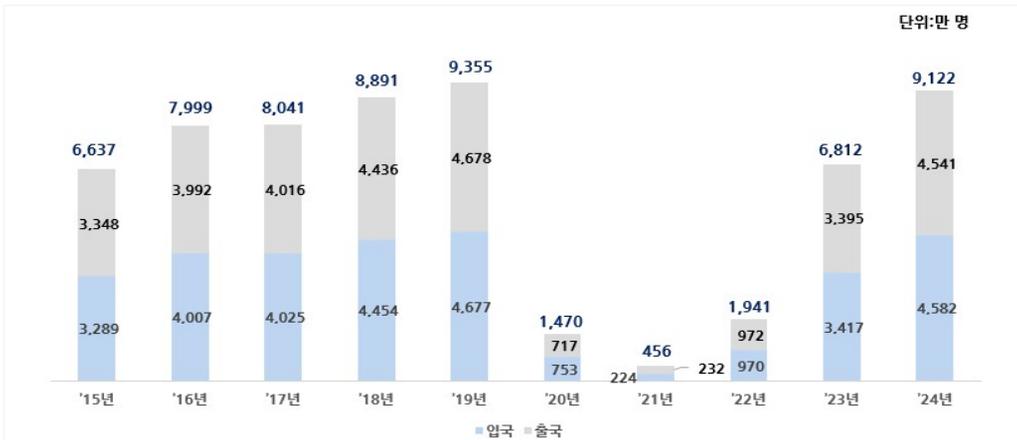
▣ 최근 10년간 출입국자 현황

- 코로나19 이전 (2015~2019년)
 - 입국자 총수는 2015년 약 3,289만 명에서 2019년 약 4,677만 명으로 증가하며, 연평균 9.1%의 증가율을 기록함
 - 이 중 외국인 입국자는 2015년 1,335만 명에서 2019년 1,788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연평균 6.3%의 증가율을 보임
 - 국민 출국자는 2015년 1,958만 명에서 2019년 2,890만 명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12.3%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 코로나19 시기 (2020~2021년)
 - 2020년 외국인 입국자 수는 약 265만 명으로, 전년 대비 85.1% 급감하며 극단적인 감소세를 보였음
 - 국민 출국자 수 또한 같은 해 430만 명으로 줄어들어, 2019년 대비 85.1% 감소하는 등 국경 간 이동이 사실상 정지되었음
 - 이러한 급감은 코로나19 팬데믹의 확산에 따른 국경 폐쇄, 비자 발급 중단, 항공편 축소 등의 국제적인 이동 제한 조치에 기인한 것임
 - 2021년에도 외국인 입국자 수는 104만 명, 국민 출국자 수는 123만 명

수준으로, 회복세가 미미한 상태임

○ 팬데믹 회복기 (2022~2024년)

- 2022년 외국인 입국자 수는 약 339만 명으로 전년 대비 3.2배 증가하며 회복의 초기 국면에 진입하였음
- 2023년에는 1,150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며, 본격적인 회복세가 나타났고, 2024년에는 1,696만 명을 기록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2019년 1,788만 명)의 약 95%에 도달하였음
- 국민 출국자 수도 2022년 658만 명, 2023년 2,275만 명, 2024년 2,872만 명으로 증가하며, 팬데믹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함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5),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4월호

(그림 2-1) 출입국자 현황

<표 2-2> 출입국자 현황

(단위:명)

연도	출입국자 합계	입국			출국		
		소계	국민	외국인	소계	국민	외국인
'15년	66,372,908	32,891,119	19,531,418	13,359,701	33,481,789	19,580,398	13,901,391
'16년	79,987,974	40,072,565	22,654,258	17,418,307	39,915,409	22,659,640	17,255,769
'17년	80,407,702	40,249,036	26,679,527	13,569,509	40,158,666	26,765,503	13,393,163
'18년	88,908,420	44,544,745	28,914,223	15,630,522	44,363,675	28,945,447	15,418,228
'19년	93,548,093	46,770,129	28,889,626	17,880,503	46,777,964	28,905,763	17,872,201
'20년	14,701,831	7,529,423	4,869,578	2,659,845	7,172,408	4,301,903	2,870,505
'21년	4,559,693	2,242,365	1,197,820	1,044,545	2,317,328	1,234,697	1,082,631
'22년	19,414,228	9,699,030	6,309,021	3,390,009	9,715,198	6,580,145	3,135,053
'23년	68,121,657	34,168,188	22,667,305	11,500,883	33,953,469	22,756,008	11,197,461
'24년	91,222,927	45,815,006	28,846,803	16,968,203	45,407,921	28,720,773	16,687,148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5),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4월호

3) 체류외국인 현황

▣ 최근 10년간 체류외국인 현황

○ 코로나19 이전 (2015~2019년)

- 체류외국인 총수는 2015년 190만 명에서 2019년 252만 명으로 증가하며, 연평균 7.4%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 장기체류 외국인은 같은 기간 147만 명에서 173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연평균 4.4%의 증가율을 기록함
- 단기체류 외국인도 2015년 43만 명에서 2019년 79만 명으로 확대되어, 연평균 9.2%의 증가율을 보였음

○ 코로나19 시기 (2020~2021년)

- 2020년 체류외국인 총수는 204만 명으로 전년 대비 19.4% 감소하며, 코로나19 팬데믹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음
- 장기체류자는 등록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거소신고자 수가 증가하며 일정 수준 유지되었으나, 단기체류자는 43만 명으로 2019년 대비 46.3% 급감하였음
- 2021년에도 39만 명 수준에 머무르면서 팬데믹 시기 외국인 이동이 사실상 정지 상태였음을 보여줌

○ 팬데믹 회복기 (2022~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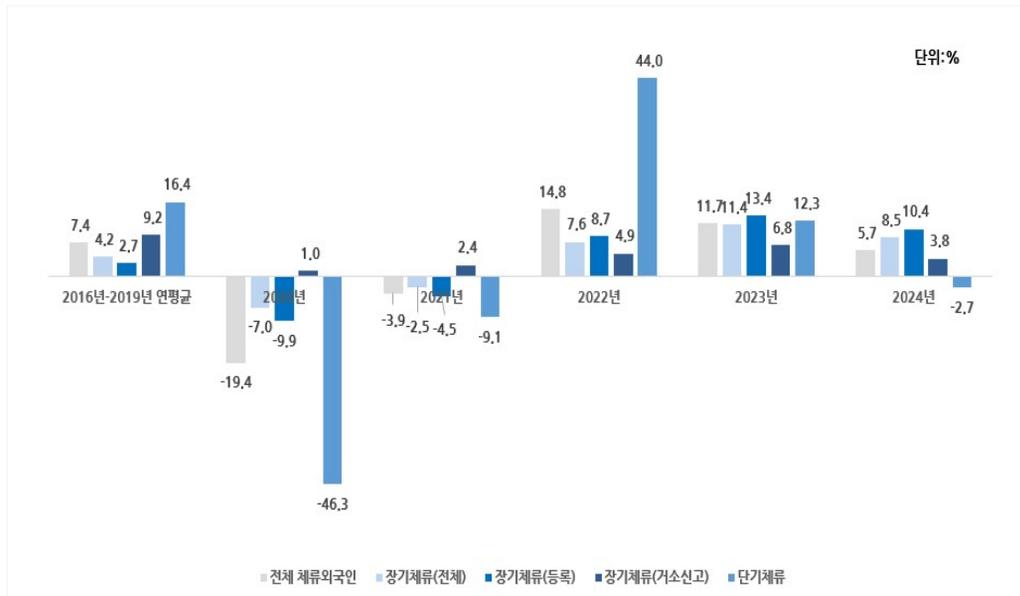
- 2022년 체류외국인 수는 225만 명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함. 이 중 장기체류는 169만 명으로 11.4% 증가, 단기체류는 56만 명으로 44.0% 증가하여 특히 단기체류 부문에서 뚜렷한 반등이 나타남
- 2023년에는 총 251만 명으로 전년 대비 11.7% 증가하였고, 장기체류는 188만 명으로 11.7%, 단기체류는 63만 명으로 12.3% 증가함
- 2024년에는 체류외국인 수가 265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음
- 특히 장기체류 외국인은 204만 명으로 전체의 77.0%를 차지하며, 반면 단기체류 외국인은 61만 명으로 전체의 23.0%를 차지함

<표 2-3> 체류외국인 현황

(단위: 만 명, %)

연도	총 계		장기체류						단기체류	
			소 계		등 록		거소신고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2015년	190	100.0	147	77.3	114	60.2	32	17.1	43	22.7
2016년	205	100.0	153	74.7	116	56.7	37	18.0	52	25.3
2017년	218	100.0	158	72.6	117	53.7	41	18.9	60	27.4
2018년	237	100.0	169	71.3	125	52.7	44	18.6	68	28.7
2019년	252	100.0	173	68.6	127	50.4	46	18.2	79	31.4
2020년	204	100.0	161	79.1	115	56.3	46	22.8	43	20.9
2021년	196	100.0	157	80.2	109	55.9	48	24.3	39	19.8
2022년	225	100.0	169	75.2	119	53.0	50	22.2	56	24.8
2023년	251	100.0	188	75.0	135	53.8	53	21.3	63	25.0
2024년	265	100.0	204	77.0	149	56.1	55	20.9	61	23.0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5),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7월호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5),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7월호

(그림 2-2) 전년도 대비 체류외국인 증감률

▣ 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

- 2025년 7월 기준 체류외국인 자격별 분포는 재외동포(F-4) 20.3%, 비전문취업(E-9) 12.5%, 영주(F-5) 7.9%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단기 체류자 비중은 전체의 약 20% 수준으로 나타남
- 주요 체류 자격 분포
 - 재외동포(F-4)가 55만 5천 명(20.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비전문취업(E-9) 체류자는 34만 1천 명(12.5%)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등 단순 노무 분야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말함
 - 영주(F-5) 체류자는 21만 5천 명(7.9%), 유학(D-2) 체류자는 19만 명(7.0%)으로, 장기 정주와 학업 목적 외국인임
 - 결혼이민(F-6)은 15만 2천 명(5.6%), 방문취업(H-2)은 8만 8천 명(3.2%)으로 나타남
- 단기 체류 자격 현황
 - 사증면제(B-1) 체류자는 18만 8천 명(6.9%), 관광통과(B-2)는 15만 8천 명(5.8%), 단기방문(C-3)은 17만 7천 명(6.5%), 단기취업 3천 6백 명으로 단기 체류 외국인은 전체의 19.3%를 차지함
 - 이는 국제 관광 및 단기 비즈니스 방문 수요가 여전히 큰 비중을 갖고 있음을 의미함
- 전문·특수 자격 현황
 - 특정활동(E-7) 체류자는 7만 3천 명(2.7%), 계절근로(E-8)는 5만 9천 명(2.2%)으로 나타나, 농업·제조업 분야에서의 단기·계절 노동수요를 반영함
 - 회화지도(E-2) 1만 3천 명(0.5%), 연구(E-3) 3천 명(0.1%), 예술행행(E-6) 5천 명(0.2%) 등 전문·특수 분야 체류자는 상대적으로 소규모를 유지함

<표 2-4> 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

구 분	자격별 체류외국인('25년 7월 기준)		
	수(명)	비중	자격별 체류외국인 비중
총 계	2,730,534명	100.0%	
사증면제(B-1)	187,926명	6.9%	기술지도(E-4) 0.0%
관광통과(B-2)	158,473명	5.8%	상사주재(D-7) 0.0%
단기방문(C-3)	176,800명	6.5%	기술연수(D-3) 0.1%
단기취업(C-4)	3,565명	0.1%	종교(D-6) 0.1%
유학(D-2)	190,061명	7.0%	교수(E-1) 0.1%
기술연수(D-3)	1,665명	0.1%	무역경영(D-9) 0.1%
일반연수(D-4)	85,613명	3.1%	연구(E-3) 0.1%
종교(D-6)	1,784명	0.1%	단기취업(C-4) 0.1%
상사주재(D-7)	1,092명	0.0%	예술홍행(E-6) 0.2%
기업투자(D-8)	8,529명	0.3%	기업투자(D-8) 0.3%
무역경영(D-9)	2,849명	0.1%	회화지도(E-2) 0.5%
교수(E-1)	1,793명	0.1%	선원취업(E-10) 0.8%
회화지도(E-2)	13,079명	0.5%	계절근로(E-8) 2.2%
연구(E-3)	3,179명	0.1%	거주(F-2) 2.4%
기술지도(E-4)	195명	0.0%	동반(F-3) 2.5%
예술홍행(E-6)	4,659명	0.2%	특정활동(E-7) 2.7%
특정활동(E-7)	73,224명	2.7%	방문동거(F-1) 3.1%
계절근로(E-8)	59,200명	2.2%	일반연수(D-4) 3.1%
비전문취업(E-9)	341,730명	12.5%	방문취업(H-2) 3.2%
선원취업(E-10)	21,381명	0.8%	결혼이민(F-6) 5.6%
방문동거(F-1)	83,661명	3.1%	관광통과(B-2) 5.8%
거주(F-2)	65,615명	2.4%	기타 6.1%
동반(F-3)	67,021명	2.5%	단기방문(C-3) 6.5%
재외동포(F-4)	555,437명	20.3%	사증면제(B-1) 6.9%
영주(F-5)	215,335명	7.9%	유학(D-2) 7.0%
결혼이민(F-6)	151,935명	5.6%	영주(F-5) 7.9%
방문취업(H-2)	88,049명	3.2%	비전문취업(E-9) 12.5%
기타	166,684명	6.1%	재외동포(F-4) 20.3%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5),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7월호

▣ 시도별 등록외국인 현황

- 등록외국인 수는 2022년 1,189,585명에서 2024년 1,488,353명으로 25.1% 증가함
-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는 467,398명(31.4%)으로 여전히 전국 최대 규모를 차지하나, 전체 비중은 2022년 32.2%에서 2024년 31.4%로 하락함
- 서울 역시 2022년 239,297명에서 2024년 265,544명으로 증가했으나 비율은 같은 기간 20.1%에서 17.8%로 감소함
- 수도권 내 등록외국인은 절대 규모는 증가했지만, 상대적 집중도는 점차 완화되는 추세임
-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경남은 2022년 70,390명에서 2024년 102,333명으로 45.4% 증가하였고, 충남(35.9%), 경북(34.6%), 충북(36.4%) 등도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성장세를 보였음
- 특히 울산은 50.4% 증가하여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전남 역시 46.7%로 크게 확대되었음. 이러한 지역들은 제조업, 조선업, 농축산업 등 외국인 노동력 수요가 높은 산업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광역시 가운데 부산은 42,863명에서 55,805명으로 30.2% 증가하여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며, 대구(24.2%), 대전(27.5%), 광주(15.6%) 등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음. 세종은 6,182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0.4%에 불과해 여전히 낮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음
- 종합하면, 전국적으로 등록외국인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수도권 집중은 다소 완화되는 대신 지방 산업 중심 지역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 특히 경남·울산·전남 등 제조업과 농어촌 산업 기반이 강한 지역의 증가세는 뚜렷하여, 향후 외국인 행정·정주 지원 수요가 해당 지역에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표 2-5> 시도별 등록외국인 현황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증감률 1)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전국	1,189,585명	100.0%	1,348,626명	100.0%	1,488,353명	100.0%	25.1%
경기	382,865명	32.2%	425,629명	31.6%	467,398명	31.4%	22.1%
서울	239,297명	20.1%	252,765명	18.7%	265,544명	17.8%	11.0%
경남	70,390명	5.9%	89,312명	6.6%	102,333명	6.9%	45.4%
충남	71,159명	6.0%	85,215명	6.3%	96,687명	6.5%	35.9%
인천	71,849명	6.0%	81,016명	6.0%	89,129명	6.0%	24.1%
경북	57,055명	4.8%	67,025명	5.0%	76,768명	5.2%	34.6%
전남	38,988명	3.3%	49,110명	3.6%	57,189명	3.8%	46.7%
충북	41,270명	3.5%	48,866명	3.6%	56,301명	3.8%	36.4%
부산	42,863명	3.6%	49,090명	3.6%	55,805명	3.7%	30.2%
전북	34,941명	2.9%	40,215명	3.0%	43,795명	2.9%	25.3%
대구	29,568명	2.5%	33,305명	2.5%	36,710명	2.5%	24.2%
제주	21,592명	1.8%	25,456명	1.9%	27,990명	1.9%	29.6%
울산	18,379명	1.5%	23,620명	1.8%	27,642명	1.9%	50.4%
광주	22,967명	1.9%	25,348명	1.9%	26,557명	1.8%	15.6%
대전	20,594명	1.7%	23,384명	1.7%	26,249명	1.8%	27.5%
강원	20,472명	1.7%	23,484명	1.7%	26,074명	1.8%	27.4%
세종	5,336명	0.4%	5,786명	0.4%	6,182명	0.4%	15.9%

주) 2024년 기준 등록외국인 수가 많은 순서로 정렬함, 1) 2022년 대비 2024년 증감률
 자료) 법무부, 출입국자및체류외국인통계

□ 권역별 등록외국인

-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권역별 등록외국인 수를 살펴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2022년 69만 4,011명에서 2024년 82만 2,071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전체 대비 비중은 58.3%에서 55.2%로 감소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은 여전히 외국인 비율 1순위를 유지하며 전국 등록외국인의 과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비수도권 지역의 증가율이 두드러지며 외국인 분포가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였음. 특히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의 등록외국인 수는 2022년 13만 1,632명에서 2024년 18만 5,780명으로 41.1% 증가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표 2-6> 권역별 등록외국인 현황

구분 ¹⁾	2022년		2023년		2024년		증감률 ²⁾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도권	694,011명	58.3%	759,410명	56.3%	822,071명	55.2%	18.5%
동남권	131,632명	11.1%	162,022명	12.0%	185,780명	12.5%	41.1%
대경권	86,623명	7.3%	100,330명	7.4%	113,478명	7.6%	31.0%
중부권	138,359명	11.6%	163,251명	12.1%	185,419명	12.5%	34.0%
호남권	61,955명	5.2%	74,458명	5.5%	83,746명	5.6%	35.2%
강원	20,472명	1.7%	23,484명	1.7%	26,074명	1.8%	27.4%
전북	34,941명	2.9%	40,215명	3.0%	43,795명	2.9%	25.3%
제주	21,592명	1.8%	25,456명	1.9%	27,990명	1.9%	29.6%

주) 1) 권역구분은 5급 3특 체계를 사용함

5급: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대경권(대구·경북),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중부권(세종·대전·충청), 호남권(광주·전남)

3특: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2) 2022년 대비 2024년 증감률

자료) 법무부, 출입국지및체류외국인통계

▣ 경상남도 등록외국인

- 경상남도의 등록외국인 수는 2022년 70,390명에서 2024년 102,333명으로 45.4% 증가하였음. 이는 전국적인 외국인 증가 추세와 더불어, 경남 지역이 제조업·조선·기계·항공 등 산업 현장을 중심으로 외국인 인력 수요의 확대가 주요 원인임
- 시·군별로 살펴보면, 김해시는 2024년 기준 24,727명으로 경상남도 전체 등록외국인의 24.2%를 차지하여 도내 1위를 기록하고 있음
- 그다음으로는 창원시(18,121명, 17.7%), 거제시(14,969명, 14.6%), 양산시(8,187명, 8.0%) 순으로 나타나며, 이들 지역 역시 제조업·조선업·물류 산업과 연계된 외국인 노동력 수요가 높은 지역임을 보여줌
- 특히 거제시는 2022년 대비 2024년에 155.4% 증가하여, 경상남도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이는 조선업 회복과 맞물린 외국인 유입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종합하면, 경상남도는 외국인 체류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이며, 그 중에서도 김해시는 전체 외국인의 약 4분의 1이 집중된 최대 거점 도시로서 행정·정책적 중요성이 매우 큼

<표 2-7> 경상남도 등록외국인 현황

구분 ¹⁾	2022년		2023년		2024년		증감률 ¹⁾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경남	70,390명	100.0%	89,312명	100.0%	102,333명	100.0%	45.4%
김해시	17,911명	25.4%	21,425명	24.0%	24,727명	24.2%	38.1%
창원시	13,988명	19.9%	16,422명	18.4%	18,121명	17.7%	29.5%
거제시	5,861명	8.3%	11,773명	13.2%	14,969명	14.6%	155.4%
양산시	6,120명	8.7%	6,948명	7.8%	8,187명	8.0%	33.8%
진주시	4,908명	7.0%	5,888명	6.6%	6,340명	6.2%	29.2%
통영시	3,988명	5.7%	4,601명	5.2%	4,994명	4.9%	25.2%
밀양시	3,014명	4.3%	4,223명	4.7%	4,915명	4.8%	63.1%
함안군	3,158명	4.5%	4,022명	4.5%	4,539명	4.4%	43.7%
사천시	3,127명	4.4%	3,553명	4.0%	3,884명	3.8%	24.2%
창녕군	2,483명	3.5%	3,091명	3.5%	3,347명	3.3%	34.8%
고성군	1,194명	1.7%	1,712명	1.9%	1,935명	1.9%	62.1%
남해군	883명	1.3%	1,017명	1.1%	1,180명	1.2%	33.6%
산청군	619명	0.9%	869명	1.0%	990명	1.0%	59.9%
의령군	740명	1.1%	884명	1.0%	967명	0.9%	30.7%
합천군	756명	1.1%	870명	1.0%	939명	0.9%	24.2%
하동군	500명	0.7%	707명	0.8%	913명	0.9%	82.6%
거창군	744명	1.1%	806명	0.9%	868명	0.8%	16.7%
함양군	396명	0.6%	501명	0.6%	518명	0.5%	30.8%

주 1) 2022년 대비 2024년 증감률 / 2024년을 기준으로 등록외국인 수가 많은 순으로 정렬함
 자료) 법무부, 출입국자및체류외국인통계

□ 시군구별 등록외국인

- 2024년 말 기준 등록외국인 규모가 큰 상위 20개 기초지자체의 총 인원은 473,164명으로, 이는 전국 등록외국인의 약 31.8%를 차지함. 이들 지역은 주로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 특히 안산시는 단원구와 상록구를 합산할 경우 총 54,240명(3.6%)으로,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등록외국인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남
- 법무부의 시군구별 등록외국인 수 통계에 따르면, 상위 5개 지역은 모두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음
 - 경기도 화성시가 51,059명(3.4%)으로 단일 행정구역 기준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으며, 시흥시(40,493명, 2.7%), 안산시 단원구(38,321명, 2.6%), 평택시(32,489명, 2.2%), 김포시(25,608명, 1.7%) 등이 뒤를 이었음
 - 이들 지역은 반월·시화 국가산단, 평택항, 반도체 특화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를 배경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거주하는 전형적인 산업 중심

도시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음

- 비수도권 지역 중에서는 경남 김해시가 24,727명(1.7%)으로 전국 6위를 기록하였으며, 충남 아산시(23,572명, 1.6%), 경북 경산시(18,485명, 1.2%), 제주시(17,976명, 1.2%) 등이 상위 20개 지역에 포함되었음

<표 2-8> 등록외국인 수 기준 상위 20개 기초지자체(2024년 12월 말 기준)

시도	시군구	등록외국인 수	비율
경기	화성시	51,059명	3.4%
경기	시흥시	40,493명	2.7%
경기	안산시 단원구	38,321명	2.6%
경기	평택시	32,489명	2.2%
경기	김포시	25,608명	1.7%
경남	김해시	24,727명	1.7%
서울	구로구	23,747명	1.6%
충남	아산시	23,572명	1.6%
서울	영등포구	23,400명	1.6%
서울	동대문구	19,868명	1.3%
경북	경산시	18,485명	1.2%
인천	연수구	18,098명	1.2%
제주	제주시	17,976명	1.2%
서울	관악구	17,808명	1.2%
인천	부평구	17,009명	1.1%
서울	광진구	16,689명	1.1%
경기	포천시	16,317명	1.1%
경기	안산시 상록구	15,919명	1.1%
인천	서구	15,810명	1.1%
충남	천안서 서북구	15,769명	1.1%
합계		473,164명	31.8

주) 비율은 전체 등록외국인 인구에서 각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함
 자료) 법무부,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2024.12월말 기준)

- <표 2-9>에는 2024년 기준 등록외국인 비중이 높은 상위 지자체의 비중 변화 추이(2020~2024)를 나타내었음. 본 표에는 등록외국인 규모가 큰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를 시·도 단위로 포함하였으며, 그 외 지역은 등록외국인 수가 많은 기초지자체(시·군) 순으로 표시함
- 우선, 서울특별시는 2020년 21.2%에서 2024년 17.8%로 3.3%p 감소하여, 전국 등록외국인 중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인천광역시는 같은 기간 동안 6.0% 내외의 비중을 유지하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음
- 경기도 내 주요 기초지자체를 살펴보면, 안산시·수원시 등 기존 외국인 밀집 지역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된 반면, 화성시·평택시·김포시 등 산업·주거 확장 지역에서는 비중이 소폭 증가하거나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비수도권 지역 중에서는 경상남도 김해시가 2020년 1.5%에서 2024년 1.7%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아산시와 경상북도 경산시 역시 완만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표 2-9> 등록외국인 상위 지자체의 비중 변화와 지역 분포 추이(2020~2024)

시도	시군구	2020	2021	2022	2023	2024	증감
서울특별시	-	21.2%	20.7%	20.1%	18.7%	17.8%	-3.3%p
인천광역시	-	5.9%	6.1%	6.0%	6.0%	6.0%	0.1%p
경기도	안산시	4.5%	4.3%	4.1%	3.9%	3.6%	-0.8%p
경기도	화성시	3.3%	3.2%	3.2%	3.4%	3.4%	0.1%p
경기도	시흥시	2.8%	2.9%	2.8%	2.8%	2.7%	-0.1%p
경기도	수원시	3.1%	3.0%	2.9%	2.7%	2.6%	-0.5%p
경기도	평택시	2.0%	2.2%	2.1%	2.1%	2.2%	0.2%p
경기도	김포시	1.6%	1.6%	1.7%	1.7%	1.7%	0.1%p
경상남도	김해시	1.5%	1.5%	1.5%	1.6%	1.7%	0.2%p
충청남도	아산시	1.5%	1.5%	1.5%	1.6%	1.6%	0.1%p
경기도	용인시	1.5%	1.5%	1.5%	1.4%	1.4%	-0.1%p
경상북도	경산시	0.9%	1.0%	1.0%	1.1%	1.2%	0.3%p
소계		49.8%	49.5%	48.4%	47.0%	45.9%	

주) 비율은 전체 등록외국인 인구에서 각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함. 증감은 2020년 대비 2024년 증감을 나타냄
 자료) 「출입국자및체류외국인통계」, 법무부

2 | 중앙정부의 외국인 정책 기조 변화

1)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1) 수립 배경 및 개요

□ 외국인 인구의 지속적 증가

- 외국인 체류자는 2015년 약 190만 명에서 2024년 265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법무부는 2026~2028년경 체류외국인이 3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법무부, 2024.9.26.)
- 이에 따라 단순한 체류 관리 차원을 넘어선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결혼이민자·외국인 근로자·유학생·난민·전문인력 등 체류 유형 또한 다양화되고 있음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 감소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이에 따라 노동력 부족 현상이 특히 제조업과 농축산업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음
- 이민을 통한 인구구조 보완과 국가 경쟁력 유지가 새로운 정책 대안으로 부상하였음

□ 사회통합과 갈등 예방 필요성

- 2024년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약 26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장기체류자가 204만 명에 달함. 외국인의 장기적 정주가 보편화됨에 따라 사회통합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주민 증가로 문화적 다양성이 확산되고 있으나, 동시에 사회적 편견·차별·갈등 문제도 심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내국인과 외국인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공동체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정책 분절화에 따른 비효율성 개선 필요

- 그동안 외국인 관련 정책은 여러 부처에서 각각 추진되어 왔으며, 이로 인

해 정책 간 연계 부족과 조정상의 한계가 지적되어 왔음. 이러한 정책 운영 방식은 부처별 역할 분담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정책 목표와 수단의 체계적 연계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존재함

-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통합적 계획 수립과 조정 기능의 필요성이 점차 제기되고 있음

□ 글로벌 경쟁 속 인재 확보 중요성

- 세계 각국이 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글로벌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함

□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개요

- 외국인정책은 국경·출입국 및 체류 관리, 사회통합과 국적부여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민정책을 의미함(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24)
- 정부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2007년 제정)에 근거하여 2008년부터 5년 단위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 오고 있음
-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외국인 및 이민 분야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최상위 계획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이민정책 수립에 있어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
- 특히 저출산·고령화, 산업구조 변화, 글로벌화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각 차수별로 정책 비전과 과제를 차별해 왔으며, 현재는 제4차 계획(2023~2027년)이 시행 중에 있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①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외국인정책의 추진과제, 그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
3. 필요한 자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 차수별 정책방향

-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초기의 체류 관리 중심 정책에서 출발하여, 외국인의 경제적 기여 확대와 사회 통합을 거쳐, 최근에는 국가 인구전략 및 지역발전 정책과 연계되는 전 주기적 이민정책 체계로 발전해 왔음
 - 1차(2008~2012) 체류 관리 기반 구축을 시작으로, 2차(2013~2017) 경제적 자원 활용, 3차(2018~2022) 인권·사회통합 강화를 거쳐, 4차(2023~2027) 인구·산업 전략 자원화 단계로 전환됨

▣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년)

- 시대적 배경
 - 외국인 체류자 100만명 돌파
 -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 급증
 -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의 필요성 증가
 - 외국인정책은 부처별로 분산 운영, 통합적 관점에서 정책 추진은 미흡
- 정책 방향
 - 외국인정책의 기반 마련 및 체계화 시작 및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준비
 -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사회통합 개념 도입
 - 출입국 및 체류관리 시스템 개선 중심
- 추진 과제
 - 비자 및 체류 자격제도 간소화 및 정비
 - 자동출입국심사 및 생체정보 등록 시스템 구축
 - 외국인 근로자 대상 고용허가제 정착 및 산업별 수요 대응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확대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 인식 개선 및 교육 사업 시행
- 특징
 - 외국인의 장기 정주 가능성을 고려한 정착지원정책 시도
 - 다문화가족정책과 외국인정책의 병렬적 구조를 통합적으로 접근
- 성과 및 한계점

- 외국인정책위원회 구성 및 법무부 중심 정책 총괄체계 마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국 설치 기반 마련
- 사회통합 프로그램도입(한국어 교육, 사회 이해 교육 등)
- 외국인 대상 차별, 지방정부와의 정책 연계 미흡, 사회수용성 부족 등은 여전히 한계로 지적

▣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2017년)

○ 시대적 배경

- 외국인 체류자 150만 명 이상으로 증가
- 다문화가정 학생, 노동력으로서 외국인 역할 확대
- 외국인 정책의 체계화 요구 증가
- 외국인 대상 정책을 통한 경제활성화 기대 상승

○ 정책 방향

- 경제적 기여자로서 외국인을 인식
- 외국인 관광객·유학생 유치, 창업 활성화 강조
- 사회통합정책과 지역 사회 참여 유도

○ 추진과제

- 외국인 근로자 수요에 맞춘 고용허가제 확대
-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성화 및 비자 제도 개선
- 외국인 관광객 확대를 위한 비자 완화 및 홍보 전략 추진
- 사회통합 프로그램 정비, 다문화가족 통합지원 센터 확대

○ 특징

- 외국인을 국가 성장의 자원으로 인식하고 활용 중심 정책 강화
- 경제 정책과 외국인 정책 간의 실질적인 연결 시도
- 다문화 수용성 확대보다 '경제적 가치' 중심의 프레임 우선

○ 성과 및 한계

- 외국인 유입 증가와 관광객 급증으로 지역 경제 기여
- 외국인에 대한 사회 수용성 부족 및 고용현장에서의 차별 문제 지속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

- 시대적 배경
 - 외국인 체류자 200만 명 돌파
 - 다문화사회 진입 본격화, 혐오표현과 인권 이슈 증가
 - 외국인을 단순한 경제자원이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 재인식 필요성 증가
- 정책방향
 - 인권과 다양성 존중 기반의 ‘포용적 통합’
 - 이민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 강조
 - 지방정부 역할 확대, 시민사회 협력 강화
- 추진과제
 - 사회통합 프로그램 고도화(단계별 이수제, 맞춤형 교육 확대)
 - 외국인 자녀 및 청소년 대상 교육·복지 확대
 - 지역사회 통합 거버넌스 강화 및 외국인지원센터 확대
 - 차별 및 혐오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특징
 - 포용과 인권을 핵심 가치로 설정한 전환점
 -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협업체계 정착 시작
 - 지역 사회에서 외국인이 자립적 정착 강조
- 성과 및 한계
 - 사회통합정책의 안정적 정착, 통합교육 참여 증가
 - 내외국인 간 갈등 여전히 존재, 차별금지법 부재 등 구조적 과제 지속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

- 시대적 배경
 - 초저출산(0.7명)과 초고령화, 지방소멸, 노동력 공백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 인재 유치 경쟁 심화로 외국인을 단순한 이주민이 아닌 ‘전략적 인재자원’으로 재인식

- 디지털 전환, 팬데믹 이후 국경관리 체계 재정비 필요
- 정책방향
 -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 실현
 - 지속가능한 성장, 안전한 이민사회, 사회통합, 인권존중, 정책 효율성 제고
- 추진과제
 - 고급인력 및 기술인재 대상 우대비자 도입
 - 이민청 신설 검토 및 이민행정 통합
 - 출입국관리의 디지털화(AI, 생체정보 등)
- 특징
 - 외국인 정책이 인구정책과 직접 연결된 국가 전략으로 격상
 - 기존 출입국관리 중심 행정에서 통합 이민행정으로의 대전환
 - 다문화 정책을 넘어 '상호문화사회' 구현 지향
 - 이민자 자녀 교육, 국민 수용성 제고 등 사회통합 심화
- 예상 성과 및 과제
 - 고급인재 유치로 인한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
 - 지역 공동체 지속성 유지 및 사회통합 모델 정착 기대
 - 국민 수용성 확보, 외국인 인권 보호 및 공존 기반 제도 구축 필요

<표 2-10>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차수	기간	비전 및 목표	주요정책 방향
1	2008~2012	외국인정책의 체계화 및 사회통합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인 개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질 높은 사회 통합 · 질서있는 이민행정 구현 · 외국인 인권 옹호
2	2013~2017	외국인과 함께하는 세계 일류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 통합, 인권, 안전, 협력의 가치 실현 · 질서와 안전, 이민자의 책임과 기여 강조 · 사회통합 프로그램 강화
3	2018~2022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리적 개방과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 사회통합 및 인권 보호 강화 · 선별적 이민자 유입 관리
4	2023~2027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민을 통한 경제 지역 발전 촉진 · 안정하고 질서있는 사회 구현 · 사회통합 및 인권 가치 존중 ·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이민 행정기반 구축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1~4차

2) 법무부의 출입국·이민정책 정책방향

- 2024년 9월에 발표한 법무부의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노동력 부족 등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입국·이민정책을 제시함
- 이번 정책의 비전은 “경제와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국민과 이민자의 삶에 힘이 되는 이민정책”으로 설정되었으며, 크게 네 가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 ① 고급인재 확보 ② 지역맞춤형 비자 제도화 ③ 사회통합 인프라 강화 ④ 과학적 인력관리 체계 구축이라는 4대 핵심 축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단기적 노동력 확보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인재 전략·지역 정책·사회통합·체계적 관리를 포괄하는 중장기적 이민정책으로의 전환을 지향하고 있음
- 과제 1. 우수인재 유치 트랙 다변화
 - 첨단산업(양자기술, 우주항공 등) 맞춤형 비자 신설, 패스트트랙 확대
 - 한국어 능력과 학업 성실도를 갖춘 유학생의 취업·정착 지원 강화
 - 우호국 청년교류 확대를 위한 ‘청년드림비자’ 신설, 통상협정 연계 인재 유치
 - 전문인력 배우자의 단순노무 취업 허용으로 가족 단위 안정적 정착 지원
- 과제 2. 지자체·민간 수요 반영 비자 거버넌스 운영
 - 중앙부처 독점 구조를 개선하고, 경제계·지자체의 정책 수요를 비자제도에 적극 반영
 -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광역지자체로 확대하여 맞춤형 인력 유입 가능
 -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지원기관 지정, 불법브로커 방지 및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지자체 대표 참여 법제화 추진
- 과제 3.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
 - 외국인 청소년의 학업·취업 연계 지원, 고교 졸업 후 체류자격 전환 허용
 - 입국 전 한국어·사회이해 교육 제공, 맞춤형 교재 개발, 체류·국적 인센티브 부여

- 산업안전·법질서·민주주의 가치교육 강화
- 동포(F-4)와 방문취업(H-2) 제도 통합, 동포 차별 해소 및 체류 지원 확대
-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선(책임성 강화를 위해 수강료 일부 부과, 사회통합지수 도입)
- 사회통합기금 도입 검토로 재정지원의 지속가능성 확보

○ 과제 4. 과학적·체계적 외국인력 도입시스템 구축

- 단기적 인력부족 대응에서 벗어나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고도화
- 산업별 일자리 영향·부족 규모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도입 규모 결정
- 불법체류·범죄 등 발생 시 비자요건 강화, 도입규모 축소 등 환류 체계 운영
- 재외공관 비자 심사 인프라 강화, 민간 송출기관 등록제 법제화로 불법 브로커 차단

비전	경제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과 이민자의 삶에 힘이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입국·이민정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력·우수인재 유치를 통해 잠재성장률 제고 및 지역경쟁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별 유입 및 사회통합 촉진으로 다가올 이민사회 선제적 대비
주요 정책 과제	<p>[1] 우수인재 유치 트랙 다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p-Tier" 비자, "청년 드림" 비자 신설 ✓ 유학생 졸업 후 구직·취업 연계 강화 ✓ 전문인력 배우자 단순노무 취업 허용 	<p>[3]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청소년 자립 지원 ✓ 입국 전·후 사회통합교육 강화 ✓ "사회통합기금" 신설 중장기 검토
	<p>[2] 지자체·민간 수요를 반영한 비자 거버넌스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자 제안제" 도입 ✓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 확대 ✓ 계절근로자 사업 지원 	<p>[4] 과학적·체계적인 외국인력 도입시스템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적 분석 기반 도입규모 결정 ✓ 불법체류·범죄 발생 시 환류 강화 ✓ 해외인력 도입·관리시스템 개선
주요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기능인력 5년 내 10만 명 추가 확보 ⇒ 국가 주력산업 경쟁력 확보 지역기반 비자(계절근로, 지역특화) 확대 ⇒ 지역상주인구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유입 단계별 사회통합 강화 ⇒ 갈등 최소화, 이민정책 지속가능성 확보 외국인력 선별적 도입 및 체계적 규모 관리 ⇒ 국민 일자리 침해 방지 	

자료) 법무부 보도자료(2024.9.26.)

(그림 2-3) 신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 요약도

3 | 중앙행정기관 지역 유치 사례

1) 중앙행정기관의 지역 이전 근거

▣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

- 중앙행정기관의 지역 유치 정책은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주요 목적으로 함. 특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강화되면서, 지역의 자립적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이 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자리잡았음
- 최근 중앙행정기관의 지역 유치 사례는 감염병 대응, 재정 관리, 우주 산업, 문화 진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국가 기능의 분산과 균형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흐름과 맞닿아 있음
- 이러한 기관 이전은 단순한 물리적 분산이 아니라, 지역 특성화 전략과 긴밀히 연계되어 추진되는 것이 특징임
- 또한 지방이전 공공기관은 이전 대상 지역의 산업적 기반, 사회간접자본(SOC), 전문인력 등 지역 고유의 강점을 활용하여 입지를 선택하며,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로 작동함

<표 2-11> 중앙행정기관의 지역 유치 사례

기관명	시기	유치 지역	설립 예산 규모	유치 배경 중앙 정부 연계 방식
질병 관리청	2020년	충북 오송	9,917억 원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 필요 · 「정부조직법」 개정, 보건복지부 기능 분리·권한 확대
재외 동포청	2023년	인천	약 676억 원	재외동포재단(제주)해산 → 750만 재외동포 지원 강화 목표 · 외교부 기능 이관·통합, 재외동포 기본법 개정· 연계
우주 항공청	2024년	경남 사천	약 7,598억 원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 · 과기부·산업부 기능 이관, 항우연·천문연 소관 통합
국가 유산청	2024년	대전	약 1조 3,659억원	문화유산 보호 체계 강화 · 「정부조직법」 개정,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승격·개편

▣ 중앙행정기관 입지 선정의 기능적 고려 요인

- 중앙행정기관의 입지 선정은 단순히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성격과 정책 조정 방식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책 기획·조정 기능을 중심으로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부처 간 협의와 의사결정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공간적 집적이 요구되는 반면, 집행·현장 대응 기능을 병행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정책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과의 근접성 또한 중요한 입지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함(김동욱, 2010)
- 이러한 관점에서 본 절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지역 유치 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출입국·이민관리청이 수행할 기능의 특성을 고려한 기능적 입지 적합성을 분석함

2) 신설 중앙기관 유치 사례

▣ 질병관리청 유치 사례

- 법적 기반: 정부조직법 개정 (보건복지부 소속 청 → 독립 청)
 - 질병관리청은 2020년 코로나19 대응을 계기로, 기존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를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청)으로 승격시키며 출범함
 - 2020년 9월 12일 시행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개편되었으며, 조직 규모는 5국 3관 41과, 약 1,476명 수준으로 확대됨
 - 이를 통해 감염병 예방·대응 정책을 총괄하는 독립 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정책 조정 기능이 강화됨
- 지역 연계성: 오송 바이오산업단지와 방역 인프라 연계
 - 질병관리청 청사는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음
 - 2010년 서울 은평구에서 오송으로 이전한 배경에는, 오송이 국가 차원의 바이오·의료산업 클러스터로 전략적으로 조성된 지역이라는 점이 작용함
 - 오송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보건연구원 등 보건의료 분야 주요 국책

- 기관과 260여 개 기업·연구기관이 집적되어 있어, 질병관리청과의 정책·연구 협력 및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음
- 특히 생물안전등급(BSL-3·4) 연구시설과 백신개발지원센터 등 감염병 대응 핵심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질병관리청이 국가 방역 컨트롤타워로 기능하기에 최적의 입지 조건을 확보하고 있음
 - 이러한 지역적 기반을 바탕으로 질병관리청은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과 연계한 감염병 대응 정책 및 바이오산업 연계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함
- 정치·정책적 추진 전략: 코로나19 이후 위기 대응 명분과 범정부 합의
- 질병관리청의 청 승격은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계기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범정부적 합의와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추진됨
 - 대통령이 직접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공약하고, 여야 정치권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합의함으로써 정치적 추진 동력이 확보됨
 - 정부는 2020년 6월 말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7~8월 국회 심의를 거쳐 같은 해 9월 정부조직법 개정을 확정함
 -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지역 내 중앙행정기관 위상 강화를 환영하며 행정·정책적 지원 의지를 표명하였고, 오송의 방역·바이오 인프라 강점을 지속적으로 부각함
 - 아울러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보건 분야 전담 차관 신설)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이 병행 추진되면서, 질병관리청 출범에 대한 정치권과 정책당국의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됨
- 유치경쟁
- 질병관리청은 이미 오송으로 이전해 있던 질병관리본부를 모태로 승격된 기관으로, 청사 입지를 둘러싼 별도의 지역 간 유치 경쟁은 제한적으로 나타남
 - 다만 2000년대 후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 이전 당시 일부 타 지역의 유치 관심이 있었으나, 정부는 오송 바이오산업단지를 국가 차원의 바이오·의료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전략에 따라 오송을 최종 입지로 확정함

- 2020년 청 승격 시에도 기존 방역 인프라와 전문인력이 집적된 현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정책적·행정적 효율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청사 입지를 오송으로 유지함
- 일각에서 세종시 등 타 행정도시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하였으나, 오송에 구축된 연구시설, 전문인력 집적도, 지역사회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 위치에 안착하게 됨
- 결과적으로 충청북도(청주시)는 큰 유치 경쟁 없이 질병관리청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게 됨
- 시사점: 기능 특화형 기관이 지역산업과 시너지 효과
 - 질병관리청 사례는 감염병 대응이라는 기능 특화형 중앙행정기관이 지역 산업 클러스터와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됨
 - 첨단 바이오·방역 인프라가 집적된 오송에 질병관리청을 입지 시킴으로써, 지역은 국가적·국제적 방역 거점으로 위상이 강화되었으며, 기관 역시 지역 산업과 연구인프라의 지원 속에서 전문성과 대응 역량을 제고함
 - 이는 향후 전문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지방에 신설·육성할 경우, 해당 지역의 산업 기반 및 연구인프라와 연계하는 전략이 기관과 지역의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을 시사함
 - 특히 국가 위기 대응 핵심 기관이 수도권 외 지역에 입지하더라도 안정적·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입증한 선례로서, 국가 균형발전과 기능 분산정책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 재외동포청 유치 사례

- 법적 기반 : 외교부 소속 청(정부조직법 제26조의2 신설)으로 출범
 - 재외동포청은 2023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외교부 소속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됨
 - 2023년 2월 말 국회 본회의에서 재외동포청 신설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같은 해 6월 5일 공식 출범함
 - 조직은 외교부 재외동포 관련 부서 인력과 제주에 위치하던 재외동포재단 인력(약 80여 명)을 통합하고, 법무부·교육부·병무청 등 관계 부처 파견 인력을 포함하여 약 150~200명 규모로 구성됨

- 이를 통해 전 세계 약 730만 명의 재외동포 정책을 전담하는 중앙행정조직으로 출범함
- 지역 연계성 : 인천국제공항 인접성과 재외동포 정주·교류 인프라
 - 재외동포청 본청 입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로 확정됨
 -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동시에 보유한 대한민국의 대표적 관문 도시로, 해외 동포의 접근성과 행정 편의성이 뛰어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음
 - 또한 1883년 개항 이후 국제교류의 거점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1902년 제물포항을 통해 최초의 한국인 해외 이주가 이루어진 역사적 배경을 지닌 도시로서 재외동포사와의 상징성도 큼
 - 송도국제도시는 녹색기후기금(GCF) 등 15개 국제기구와 세계은행 한국사무소가 입지한 국제업무 허브로, 글로벌 업무 수행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
 - 채드윅국제학교, 글로벌캠퍼스 등 국제 수준의 교육 인프라와 함께, 해외동포 귀환·정착을 위해 조성된 ‘아메리칸타운’ 등 동포 커뮤니티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 재외동포청 업무와의 연계성이 높음
 - 이러한 입지적 강점을 바탕으로 정부는 재외동포청 본청을 인천 송도에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포스코타워·부영타워 등 청사 공간을 확보하여 2023년 6월 개청을 추진함
 - 다만 전국 단위 민원 접근성을 고려하여 서울 광화문에 별도의 통합민원실을 설치·운영하는 이원화 방식을 도입함
- 정치·정책적 추진 전략 : 외교부 기능 통합과 지역·정치권 협력
 - 재외동포청 유치 과정에서는 인천광역시와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인천시는 재외동포청 유치를 핵심 정책 과제로 설정하고, 2023년 초 시장을 중심으로 유치 추진단을 구성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함
 - 지역 시민단체 33곳이 참여한 ‘재외동포청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가 출범하여 서명운동과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단기간 내 수천 명의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지역 여론을 결집함
 - 인천광역시장은 대통령 면담을 통해 인천 유치의 당위성을 직접 건의하였

- 고, 유럽·미국·중양아시아 등 해외 동포 단체의 지지 선언을 확보하여 전국적 공감대를 형성함
- 정치권에서도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초월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외교부 역시 입지 선정 과정에서 인천시와 긴밀히 협의함
 - 이러한 지역·정치권의 협력과 더불어, 재외동포 업무를 분산 구조에서 벗어나 ‘원스톱 통합 체계’로 구축한다는 정책적 명분이 결합되면서, 국회에서도 큰 이견 없이 법안이 통과됨
 - 결과적으로 재외동포청 사례는 중앙정부 기능 통합과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적 대응이 결합된 성공적 기관 신설 사례로 평가됨
- 유치경쟁
- 재외동포청 신설 결정 이후 인천광역시를 비롯해 광주광역시, 충남 천안시, 경기 안산시 등이 유치 경쟁에 참여함
 - 인천은 공항 접근성, 국제도시 이미지, 재외동포 역사성과 인프라를 강조하며 적극적인 유치 전략을 전개함
 - 광주광역시는 고려인 동포 지원 정책과 정착 지원 성과를 근거로 국가균형발전 논리를 제시하였고, 안산시는 대규모 다문화동포 인구 기반을 앞세워 상호문화도시로서의 적합성을 강조함
 - 충남 천안 역시 독립기념관과 망향의동산 등 재외동포 관련 상징 자산을 중심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함
 - 초기에는 서울 및 제주도도 후보지로 거론되었으나, 정부는 접근성·상징성·국제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천을 최종 입지로 결정함
 - 2023년 3월 8일 외교부 공식 발표를 통해 재외동포청 본청의 인천 설치가 확정되었으며, 인천 내부에서는 송도국제도시가 최종 입지로 선정됨
- 시사점 : 지역 인프라와 정치적 추진력이 결합된 성공 모델
- 재외동포청 유치 사례는 특정 정책 분야에 특화된 중앙행정기관이 지역의 입지적·산업적 인프라와 결합하여 성공적으로 안착한 사례로 평가됨
 - 인천 송도는 국제공항과 항만, 국제기구 집적, 글로벌 업무·정주 인프라를 갖춘 도시로서 재외동포 정책 수행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함
 - 동시에 중앙정부 차원의 기능 통합과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력이 맞물리며 기관 신설과 지역 안착이 원활히 이루어짐

- 이는 지방정부의 준비도와 정치적 지원 역량이 확보될 경우, 새로운 중앙 행정기관을 지방에 유치·정착시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함을 보여줌
- 특히 본청은 지방에 두고, 민원 기능은 서울에 병행 배치하는 이원화 운영 모델을 통해 효율성과 접근성의 균형을 도모한 점도 중요한 시사점으로 평가됨
- 종합적으로 재외동포청 사례는 ‘지역 인프라, 중앙정부 기능 통합, 강력한 지역 정치·사회적 지지’가 결합된 대표적 성공 모델로서, 향후 유사한 중앙기관 신설 및 지방 이전 논의에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됨

▣ 우주항공청 유치 사례

○ 법적 기반 : 특별법 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신설

- 우주항공청은 대한민국 우주·항공 분야의 컨트롤타워로 신설된 중앙행정기관임
- 2024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설립 근거가 마련되었고, 같은 달 법령 공포를 거쳐 2024년 5월 27일 공식 개청함
-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차관급 외청으로 출범하여, 우주항공정책국·우주항공기술연구본부·기획조정관실을 두고 있음
- 법 제정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는 우주항공청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및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 등 기존 연구기관과의 관계를 조율하는데 많은 논의를 거쳤음
- 입법 과정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소속 및 역할 조정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으며, 최종 법안에는 두 연구기관을 우주항공청 산하 직속기관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반영됨
- 이를 통해 정책 수립부터 연구개발까지를 포괄하는 전주기적 우주항공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됨

○ 지역 연계성 : 항공우주 산업 클러스터와의 결합

- 우주항공청 본청은 경상남도 사천시에 설치되었으며, 사천은 국내 항공우주 산업의 핵심 집적지로 평가됨

- 사천에는 국내 유일의 완제기 제조 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를 비롯해 다수의 항공부품 기업과 항공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음
- 정부는 “산업이 집적된 지역에 해당 분야의 정책 컨트롤타워를 설치해야 한다”는 논리 아래, 우주항공 산업 밀집지인 경남에 우주항공청을 두는 지역 제안을 수용함
- 인접한 진주시 일대에는 항공우주부품 연구단지와 시험시설이, 전남 고흥에는 나로우주센터(발사장)가 위치해 있어 제조-연구-발사 기능의 지리적 연계가 가능함
- 우주항공청은 사천시 사남면의 기존 건물을 임시청사로 활용해 개청하였으며, 향후 경남 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 사천지구(용현면 일원)에 신청사를 건립할 계획임
- 한편 항우연·천문연 본원은 당분간 대전에 존치하고, 발사 기능은 고흥에서 수행하는 등 ‘본청-연구-발사’의 삼각 거점 체계로 운영될 예정임
- 정치·정책적 추진 전략 : 산업계·지자체·국회가 연계한 입법 주도형 전략
 - 우주항공청 신설과 경남 유치는 산업계, 지방자치단체, 국회가 연계한 입법 주도형 전략을 통해 추진됨
 - 우주항공청 설립은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되었으며, 경상남도 지역의 강한 요구와 기대가 결합되어 정책 의제로 부각됨
 - 2023년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경상남도과 사천시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 활동을 전개하였고, 지역 경제계 역시 공동 대응에 나섬
 - 경남지역 상공회의소 협의회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적 활동을 진행함
 - 이러한 과정에서 ‘우주항공 산업의 컨트롤타워는 산업 현장과 인접해야 한다’는 논리와 ‘국가균형발전 실현’이라는 명분이 결합되며 여야 합의를 이끌어냄
- 유치경쟁
 - 우주항공청의 입지 선정 과정은 경남 사천을 둘러싼 찬반 논쟁과 대전 등 타 지역의 견제로 전개되었음
 - 정부안은 사천을 우주항공청 예정지로 명시하였고 이에 대해 “우주청은

우주산업 중심지에 설립한다”는 당위론이 제시되었음

- 그러나 야당을 중심으로 세종시나 대전으로의 입지를 재고하자는 의견도 나왔음. 특히 대전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과학기술 인프라가 몰려 있어 우주개발 R&D 중심지로서 장점을 주장함
-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산업 현장 중심의 정책 수행 필요성을 들어 사천 설치 방침을 유지함
- 국무총리실 산하 입지선정위원회 검토를 거쳐 2024년 2월 사천 용현면 우주항공국가산단 내 본청 부지가 최종 확정됨
- 2024년 5월 임시청사 개청을 통해 우주항공청은 공식 출범하였으며, 연구 기능의 지역 분산을 둘러싼 논의는 향후 과제로 남게 됨

○ 시사점 : 산업 밀집지 기반 전문 중앙기관 신설 모델

- 우주항공청 사례는 첨단 산업 밀집 지역에 해당 분야 전문 중앙행정기관을 신설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됨
- 정책 컨트롤타워를 산업 현장과 인접한 곳에 배치함으로써, 규제·지원·연구 연계의 속도와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음을 보여줌
- 경남 사천을 중심으로 항공제조-연구개발-발사로 이어지는 전주기 산업 생태계가 강화되는 효과도 기대됨
- 동시에 연구 인력의 지역 분산과 기능 배치에 대한 과제가 드러나, 전문 기관 신설 시 기능 배치 전략의 중요성도 함께 시사함
- 종합적으로 우주항공청 유치 사례는 지역 산업 기반 및 정치·입법 공조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을 지방에 안착시킨 성공 모델로서, 국가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을 동시에 도모한 사례로 평가됨

▣ 국가유산청 유치 사례

○ 법적 기반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문화재청 기능 분리·승격

- 국가유산청은 기존 문화재청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여 2024년 5월 새롭게 출범한 중앙행정기관임
- 본 개편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문화재 행정 전반에 ‘국가유산’ 개념을 도입하고 행정체계를 재정비한 것으로, 2023년 말 「정부조직법」

- 개정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됨
-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기존 산하기관이던 한국문화재단은 국가유산진흥원으로 개편되어 문화유산의 보존·활용 지원 기능을 전담하도록 역할이 분리됨
 - 2024년 5월 17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서 대통령은 “문화재라는 오래된 이름이 국가유산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개편이 문화유산 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임을 강조함
 - 이번 승격은 1961년 문화재관리국 출범 이후, 1999년 문화재청으로 승격된 지 25년 만에 이루어진 명칭 및 체계 개편으로, 단순한 조직 변경을 넘어 행정의 범위와 위상을 확장한 조치로 평가됨
 - 국가유산청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외청으로서 법적 지위는 종전과 동일하나, 관장 범위가 유형문화재를 넘어 무형유산·자연유산·근현대유산 등 모든 ‘국가유산’으로 확대됨

○ 지역 연계성 : : 문화유산 행정의 대전 중심 집적 구조

- 국가유산청은 본청을 대전광역시에 두고 있으며, 이는 문화재청 시절부터 유지되어 온 입지로, 이번 승격 과정에서도 변동 없이 존치됨
-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한 본청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와의 행정적 접근성이 우수하면서도, 수도권 외 지역에 위치한 중앙기관으로서 전국 문화유산을 균형 있게 관할해 온 장점을 지님
- 특히 대전·충청권에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을 비롯해 공주·부여 지역의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 문화유산 연구·교육기관이 밀집해 있어 관련 인프라와 전문 인력의 집적도가 높은 지역임
- 문화재청은 그간 서울·경기(궁능유적본부), 전주(국립무형유산원), 부산(동부지청) 등 전국 단위의 지역 조직을 운영해 왔으며, 본청이 대전에 위치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하는 중간 거점으로 기능해 왔음
- 국가유산청 개편 과정에서도 본청 소재지를 대전으로 유지한 것은, 이미 축적된 문화유산 행정 인프라와 숙련된 전문 인력이 지역에 집적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지역사회 또한 문화재청의 대전 존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승격

을 계기로 대전을 ‘국가 문화유산 행정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지역 차원의 기대와 전략이 제시됨

- 결과적으로 국가유산청은 대전을 기반으로 전국 문화유산 정책을 총괄하는 동시에, 지역 간 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도모하는 중앙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정치·정책적 추진 전략 : 문화계와 지역 정치권의 연대 및 기능 독립 강조

- 국가유산청 출범은 문화유산 분야 전문가 집단과 지역 정치권의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추진됨
- 문화재 관련 학계와 전문 단체는 오래전부터 “문화재 행정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유산(Heritage)’ 개념으로 확장하고, 행정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해 왔으며, 이는 2022년 대선 공약을 통해 정책화됨
- 문화재청장을 역임한 최웅천 청장 등 문화유산계 인사들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청 승격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였으며, 그 논거로 △기존 ‘문화재’ 용어의 개념적 한계, △무형·자연·근현대 유산을 포괄하는 행정체계 필요성,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전문 행정기관의 위상 강화 등을 제시함
- 지역 정치권 역시 대전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국가유산청 승격을 지지하며, 관련 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냄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서 명칭 변경과 조직 개편이 비교적 큰 이견 없이 통과된 것은 문화유산 행정 강화 필요성에 대한 정치권 전반의 공감대를 반영한 결과임
- 대전시는 출범 행사 지원, 청사 간판 교체 등 행정적·상징적 준비를 선제적으로 추진하였고, 충청권 국회의원들도 이를 지역 발전과 연계해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함
- 이처럼 국가유산청의 출범은 중앙정부의 정책 의지, 문화계의 전문적 제언, 지역 정치권의 지지가 결합된 결과로 평가됨

○ 유치경쟁 : 기존 기관 승격에 따른 자연스러운 안착

- 국가유산청은 기존 문화재청을 모태로 한 조직 개편 사례로, 본청 소재지를 둘러싼 새로운 지역 간 유치 경쟁은 사실상 발생하지 않음

- 문화재청은 1990년대 후반 정부대전청사로 이전한 이후 지속적으로 대전에 위치해 왔으며, 이번 승격 역시 해당 입지를 전제로 추진됨
- 일부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하였으나, 이는 주로 수도권 소재 기관을 대상으로 한 논의였으며, 이미 비수도권에 위치한 문화재청에는 적용되지 않음
- 다만 기능 확대에 따라 일부 조직은 전국 거점화 전략에 따라 분산 배치되었는데, 2013년 전주에 국립무형유산원이 설립되고, 경주 등지에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지방 분원이 설치된 사례가 이에 해당함
- 이러한 분산은 본청 이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전사·전수 기능을 지역 자원과 연계하기 위한 전략적 배치로 해석됨
- 대전시는 문화재청의 지속적 존치를 주요 지역 현안으로 관리해 왔으며, 이번 국가유산청 승격을 통해 해당 기관을 지역 정체성의 핵심 요소로 공고히 하는 성과를 거둠
- 특히 2022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승격·책임운영기관화되면서 연구 인력 확충과 시설 투자가 이루어졌고, 이는 대전 지역의 전문 일자리 창출로 직결됨

○ 시사점 : 기존 기능 분화와 지역 기반 전문행정의 모범 사례

- 국가유산청 사례는 기존 중앙기관의 기능을 분화·확대하여 지역 기반의 전문 행정체제로 발전시킨 대표적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음
- 문화재청에서 국가유산청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문화유산 행정의 범위와 철학을 확장한 정책적 전환을 의미함
- 이는 중앙정부가 전문성 제고와 국제 기준 부합을 위해 조직을 개편하면서, 수도권 이전이 아닌 기존 지역 거점(대전)을 적극 활용했다는 점에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임
- 대전에 위치한 국가유산청은 지역 내 전문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충청·호남권의 풍부한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하여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추
- 또한 산하기관인 국가유산진흥원을 통해 보존 행정과 활용·교육 사업을 분리한 것은, 행정 전문성과 사업 추진력을 이원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한

조직 설계로 평가됨

- 본 사례는 기존 조직을 시대 변화에 맞게 개편하면서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킴으로써, 중앙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이 큼

<표 2-12> 최근 정부 신설·승격 청(廳) 조직의 설치 기반 및 유치전략 비교

구분	질병관리청	재외동포청	우주항공청	국가유산청
법적 기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질본 → 차관급 독립 청 승격 (2020.9.12시행)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외교부 산하 차관급 청 신설 ·외교부 조직·재외동포재단 등 기능 통합 (신설, 2023.6 출범)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2024.1 통과)	·정부조직법 개정 + 「국가유산기본법」 시행(2024.5 출범) ·문화재청 조직·명칭 개편(진흥원 분리)
지역 연계성	·오송 생명과학단지 내 위치 ·식약처·국립보건원 등 보건으로 국책 기관·기업 집적	·인천 송도국제도시 본청 ·인천공항·항만 접근성, 국제기구 밀집, 동포 커뮤니티(아메리칸타운)	·경남 사천 본청 ·KAI·항공국가산단 집적) ·인근 진주 R&D, 고흥 나로우주 센터와 제조~발사 공간 연계	·대전 정부청사 본청 (중전 유치)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등 관련 기관·인력 집적, 전국 거점 조직 연계
정치·정책적 추진 전략	·코로나19 위기 대응 명분으로 범정부 합의 ·대통령 공약·여야 합의로 신속 입법 ·복지부 2차관제, 국립감염병연구소 동시 추진	·인천시 유치 추진단 + 범시민운동본부 (서명·여론) ·지역 국회의원 여야 공조, 외교부와 긴밀 협의 ·서울 광화문 통합민원실 병행 운영	·대통령 공약 → 산·학·연·관 입법 ·경남도·사천시·경제계 총력전, 국회 합의로 특별법 통과	·문화계 제언, 지역 정치권 공감대 형성 ·‘문화재 → 국가유산’ 패러다임 전환을 여야 합의로 추진
유치 경쟁	·승격 전부터 오송 이전 완료 → 별도 경쟁 미미 ·세종 이전 가능성 거론됐으나 현 위치 유지	·인천·광주·천안·안산 등 경쟁 ·정부가 인천 최종 결정	·사천 vs (대전·세종 등) 논쟁 ·연구본원 대전 잔류, 본청 사천 확정 (임시청사→국가산단 신축)	·본청 위치는 경쟁 거의(대전 존치) ·일부 기능은 전국 거점화(전주·경주 등)
시사점	·기능 특화형 기관× 지역 산업클러스터 시너지 ·수도권 외 지역에 컨트롤타워 안착 가능 선례	·입지 인프라 + 기능 통합 + 지역 정지력 결합 모델 ·본청(인천) + 서울 민원의 이원화 운영 선례	·산업 밀집지 기반 전문기관 신설 모델 ·현장 밀착형 정책집행 가능... 다만 기능 배치 조율 과제	·기존 기능 분화·전문화 강화 ·수도권 외 거점 활용을 통한 균형·효율 동시 달성

4 | 국내 출입국·이민정책 기구 유치 전략 분석

1) 출입국·이민정책 기구 신설 추진현황

- 국내 외국인 인구가 200만 명을 돌파하며(전체 인구의 약 4%), 노동·교육·복지·지역사회 통합을 포함한 종합적 이민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증가함
- 현행 체계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 중심의 기능 분산, 부처 간 조정 부족,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정책 수요 급증에 대응 기구의 필요성이 높아짐
- 이에 따라 2022년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출범을 시작으로 독립적인 ‘출입국·이민정책 전담기구’ 설립 논의가 본격화되어 현재까지 논의되었으나, 지난 9월 현 정부 조직개편안에서 ‘이민전담기구’가 제외되어 향후 지역별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임

<표 2-13> 출입국·이민정책 전담기구 신설 논의의 추진 경과

연도	주요 내용
2022년~2023년	① 법무부 ‘출입국·이민정책체계 개선추진단’ 출범 「이민정책청」 설립 계획 공식 발표 → 법무부 외청 형태 이민청 설립 논의 ▶ 경기도 고양·안산, 충남·충북, 경북·전남 등 지자체 유치 경쟁 본격화 ②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형태로 이민청 신설안 의원발의 → 국회 제출
2023년 12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확정 (출입국·이민정책청-전담기구 신설 포함)
2023년~2024년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관련 법안 폐기 각 지자체 이민청 설치 논의 축소개별 유치 활동 축소
2025.7~8.	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이민처」 신설 법안 심의 및 전체회의 회부 → 정부세종청사 설치 가능성 제기 ② ‘새 정부 이민정책 방향과 과제’ 포럼 개최 → 정부 조직개편과 연계한 이민 전담기구 설치 논의 재점화
2025. 9.~현재	① 법무부 9월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 → 광역형 비자 도입 및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추진 ② 정부 조직개편안서 제외된 ‘이민전담 기구’
향후	각 지역별 이민 전담기구 필요성 재검토 및 지역적 유치 활동 결정 (세종 vs 지방 거점, 특히 경기도)

2) 출입국·이민정책 기구 전국 유치 현황

▣ 이민정책 기구 유치 재점화

○ 이민정책 기구 지방 정부 ‘유치경쟁’ 본격화

- 외국인 증가와 인구정책의 높은 연계성으로 출입국·이민관리청의 설치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정부와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법적 근거 마련이나 가이드 미비로 지자체 간 과열 경쟁이 발생함

<표 2-14> 출입국·이민정책 기구 전국 유치 현황

지자체	추진 시기	외국인 주민수 (2023.11기준)	주요 근거	추진 현황
경기 안산	'23~	108,033명 (전국 1위)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밀집도 전국 1위 · 다문화마을특구 · 105개국 대사관 협력 · 외국인 정책 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최초 전담조직 마련 · 법무부·대사관 유치 제안서 전달 및 건의 ·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안 국회 및 중앙 정부 전달 · 유치 TF 구성 · 범시민추진위원회 구성 · 유치 서명운동 20만명 돌파 · 유치 타당성 분석 연구(경기연구원)
경기 김포	'23~	37,660명 (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관문 역할 · 외국인 유입 증가 ·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장 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 유치 의사 전달 · 유치 TF구성 · 법무부·국민통합위원회 유치 제안서 제출 · 이주배경청소년 가족 지지선언 · 이민청 유치 전략·효과 연구용역(서울대 산학협력단) · 이민정책포럼 개최
경기 고양	'23~	35,248명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북부 외국인 집중 · 광역 교통망(GTX-A, KTX 행신역, 경의중앙선, 3호선 등) · 편리한 생활환경과 외국인 포용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민청 유치 선언 · 전담팀(TF)구성 · 범시민 서명운동 전개 · 자매결연도시 대상 유치 지지 서한문 발송 · 고양이민자통합센터 등 전문기관과 협력 · 민관협력 실무협의체 구성 · 청사 후보지 검토(킨텍스·원당·창릉 등) · 31개 외국인 친화 정책 시행 · 경제자유구역 및 글로벌 도시 정책과 연계

지자체	추진 시기	외국인 주민수 (2023.11기준)	주요 근거	추진 현황
인천	'24~	160,859명 (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동포청과의 연계 · 공항·항만 등 국제 관문 · 이민정책 시행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민청 유치 의사 공식 표명 · 재외동포청과의 협력 모델 검토 · 송도·청라 등 국제도시와 연계한 청사 후보지 검토 · 외국인주민·전문가 간담회 개최 · 정책 동향 및 시사점 연구(인천연구원) · 대시민 홍보 및 공감대 형성 시도(범시민 추진위, 서명운동 등 미실시)
충남 (천안·아산)	'23~	천안 40,443명 (10.7%), 아산 22,800명 (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수도권 최대 외국인 거주 · 제조업 기반 · KTX 등 교통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지사 공식 유치 선언 · 유치 TF(4개반 8개 부서장, 4개 유관기관) 및 킥오프 회의 · 천안·아산역 일대 청사 후보지 선정 및 전략 연구(충남연구원) · 시·군과 공동 유치활동 · 아산·천안시장의 공식 지지선언 · 외국인주민·노동자 지원정책 강화 · 인구전략국 외국인정책과 신설 · 범시민 유치위원회 구성 준비
전라남도	'23~	48,214명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증가율 전국 1위 (2018~2023) · 청년 인구 유출, 고령화, 등 지역소멸 위기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민청 유치 공식 선언 · 법무부 토론회·11월 국회 정책 세미나 등 개최 · 전국 최초 인구청년이민국 신설 · 이민청 유치 전략 연구용역(동국대 산학협력단) · '24년 지방소멸극복 원년 선포 및 이민·외국인정책 기반 구축에 10억 원 추경 반영 ·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설치(입국~정착 원스톱 지원) · 광역비자제도 도입 건의, 시군 협력 강화
경상북도	'23~	52,817명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최초 경북형 이민 정책 발표 · 지방소멸 위기 대응 · 외국인 유입 통한 경제 활성화 · 김천혁신도시 법무부 산하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공동체과 신설 · 경북형 이민정책 마스터플랜 발표 · 이민청 유치 전략 연구용역(경북연구원) · 이민정책위원회 출범 · 시군별 외국인 지원센터·글로벌당 운영 · 김천시 TF 구성 및 타당성 연구용역(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 혁신도시 법무부 산하기관과 협력 · 범시민추진위·서명운동 추진 · 도·시군 공조 유치전 전개

지자체	추진 시기	외국인 주민수 (2023.11기준)	주요 근거	추진 현황
부산	'24~	89,933명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남권 산업·물류 중심지 · 국제도시 인프라 · 외국인 유입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민청 부산유치 시민추진위원회 발족 · 시민추진위의 이민청 유치 홍보 및 공론화 · 시민단체 및 일부 시의원 중심 유치 촉구 · 부산형 유학생 유치지원 TF 출범 ·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착지원 정책 강화 ·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후 이민청 유치 공식화 방침
경상남도	'24~	150,643명 (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주민 수 전국 5위 · 최근 1년간 증가율 17% · 제조업·농업 중심 외국인 노동력의 높은 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인력·정착담당 신설 · 경남 외국인력 10만 플러스+ 정책 발표 · 창원·김해·양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립 · 산업별 맞춤형 비자제도·지역특화형 비자 도입 건의 · 우주항공·조선 등 주력산업 비자쿼터 확대 · 김해시 외국인 근로자 공공기숙사 건립·정착지원 강화 · 외국인 아동 보육료·교육비 지원 등 생애주기별 지원 · 맘프축제 등 문화다양성 증진 · 법무부 신 출입국·이민정책에 경남형 정책 다수 반영(광역비자, 지역특화비자 등)

3) 출입국·이민정책 기구 유치 전략 연구 동향

▣ 경기도 외국인 전담기구 유치 당위성 및 사회적 효과 분석²⁾

○ 경기도 유치 필요성 및 배경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외국인의 역할과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 2023년 10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496,092명이며, 이 중 경기도는 425,629명(약 17%)으로 전국 최대 규모임
- 법무부·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등으로 외국인 정책 기능이 분산되어 있어,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통합 전담기구 설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2) 라휘문 외(2024)를 참조하여 재구성

○ 경기도 유치 당위성 분석

- (행정편의성) 법무부가 경기도에 위치하여 전담기구 설치 시 부처 간 협의 등 행정적 연계가 용이함
- (교통편의성) 인천국제공항·김포공항·인천항 등 핵심 관문과 인접해 해외 입국자 접근성이 우수함
 - 국제 여객 접근성이 높은 지역으로, 외국인의 이동·접근 편의성이 큼
- (정책인프라) 전국 출입국·외국인 관련 기관 45개 중 7개 경기도에 위치함
 - 외국인 관련 교육 및 지원 기관, 민간단체 등 시민사회 네트워크 확보함
- (정책수요) 경기도는 등록외국인 약 17%(425,629명)를 차지하는 최대 거주 지역으로, 외국인 정책 수요가 매우 큼
- (정책적 지원)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외국인정책과’라는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적극적으로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경기도 내 시·군(안산, 김포, 화성, 광명, 동두천, 고양 등) 또한 외국인 전담기구 유치를 위해 적극적 지원 의지 표명함

○ 외국인 전담기구 유치 경제적·사회적 효과 분석

- 설립 대안 별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

<표 2-15> 경기도의 외국인 전담기구 설립 대안별 경제적 효과

설립방안	생산유발 효과(억원)	부가가치유발 효과(억원)	취업유발 효과(명/10억원)
제1안 법무부 중심	1,822	1,219	1,477
제2안 이주민 주요 기능 포함	3,529	2,402	2,872
제3안 이주민 기능 모두 포함	5,152	3,530	4,198

자료) 라휘문 외(2024)

○ 경기지역 내 유치 전략 및 인센티브 제공 방안

- 유치희망 시·군 중 후보지 선정 기준
 - 정책 수요: 지역 내 외국인 인구수 및 관련 정책 수요
 - 행정 편의성: 법무부와 근접성 등 업무 협력 편리성
 - 정책적 지원: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 및 전담부서 설치 여부

- 정책 인프라: 관련 기관, 지원시설 등 구축 여부
- 지역사회 파급효과: 경제적·사회적 시너지 효과
- 인센티브 전략
 - 부지 지원: 전담기구 설치 부지 제공 및 적극 지원
 - 교통 접근성 개선: 대중교통 시스템 개편·지원으로 접근 용이성 확보
 - 거주 및 편의시설 제공: 전담기구 직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숙소 및 업무 편의 시설 제공

▣ 경상남도 외국인 전담기구 유치 당위성 및 사회적 효과 분석³⁾

○ 경상남도 유치 필요성 및 배경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생산가능인구 급격한 축소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2023년 3월 기준 경남의 등록외국인 수는 약 93,606명으로 전국 3위 규모임
- 최근 2년간 외국인 수가 약 49.6% 증가하는 등 외국인 인력 유입 및 이민정책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 경상남도 유치 당위성 분석

- (정책수요) 등록외국인 수 전국 3위로 비수도권 지역 중 산업인력(E-7, E-8, E-9 등) 집중도가 가장 높음
 -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 (교통편의성) 김해국제공항과 가덕신공항(예정), KTX 등 우수한 교통 접근성을 갖추고 있어 국내외 이동 편리함
 - 외국인의 접근성 확보를 통한 효율적인 이민정책 추진 가능
- (정책인프라) 전국 출입국·외국인 관련 기관 45개 중 5개 기관이 경남에 위치하고있어 관련 정책의 협력과 연계효과 기대됨
 - 경남지역 내 민간 지원센터와 시민사회단체가 다수 활동 중으로 지역 사회와의 협력적 정책 운영 가능함
- (문화적 수용성) 김해시의 국제결혼 역사, 창원시의 맘프축제(MAMF) 개

3) 장연주·정창용(2024)을 참조하여 재구성

최 등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이해와 포용성이 뛰어남

- (정책적 지원) 경상남도는 2024년 외국인력 전담팀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정책 강화됨
 - 지역 산업 및 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친화 정책과 비자제도를 적극 추진 중에 있음

○ 외국인 전담기구 유치 경제적·사회적 효과 분석

- 설립 대안 별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

<표 2-16> 경상남도의 외국인 전담기구 설립 대안별 경제적 효과

설립방안	생산유발 효과(백만원)	부가가치유발 효과(백만원)	취업유발 효과(명)
제1안 법무부+다부처 외국인 관련인력	495,194	361,994	4,386
제2안 법무부+여가부+고용부	302,884	220,533	2,687

자료) 장연주·정창용(2024)

○ 유치 전략

- 전담조직 체계 정비
 - 외국인 정책을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여 전문성과 업무 효율성 제고
 - 조직적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이민정책 수립과 실행을 체계적으로 지원
- 특화된 지역 정책
 - 지역 산업 구조와 외국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친화 정책과 비자제도 적극 도입
 -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특화사업 발굴 및 지원 강화
- 지역사회 협력 강화
 - 경남 내 외국인 지원센터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 지역사회 내 문화적 수용성 및 사회적 통합 증진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와 커뮤니티 지원
- 편의시설 및 주거 지원
 - 외국인 전담기구 직원 및 외국인들의 거주와 근무 환경 최적화를 위한 편

의 시설 확충

- 안정적인 정착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및 실행

▣ 청주시 외국인 전담기구 유치 당위성 및 사회적 효과 분석⁴⁾

○ 청주시 유치 필요성 및 배경

- 인구 감소 및 생산연령인구 축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험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 인구 증가에 따라 통합적 이민정책 수립 및 전담기구 신설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 지역 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하여 청주시의 전략적 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다수 지자체의 유치 경쟁 상황에서 청주시의 차별화 전략 도출이 요구됨

○ 청주시 유치 당위성 분석

- (행정 편의성) 법무부 산하 청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위치해 있어 전담기구 설치 시 업무협약이 용이함
- (교통 편의성) KTX 오송역 및 청주국제공항을 기반으로 전국·국제 접근성이 우수함
- 국토 중앙부 입지를 바탕으로 주요 도시와의 연계성이 높아 인력 이동 및 업무 효율성이 큼
- (정책 인프라) 가족센터,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 다문화 지원기관 등 관련 조직과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음
-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효율적 정책 집행 및 지원체계 구축이 가능함
- (정책 수요) 외국인 인구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이민정책 수요가 존재함
-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와 결합되어 외국인력 관련 정책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정책적 지원) 청주시·충청북도는 전담부서 신설을 계획하는 등 추진 의지가 강함
- 시민사회·정치권 등 이해관계자의 지지 및 협력 의사가 확인됨

4) 조은정 외(2024)를 참조하여 재구성

○ 외국인 전담기구 유치 경제적·사회적 효과 분석

- 설립 대안 별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

<표 2-17> 청주시의 전담기구 유치의 경제적 효과

구분	생산유발 효과(억원)	부가가치유발 효과(억원)	취업유발 효과(명)
전국	435.0	145.2	287
충북(청주)	242.4	88.8	196

자료) 조은정 외(2024)

○ 유치 전략

- 전담조직 신설 및 행정적 지원 강화
 - 외국인 정책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전문적 관리체계 구축
 - 출입국·이민관리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
- 지역 맞춤형 외국인 지원정책 확대
 - 통번역 서비스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정을 위한 생활상담, 취업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 민관협력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시민사회,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문화 사회통합 사업 추진
 - 외국인 주민과 지역주민 간의 화합을 위한 문화교류 행사 정기 개최
- 우수한 정주환경 활용 및 편의시설 제공
 - 공공주택 공급확대 및 주거 편의시설 제공
 - 교육·의료시설 접근성 개선 및 이용 편의성 증대
 - 외국인 주민을 위한 문화·여가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및 지원

■ 인천 외국인 전담기구 유치 당위성 및 사회적 효과 분석⁵⁾

○ 인천 유치 필요성 및 배경

5) 김수한 외(2023)을 참조하여 재구성

-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보유한 출입국·이민업무의 핵심 관문도시로 기능하고 있음
- 국내 유일 경제자유구역(FEZ) 및 다문화 거점도시로서 재외동포·외국인 관련 행정 수요가 지속 확대되고 있음
- 법무부의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신설 논의와 연계하여, 재외동포청 등 외국인 관련 전담기구 유치 필요성이 제기됨
- 수도권 내에서도 출입국·체류·정착 등 복합 행정서비스 제공 기반을 다수 확보하고 있음

○ 인천 유치 당위성 분석

- (행정 편의성)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외국인보호소, 공항출입국사무소 등 관련 기관이 집적되어 통합 행정체제 구축에 유리함
- (교통 편의성) 인천국제공항·인천항 등 세계적 교통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외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접근성이 매우 높음
- (정책 인프라) 인천경제자유구역, 외국교육기관, 투자·정착지원기관 등 정책 기반이 비교적 풍부함
- (정책 수요) 인천 내 외국인 주민이 10만 명 이상 수준으로 정책 수요가 높은 편임
- (정책적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재외동포지원담당관 운영 등 외국인 지원정책을 추진 중이며 전담조직 신설도 준비 중임

○ 외국인 전담기구 유치 경제적·사회적 효과 분석

- 설립 대안 별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

<표 2-18> 인천의 외국인 전담기구 유치의 경제적 효과

구분	생산유발 효과(억원)	부가가치유발 효과(억원)	취업유발 효과(명)
전국	1,328.0	739.4	1,374
인천	968.0	586.8	1,109

자료) 김수한 외(2023)

○ 유치 전략 및 인센티브 제공 방안

- 외국인·재외동포 행정 통합 전담조직 신설
 - 재외동포 및 외국인 정책을 총괄할 전담부서 및 기관 조직 신설로 정책

일관성 강화

- 관련 기관 간 업무 효율성 제고 및 협업 체계 구축
- 정주지원 및 민원 편의시설 확충
 -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주거, 교육, 의료, 문화 인프라 확충을 통한 재외동포 정착 유도
 - 다국어 민원 서비스, 이민·귀환 관련 전담 창구 운영 확대
- 민간 및 국제기구 연계 강화
 - 국제기구,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재외동포 정책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국제행사 유치 및 글로벌 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
- 인센티브 전략
 - 전담기구 입지에 따른 부지 무상제공, 행정지원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입주인력 주거단지 및 국제학교, 문화공간 등 복합단지 조성

<표 2-19> 지역별 출입국·이민정책 기구 유치 여건 및 특성 비교

항목	경기도	경상남도	청주시	인천
등록외국인 수 (비중)	425,629명 (17%, 전국 1위)	93,606명 (전국 3위)	증가 추세 (정확 수 미제시)	약 10만 명 이상
정책수요 특성	정책 수요 최대, 대규모 외국인 거주	산업인력 집중, 급증세 (2년간 49.6% ↑)	제조업 중심 구조, 정책 수요 증가	다문화 거점, 재외동포 수요 큼
행정편의성	법무부 위치, 협업 용이	출입국기관 5개, 민간지원 풍부	청주출입국사무소 보유	인천출입국청·공항사무소 등 다수 존재
교통접근성	인천공항, 김포공항, 인천항 근접	김해공항, 가덕신공항(예정), KTX	오송역, 청주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문화적 수용성	민간단체·지원기관 풍부	다문화축제(MAMF), 국제결혼 등 기반	시민사회, 정치권 협력	경제자유구역·국제학교 등 국제성 높음
정책인프라	출입국 관련 기관 7개, 전담부서 존재	기관 5개, 외국인 전담팀 신설('24년)	가족센터, 주민지원센터 등 풍부	정주·정책 인프라 매우 강력
경제적 효과 (생산유발)	최대 5,152억원	최대 4,951억원	청주 242.4억원	인천 968억원
취업유발 효과	최대 4,198명	최대 4,386명	청주 196명	인천 1,109명
유치 전략	정책 수요 기반 후보지 선정 및 부지·교통 인프라 제공	특화 정책, 지역협력, 편의시설 강화	생활지원·문화행사 중심의 사회통합 전략	글로벌 네트워크 연계, 정주·행정 통합 강조

주) 본 표는 앞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지자체별 출입국·이민정책 기구 유치 여건을 정책 수요, 행정·교통 접근성, 정책 인프라 및 유치 전략 등을 비교·정리한 것임

자료) 김수현(2023), 라후문 외(2024), 장연주 외(2024), 조은정 외(2024)를 참조하여 재구성

5 | 시사점

1) 중앙행정기관 지역 유치 성공 사례에서 주는 시사점

- ‘법적근거’와 ‘조직격상’이 핵심 승부처
 - 질병관리청·우주항공청·국가유산청 등은 모두 「정부조직법」 개정 등 법·제도 기반을 선형 확보한 뒤 기능을 분리·승격하여 출범함
 - 지역 유치는 정치적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입법 패키지(조직·권한·이관·재정)를 동반할 때 성사 및 안착 가능성이 높아짐. 이는 초기 예산 확보와 정원 확대를 견인하는 핵심 요인임
- 지역 특화성과의 정합성이 입지 선정의 우선순위
 - ‘오송(바이오 클러스터) - 질병관리청’, ‘사천(KAI·항공우주 밸리) - 우주항공청’, ‘인천(공항·항만·재외동포 네트워크) - 재외동포 관련 기능’처럼 기관의 핵심 기능이 지역 산업·인프라와 결합될 때 입지 타당성이 극대화됨
 - 즉, ‘특화 기능’과 ‘지역 생태계 시너지’가 입지 논거에서 최우선 가치로 작동함
- ‘중앙-지방-산업계-시민사회’의 연합 거버넌스
 - 국회 입법, 중앙부처 기능 이관, 지자체 TF·범시민 추진체, 서명운동, 산업계·학계·전문기관의 공동행동 등 다층적 연합 구조가 유치에 영향을 미침
 - 단일 주체의 대응보다 정치·사회적 연합 설계가 중요함
- 정책 명분은 ‘시대 과제·위기 인식’과 직접 연결될 때 강화
 - 코로나19 이후 방역 컨트롤타워 강화(질병관리청), 국가 신산업 도약(우주항공청), 문화유산 보호체계 확장(국가유산청)처럼 국가 어젠다와 직결된 명분이 조직 신설·승격의 동력으로 작용함
 - 출입국·이민행정 기구 역시 초저출산·지방소멸·노동력 공백 대응이라는 국가전략 과제로서 명분을 전면화할 필요가 있음
- 단계별 로드맵과 예산·정원 증액의 ‘시퀀스’ 설계가 공통 패턴
 - 후보지 제시 → 법안·부처 간 합의 → 조직 신설(또는 승격) → 예산·정원 단계적 증액 → 기능 고도화·네트워크 확장으로 이어지는 순차적 추진 구조가 반복적으로 확인됨
 - 특히 초기 단계에서 ‘증액 가능 구조(정원·예산·권한 확대 경로)’를 설계하

는 것이 중요함

- 즉시 가동성(ready-to-run)을 입증하는 ‘원스톱 패키지’ 제시가 유리
 - 유관기관·전문인력 집적(대전의 문화유산 인프라, 인천의 출입국·공항 조직 등), 부지·청사·교통 접근성, 정주환경을 패키지 형태로 제시한 사례가 상대적으로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함
 - ‘설립 즉시 업무 개시가 가능한가’가 평가의 실질 기준으로 작동함
- 경제·고용 파급효과의 정량화와 비교가능성이 설득력을 강화
 - 생산유발·부가가치·고용유발 등 사전 타당성 분석을 통해 투입 대비 효과를 수치로 제시하고, 타 후보지와 동일 기준으로 비교한 접근이 높은 설득력을 확보함
-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의 균형 논리
 - 인천처럼 국제 관문성과 행정효율이 강점인 곳은 수도권 과밀·형평성 논쟁을 해소할 보완논리를 병행했음. 신설·승격 기관이라도 균형발전 프레임과의 정합성 설계가 필요함
- 디지털 행정·통합 이민행정 ‘선도 약속’을 명분과 결합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의 이민행정 통합 및 디지털 전환 방향과 유치 명분을 연계하면, 정책 일관성과 미래지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음
- 지역 제안서의 핵심 구성 체크리스트
 - 기능-입지 정합성(산업·인구·정주 데이터)
 - 법·제도 로드맵(조직법·이관안·권한구조)
 - 예산·정원 계획(단계별 증액 시나리오)
 - 즉시 가동 인프라(청사·인력·민원·통번역·IT)
 - 균형발전·국민수용성 확보 방안(갈등관리·분산효과)
 - 민관학 네트워크·국제연계(공항·항만·국제학교 등)

2) 타지역의 출입국·이민정책 기구 유치 전략에서 주는 시사점

□ 종합 비교

○ 경기도

- 경기도는 등록외국인 수가 약 42만 5천 명으로 전국의 약 17%를 차지하는 최대 외국인 거주 지역으로, 정책 수요 측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지역임
- 법무부가 위치해 있어 행정 협업에 유리하며, 인천국제공항 및 항만과의 연계성이 뛰어나 외국인의 접근성 또한 우수함
- 외국인 관련 기관 다수가 이미 집적되어 있고, 도 차원의 전담조직 및 정책 지원도 비교적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
-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 전담기구 유치 시 생산유발효과는 최대 5,152억 원, 고용유발효과는 약 4천 명 수준으로 예측되어 수도권 내 유치 최적지로 평가됨

○ 경상남도

- 경상남도는 비수도권 지역 중 외국인 근로자 집중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최근 2년간 외국인 증가율이 약 50%에 달하는 등 정책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
- 김해국제공항, KTX, 향후 가덕신공항 등 교통 인프라 확장성과 함께, 다문화 교류 기반과 산업 연계성이 풍부한 지역적 특성을 지님
- 경상남도 차원에서도 외국인력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비자 및 지원제도를 추진 중임
- 경제적 효과 분석에 따르면 생산유발 효과는 약 4,951억 원, 고용유발 효과는 4,386명으로 나타나 수도권 외 지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파급효과가 기대됨

○ 청주시

- 청주시는 충북의 중심도시로서 지역 균형발전 관점에서 유치 필요성이 제기됨
- 청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포함한 관련 행정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으며, KTX 오송역과 청주국제공항을 통한 전국 단위 접근성도 우수함
-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정책 기반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지역 정치권 및 시민사회의 유치 의지도 높은 편임

- 다만,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 242억 원, 고용유발 196명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아, 외국인 규모와 정책 파급력 측면에서는 수도권 및 경상남도 대비 한계가 존재함

○ 인천시

-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보유한 국가 출입국의 핵심 관문이자, 국내 유일의 경제자유구역을 갖춘 도시로 외국인·재외동포 정책의 전략적 거점으로 평가됨
- 출입국 관련 정부기관이 집중되어 있고, 다문화 관련 정책과 조직 운영 경험도 풍부하여 통합형 이민행정 시스템 구축에 유리한 여건을 보유함
- 유치 시 생산유발효과는 약 664억 원, 고용유발효과는 2,706명 수준으로 분석되었으며, 민간 및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통한 글로벌 정책 네트워크 확장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음
- 다만 수도권 과밀 해소 및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정부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 확보가 주요 과제로 지적됨

○ 종합분석

- 수도권 중심의 정책 효율성과 단기적 파급력을 고려할 경우 경기도와 인천시가 행정·정책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며, 비수도권의 정책 수요와 산업 연계성, 균형발전 관점을 고려할 때 경상남도의 유치 필요성이 매우 높게 평가됨
- 특히 경상남도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 증가, 산업 기반과 결합된 정책 수요, 다문화 수용성과 지역 정착 기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유치 당위성과 효과성이 비교적 명확하게 입증되고 있음
- 청주시는 중부권 전략 거점으로서 잠재력은 있으나, 타 지역 대비 정책 수요 및 파급력은 다소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됨

■ 시사점

- 특히 외국인 전담기구의 입지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 균형발전의 관점은 중요한 평가 요소 중 하나로 볼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경상남도와 청주시는 수도권에 편중된 행정기능을 분산시킬

수 있는 전략적 거점으로서 의미가 큼

- 경상남도는 남부권 산업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청주시는 중부권 내 교통 및 행정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갖추고 있어, 수도권 집중 해소 및 지역 간 균형 있는 정책 집행을 위한 주요 후보지로 평가됨
- 정책수요 측면에서는 경기도와 경상남도가 가장 높은 유치 타당성을 보임. 경기도는 등록외국인 수 전국 1위로, 이미 다양한 다문화·이민 관련 정책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경상남도 또한 최근 외국인 인력의 급격한 증가와 산업 현장의 수요 증가로 인해 정책적 대응과 지원 필요성이 매우 큰 지역으로 나타남
- 행정 협업성과 국제적 접근성 측면에서는 인천이 가장 강한 입지 요건을 갖춘 지역임.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네트워크 중심지로서의 위치는 외국인 입국·체류·정착에 관련된 전 주기적 행정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기에 매우 적합한 조건을 제공함
- 다만, 기존 수도권 과밀화 문제와 중복된 행정기능 집중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유치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주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끝으로, 문화적 수용성과 정책 인프라 측면에서는 김해시를 포함한 경상남도 와 인천시가 두드러진 강점을 보이고 있음
- 경상남도는 다문화 축제(MAMF), 국제결혼 등 역사적·사회적 배경을 기반으로 외국인에 대한 높은 포용성과 문화적 이해를 축적해 왔으며, 인천시 역시 다양한 외국인 정주 인프라와 다국적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어 정책 수요에 대한 민간 네트워크 기반 대응 역량이 뛰어난 지역으로 분석됨

3) 종합시사점

- 출입국·이민관리 기구의 입지 논의는 단순한 수요 규모 비교를 넘어, 행정 효율성(수도권 집적 효과)과 국토 균형발전(비수도권 분산 효과)을 동시에 고려하는 다핵·분산형 거점 구조를 전제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단일 입지 선정이 아닌 기능 분담형 네트워크 모델이 정책적으로 타당한 대안으로 제시됨
- 수도권 편중 완화라는 국가적 과제의 관점에서 볼 때, 경상남도는 비수도권 중 제조업 기반 산업인력과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구조적으로 집중된

지역으로, 현장 중심 이민행정 수요에 기반한 분산 거점으로서 정책적 우선성이 뚜렷함

- 청주시는 중부권 교통·행정 접근성이 우수한 후보지이나, 이민 수요의 파급력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차별화 전략 보완이 요구됨
- 등록외국인 규모 측면에서 경기도는 전국 최대 수요 지역으로 행정 효율성의 강점을 지니나, 수도권 과밀 심화와 형평성 논란을 고려할 때 전면적 중앙집중 모델의 한계가 분명함. 이에 따라 수도권은 광역적 총괄·조정 기능, 비수도권은 현장 대응·정착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권역별 역할 분담 체계가 요구됨
-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을 중심으로 한 출입국 조직 집적은 국제 이동성 측면에서 행정 효율을 제공하나, 이민정책의 핵심 과제가 ‘입국 관리’에서 ‘정착·통합’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 현장과 생활권에 밀착된 행정 거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김해는 김해국제공항-가덕신공항(예정)-부산·진해 신항으로 연결되는 동남권 복합 관문이자, 국가 제조업 핵심 축과 인접한 입지적 특성을 지님. 이는 산업특화 비자 운영, 외국인 근로자 정착 지원(주거·교육·의료), 다국어 민원 대응을 연계한 현장 체감형 이민행정 모델을 실증·확산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제공함
- 향후 출입국·이민관리 체계는 본부-권역 거점-현장 센터로 구성되는 다핵 네트워크형 구조를 기본으로 설계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효율과 균형의 관점에서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방향이 바람직함. 이를 위해 도-시군-산업단지-대학-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TF)를 구축하여 정책 실험과 현장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수도권과의 기능 중복 및 과밀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 처리 소요시간 산업특화 비자 정착률, 외국인 고용 유지율, 사회통합·수용성 지표 등을 핵심 성과지표로 내재화하고, 성과 기반 단계적 기능 확대 전략을 통해 정책적 설득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III 출입국·이민정책 기구 김해시 유치 당위성

1 | 출입국·이민정책 기구의 역할 및 기능

□ 출입국·이민정책 기구 설립 배경 및 필요성

- 출입국·이민정책 기구의 신설 배경에는 급증하는 외국인 거주자와 다문화 사회 진입에 따른 효율적 이민행정 수요, 인구절벽 대응을 위한 이민정책의 전략적 중요성, 분산된 외국인 정책의 통합 조정 필요성이라는 세 가지 축이 자리함
- 외국인 거주자와 다문화 사회 진입 및 인구절벽 대응을 위한 이민정책의 전략적 중요성 증대
 - 대한민국은 최근 수년간 외국인 거주자 수의 급증과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해 있음. 2024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6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를 넘기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 코로나19로 2020~2021년 한때 감소했던 외국인 인구는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어 2019년 수준을 넘어섰으며, 2025년 중반에는 273만 명(전체의 5.3%)에 달함
 -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과 노동력 부족 문제 속에서, 이민자 유입은 피할 수 없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외국인력 활용과 이민정책을 국가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 확보의 전략으로 삼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음
- 분산된 외국인 정책의 통합 조정 필요성
 -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외국인·이민정책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일관된 대응에 한계가 있음. 비자 발급, 고용허가, 사회통합, 다문화가족 지원 등 관련 업무가 법무부 출입국본부뿐만 아니라 외교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등에 흩어져 있음
 - 이로 인해 부처 간 협업의 어려움, 정책·예산 중복과 비효율성이 지적되어 왔으며, 이민자나 수혜자 입장에서조차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호한 구조가 문제로 나타남

- 현재도 국무총리 산하 외국인정책위원회 등이 부처 조정을 맡고 있으나, 위원회 방식의 태생적 한계로 신속하고 책임있는 대응에 한계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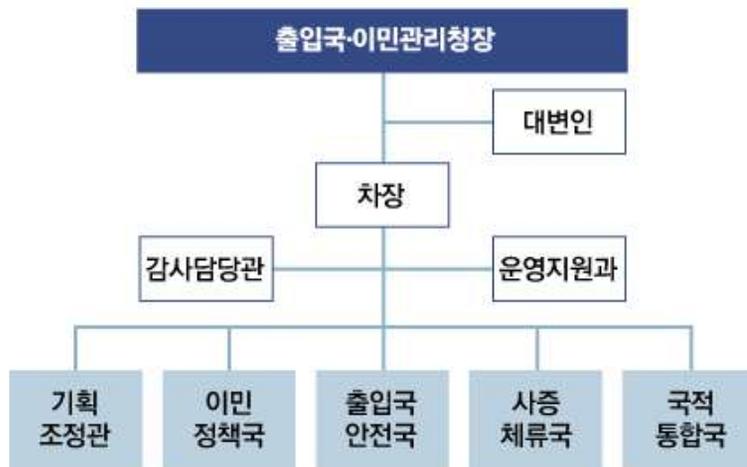
현행 주관기관·거버넌스 체계

- 대한민국의 출입국·이민업무는 현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KIS:Korea Immigration Service)가 총괄함. 본부는 정책수립·평가, 국경심사, 비자·체류·국적, 난민, 사회통합, 현장 기관 관리까지 포괄
 - 범정부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과 신출입국·이민정책이 정책 방향을 제시.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2025년 시행계획과 비자 제도 개선안 등이 논의·추진
- KIS 핵심기능(본부)
 - 정책기획, 국경관리, 비자·체류, 조사·집행, 난민, 사회통합, 국제협력 등 공식 조직·기능 페이지 및 부서별 역할로 확인
- 외국인정책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본·시행계획 심의·조정, 실무위원회 (위원장: 법무차관, 운영간사: KIS본부장)
- 지자체 역할
 - 기본계획·시행계획의 공동 이행 주체, 외국인정책위원회 안건에도 지자체 참여가 반영

- 이러한 배경에서 출입국·이민정책 기구(이하 ‘이민청’) 설립이 강하게 대두됨. 정부는 2023년 국정과제에서 이민청 신설을 핵심 추진 과제로 발표하였고, 2024년 초 여당과 합의 하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함
 - 이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 소속의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신설하여 출입국 심사·체류관리, 국적·난민, 외국인 사회통합 등 출입국·이민 업무 전반을 관장하고, 관련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서 이민청장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는 범정부 차원의 이민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함으로써, 분산된 이민 업무를 일원화하고 신속한 정책 수립과 집행을 가능케 하려는 취지임
 - 한편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방 소멸 위기 등 국가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장기 전략의 일환으로도 이민청 설립이 강조되고 있음

□ 조직 체계

- 출입국·이민관리청은 법무부 산하에 설치되는 외청으로 구상되어 있음
- 2024년 발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민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되, 모든 출입국·이민 사무에 대한 전담 권한을 갖는 독립 행정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됨
- 이는 현재 법무부 본부 조직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격상·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기존에 법무부 장관이 수행하던 출입국 업무 권한을 이민청장에게 이양함으로써 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조치임
- 법무부의 구상안(2023) : 이민청이 출입국 관리부터 체류, 통합에 이르는 전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 행정기관임
 - 이민청의 조직 구상안은 청장(차관급) 아래 차장 1인을 두고, 그 하위에 “1관 4국” 체제로 편성함



자료: 법무부

The JoongAng

자료) 중앙일보(2023.12.6.)

(그림 3-1)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 조직(안)

- 기획조정관실: 조직 운영과 행정조정 기능을 수행하며, 이민청 전체의 중장기 전략 수립과 부처 간 협업 조율을 전담. 이민정책 관련 법령 정비,

예산 편성, 성과 평가 등 컨트롤타워의 두뇌 역할을 수행함

- 이민정책국: 국가 이민정책의 종합 설계 담당 부서로, 인구정책 연계 중장기 이민전략 수립, 부처·지자체와의 정책협의, 이민 연구개발 등을 담당함. 법무처 외국인정책위원회 지원 등 정책 총괄 기능을 수행함
- 출입국안전국: 출입국 심사와 국경 관리, 불법체류 단속 등 출입국 관리·단속 기능을 전담하는 부서임. 경찰청·해양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공항과 항만 출입국 심사, 밀입국 방지, 테러 대비 등 안전한 국경관리 업무를 수행함
- 사증체류국: 외국인 비자 발급과 체류 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와 지자체에 흩어져 있던 외국인력·유학생 관련 비자 및 체류 정책을 통합하여,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나 유학생 체류지원 같은 업무를 일원화함
- 국적통합국: 국적 부여 및 사회통합을 담당하는 부서임. 이민자의 국내 정착과 귀화 등을 지원.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에 분산된 다문화 가족지원, 이주민 지원 정책을 이민청 산하로 묶어, 사회통합 강화와 외국인 인권 보호 업무를 수행함. 귀화 심사 및 국적취득 업무와 더불어, 이민자로 인한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민자의 대한민국 사회 적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함
- 현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산하에는 전국에 3개 출입국·외국인청(지방청)과 산하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등이 약 19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고, 약 2,600여 명의 인력이 근무 중에 있음
- 이민청 설립 시 조직 통합되어 이민청 산하 지역 출입국 행정 조직으로 편제될 전망이다. 중앙의 이민청이 정책을 수립하면, 전국의 출입국 현장에서 이를 집행·서비스하는 구조가 될 것임

■ 주요 기능

- 국가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 출입국·이민관리청은 단순한 비자 발급이나 체류 관리 중심의 집행기관이 아니라, 국가 이민정책 전반을 기획·조정·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핵심 기능함

- 현재 전국에 설치된 출입국·외국인청 및 사무소가 비자 발급, 체류 허가, 외국인 등록 등 일선 행정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민청은 개별 민원 처리보다는 중·장기 이민정책 수립, 부처 간 이민정책 조정, 이민 관련 법·제도 개선, 정책 성과 관리 및 평가를 담당하는 정책·조정 중심 기관으로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분산된 이민 관련 정책과 행정 기능을 통합하고, 인력 수급·사회통합·지역발전 정책을 연계하는 국가 차원의 이민정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민청의 본질적 역할이라 할 수 있음
- 출입국 관리 및 국경 통제 기능
- 이민청의 기본적 기능 중 하나는 대한민국의 국경 관리와 출입국 심사에 관한 총괄 기능임. 이민청은 공항·항만 등 출입국 지점에서 내·외국인의 입·출국 절차를 관리하고, 여권 심사 및 입국 심사를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출입국 질서를 유지함
 - 또한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밀입국·불법입국 차단, 출입국 관련 범죄 대응 등 국가 안전과 직결된 국경 관리 기능을 수행함
- 체류 및 이민 행정 관리 기능
- 이민청은 외국인의 체류와 이민 전반을 관리하는 행정 기능을 수행함. 구체적으로는 비자 발급 심사, 체류자격 부여 및 변경, 체류기간 연장, 체류지 관리 등 체류 행정 전반을 총괄함
 - 불법체류자 관리 및 강제퇴거 절차 역시 이민청의 주요 기능으로,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례에 대해 조사·단속을 실시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송환 조치를 수행함
 - 아울러 국적 업무와 난민 업무 역시 체류 관리 기능과 연계된 핵심 영역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큼. 외국인의 귀화 허가 심사, 국적 취득 요건 판단, 난민 인정 심사 및 인도적 체류 허가 등은 이민청 체제 하에서 보다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
- 사회통합 및 이민자 정착 지원 기능
- 이민청 신설을 통해 강화되는 핵심 기능 중 하나는 이민자의 사회통합 및 정착 지원임. 이는 단순한 출입국 관리에서 나아가, 이민자와 국민이 조화

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민청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기획·운영·평가를 총괄하며, 한국어·한국문화·법질서·생활 적응 교육을 통해 장기체류 외국인의 조기 정착을 지원함
- 또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국민과 이민자 간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결혼이민자 및 가족 단위 이민자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 체계를 구축함

○ 국제협력 및 글로벌 이민 거버넌스 기능

- 이민 문제는 국제적 성격이 강한 정책 분야로, 이민청은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이민 거버넌스 구축에 참여함
- OECD 이주 관련 회의 등 국제 협의체 참여를 통해 국제 이민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국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이민행정을 구축함
- 또한 노동력 송출국과의 협정(MOU) 체결, 불법체류자 송환 협력, 범죄인 인도 및 출입국 사범 정보 교류 등 양자 협력을 통해 합법적 이주 관리와 국제 공조를 강화함

○ 지역 기반 이민행정 및 지방협력 기능

- 이민정책은 중앙에서 수립되지만, 이민자의 생활과 정착은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지역 기반 이민행정 체계 구축이 필수적임
- 이민청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별 외국인 구성과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조정·지원하며, 지자체의 외국인 정책 의견을 국가 이민정책에 반영하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함
- 특히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민을 활용한 지역발전 촉진’ 기조에 따라, 이민청은 지역균형발전과 이민정책을 연계하는 핵심 기관으로 기능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이민청은 전국의 출입국·외국인청 및 사무소를 연계한 지역 거점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정착지원 통합센터 등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통해 체류 행정, 취업, 법률, 복지 안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음
- 나아가 이민청의 지역 협력 기능은 수도권에 집중된 행정기능을 분산하는 효과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정책적 의미를 지님

2 | 김해시 외국인 정책 및 정주 기반

1) 김해시 외국인 인구 현황⁶⁾

(1) 김해시 외국인 인구 현황

- 김해시는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면 외국인 수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며, 그 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 2021년 20,613명(전체 인구의 3.7%)에서 2024년 30,130명(5.4%)으로 증가함. 같은 기간 내국인 인구는 완만한 감소세를 보인 반면, 외국인은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김해시 인구 구조 내 외국인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르면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5% 이상이면 다문화 국가(도시)로 분류되며, 김해시는 2024년 기준 ‘다문화 도시’로 진입함

<표 3-1> 김해시 인구현황

연도	총인구		내국인		외국인		외국인 비율
	수	증감률	수	증감률	수	증감률	
2021	558,286명	-	537,673명	-	20,613명	-	3.7%
2022	558,065명	0.0%	535,129명	-0.5%	22,936명	11.3%	4.1%
2023	560,346명	0.4%	533,659명	-0.3%	26,687명	16.4%	4.8%
2024	561,806명	0.3%	531,676명	-0.4%	30,130명	12.9%	5.4%

주) 2021년~2024년도 각 연도말 기준
자료) 김해시 내부자료(2025)

○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분포

- 김해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25년 9월 기준 31,893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은 근로(E-9 등) 비자 소지자로, 전체의 42.7%인 13,626명에 달함. 이는 김해시가 산업단지 중심의 외국인 노동수요가 높은 지역임을 보여줌

6) 본 절의 ‘외국인’, ‘체류외국인(체류자격별)’, ‘외국인주민’ 통계는 자료원별 정의와 기준일이 상이하여 수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본 보고서는 추세·구조 분석은 김해시 내부자료, 체류구조는 체류자격별 통계, 전국 비교는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통계를 활용함

- 외국인 인구(김해시 내부자료): 김해시 인구통계에서 내국인과 구분되는 외국인 인구(각 연도 말 기준)
- 체류외국인(체류자격별): 체류자격(E-9, F-6 등) 기준으로 분류한 체류 인원(2025년 9월)
- 외국인주민(행안부):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기준일 2024.11.1, 2025.10 공표)로, 전국 시·군·구 비교에 활용

- 두 번째로 비중이 큰 집단은 결혼이민(F-6) 체류자로 5,212명(16.3%)을 차지함
- 이와 함께 거주(F-2 등) 비자 소지자가 4,405명(14.4%)으로 나타남. 거주 비자는 경제활동, 학업, 가족관계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부여되는 만큼, 김해시에 생활 기반을 갖추고 장기적으로 정착하려는 외국인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보여줌. 이들은 향후 영주(F-5)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김해의 외국인 구성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층으로 평가됨
- 방문동거 등 기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도 4,059명(12.7%)으로, 이들은 가족 방문, 종교활동, 단기체류 등 다양한 사유로 머무르는 인원을 뜻함
- 유학·연수(D-2, D-4 등) 목적의 외국인은 2,879명(9.0%)이며, 이는 김해대·인제대 등 지역 대학의 국제화 노력과 연계된 결과로 볼 수 있음. 유학생 수는 전체 외국인 규모에 비해 큰 비중은 아니지만, 교육·문화 교류 확대 측면에서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집단임
- 마지막으로 영주(F-5) 체류자는 2,509명(7.9%)으로 나타남. 영주권자의 비율이 전체의 약 8%에 이르는 것은 김해에서 장기간 생활하면서 지역사회에 깊이 정착한 외국인을 의미함. 이들은 한국 사회와 김해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생활기반도 안정되어 있어 지역경제·지역공동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구성원이라 할 수 있음

<표 3-2> 김해시 외국인 체류자격별 분포(2025년 9월 기준)

구분	인원(명)	비율(%)
근로(E-9 등)	13,626	42.7%
결혼이민(F-6)	5,212	16.3%
거주(F-2 등)	4,405	14.4%
기타(방문동거 등)	4,059	12.7%
유학·연수(D-2, D-4 등)	2,879	9.0%
영주(F-5)	2,509	7.9%
총계	31,893	100%

자료) 김해시(2025.10), 김해시 인구정책 브리프

(2) 전국 대비 김해시 외국인 인구 위상⁷⁾

□ 전국에서 외국인 인구수 12위

- 김해시는 외국인주민 38,465명, 인구 대비 7.0%로, 외국인주민 1만 명 이상 시·군·구(80개) 중 전국 12위에 해당함
- 상위권 대부분이 수도권(경기·서울) 기초지자체 또는 서울 자치구인 가운데, 김해시는 비수도권 기초지자체로서 상위권에 포함되어 외국인 정책 수요가 구조적으로 큰 도시임을 보여줌

<표 3-3> 외국인주민 1만 명 이상 시·군·구 현황(상위 12개) 및 김해시 위상

연번	시·군·구	총인구 수(A)	외국인주민 수(B)	외국인주민 비율(B/A)
1	안산시	701,551명	109,872명	15.7%
2	화성시	1,004,079명	81,705명	8.1%
3	시흥시	571,982명	78,444명	13.7%
4	수원시	1,224,979명	73,232명	6.0%
5	부천시	794,082명	60,502명	7.6%
6	구로구	418,832명	53,279명	12.7%
7	영등포구	400,799명	50,296명	12.5%
8	평택시	615,755명	48,602명	7.9%
9	천안시	694,765명	45,829명	6.6%
10	아산시	392,509명	43,547명	11.1%
11	김포시	499,536명	40,057명	8.0%
12	김해시	549,861명	38,465명	7.0%

자료) 행정안전부(2025.10.)

- 외국인주민 집중거주 유형에서도 김해시는 외국인주민 3만 명 이상 그룹(13개)에 포함되어 ‘절대규모’ 기준에서도 상위권에 위치함

<표 3-4>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유형(외국인 규모·인구 대비 비율 기준)

구 분	인구 대비 10% 이상(16)	인구 대비 5% 이상(96)	인구 대비 3% 이상(18)	인구 대비 3% 미만(12)
외국인주민수 5만명 이상(7)	안산시, 시흥시, 구로구, 영등포구	화성시, 부천시, 수원시		
외국인주민수 3만명 이상(13)	금천구, 아산시	관악구, 연수구, 부평구, 평택시, 김포시, 천안시, 김해시, 김포시, 평택시	청주시, 성남시, 용인시, 창원시	

주) * 순서 배열기준 : (1) 외국인주민수, (2) 인구 대비 비율

자료) 행정안전부(2025.10.)

7) 행정안전부(2025.10.)을 참조하여 재구성함. 통계표 작성 시점은 2024.11.1. 임

□ 외국인 근로자수 상위 5위

- 특히 김해시는 외국인근로자 규모가 12,309명이며, 한국국적 미취득자 대비 외국인근로자 비율이 37.8%로 나타나, 외국인 수요가 단순 체류·관광 중심이 아니라 산업현장 기반(노동·고용 중심)의 체류 구조임을 시사함

<표 3-5> 외국인 근로자 규모 상위 시·군·구(상위 5개)

순위	시·군·구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A)	외국인근로자 (B)	비율 (B/A)
1	화성시	69,871명	31,577	45.2%
2	김포시	33,497명	15,872	47.4%
3	안산시	93,613명	14,854	15.9%
4	시흥시	65,266명	13,595	20.8%
5	김해시	32,548명	12,309	37.8%

자료) 행정안전부(2025.10.)

□ 외국인 국적 구성의 지역별 차이와 김해시의 다양성

- 전국적으로 외국인 국적은 중국(한국계) 26.3%, 베트남 14.0%, 중국 10.9%, 태국 8.7% 순으로 구성됨. 수도권은 중국(한국계)·중국 국적의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특정 국적 편중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경상남도의 외국인 국적 구성은 중국(한국계) 21.5%, 태국 12.5%, 베트남 5.0%, 인도네시아 8.0%, 우즈베키스탄 6.8% 등으로 나타나, 특정 국적에 편중되기보다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분산적으로 구성된 구조를 보임

<표 3-6>시·도별 주요 국적 '구성비' 요약표(전국/수도권/경남만) (단위 : 명)

시·도	전체	중국 (한국계)	베트남	중국	태국	우즈베키스탄	미국	캄보디아	필리핀	네팔	인도네시아
계	2,042,744	537,639 26.3%	285,165 14.0%	222,663 10.9%	178,328 8.7%	83,927 4.1%	47,746 2.3%	62,842 3.1%	56,618 2.8%	68,716 3.4%	59,315 2.9%
서울	367,291	150,490 41.0%	26,723 7.3%	66,655 18.1%	14,078 3.8%	4,293 1.2%	19,059 5.2%	1,069 0.3%	3,717 1.0%	3,717 1.0%	1,972 0.5%
인천	127,960	41,662 32.6%	10,390 8.1%	13,353 10.4%	8,341 6.5%	6,512 5.1%	2,595 2.0%	1,334 1.0%	2,913 2.3%	2,913 2.3%	2,541 2.0%
경기	681,201	256,144 37.6%	56,139 8.2%	65,485 9.6%	53,725 7.9%	26,128 3.8%	13,664 2.0%	21,722 3.2%	19,015 2.8%	19,015 2.8%	11,180 1.6%
경남	128,519	10,585 8.2%	27,620 21.5%	6,411 5.0%	16,103 12.5%	8,797 6.8%	1,064 0.8%	6,946 5.4%	4,442 3.5%	4,442 3.5%	10,279 8.0%

자료) 행정안전부(2025.10.)

- 시·군·구 단위 외국인 국적 분포를 살펴보면, 중국(한국계)·중국 국적은 수도권 대도시 및 구 단위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
 - 중국(한국계)은 안산시(42,122명), 시흥시(39,613명), 수원시(34,452명), 구로구(34,397명) 순으로 많이 거주하며, 중국 국적 역시 안산시·수원시·동대문구 등 수도권 중심지에 집중되어 있음
 - 반면 베트남·태국·우즈베키스탄·캄보디아·인도네시아 등 산업인력 중심 국적은 수도권 외 지역까지 분산되어 나타나는 특징을 보임
 - 베트남 국적은 화성시·경산시·천안시에 이어 김해시가 전국 4위(5,808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태국 국적 또한 화성시 다음으로 김포시·포천시와 함께 김해시가 상위권(3,758명)에 포함됨
 -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국적 역시 제조업·조선·물류 산업이 발달한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경향을 보이며, 김해시는 우즈베키스탄(3,659명), 캄보디아(1,421명), 인도네시아(1,831명) 등 다수 국적에서 전국 상위 5~10위권 내에 위치하고 있음

<표 3-7> 주요 외국인 국적별 상위 시·군·구 현황(김해시 포함)

국적	1위	2위	3위	김해시 순위·규모
베트남	화성시 (7,814명)	경산시 (6,675명)	천안시 (6,236명)	4위 (5,808명)
태국	화성시 (9,976명)	김포시 (4,141명)	포천시 (3,882명)	4위 (3,758명)
우즈베키스탄	안산시 (9,195명)	아산시 (5,298명)	화성시 (3,835명)	5위 (3,659명)
캄보디아	화성시 (3,613명)	이천시 (2,231명)	김포시 (1,820명)	8위 (1,421명)
인도네시아	화성시 (2,566명)	제주시 (2,375명)	통영시 (2,097명)	4위 (1,831명)

주) 본 표는 국적별 외국인주민 수 기준 상위 20위 시·군·구 중 김해시가 포함된 국적만을 선별하여 제시함.
 자료) 행정안전부(2025.10.) 재구성

- 이러한 분포 특성은 김해시가 특정 국적에 편중된 외국인 거주지가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정주 인구가 복합적으로 형성된 산업형 다국적 정주 도시임을 보여줌

2) 외국인 정책의 제도적 기반

▣ 김해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김해시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김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적·행정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음
 - 제1조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가정생활 안정과 자립생활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제2조에서는 ‘외국인주민’을 90일 이상 김해시에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및 일정 요건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로 정의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 등으로 구성된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정의도 포함되어 있음
 - 제3조에서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내국인과 동등하게 공공재 및 시의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를 명확히 함
 - 제4조에는 시장이 그들의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할 책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도록 하며, 이 계획에는 자립 지원, 인권 보호, 교육·양육 지원,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제7조에서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언어 교육, 직업훈련, 통번역, 가족상담, 보육·교육, 건강관리 서비스, 국제결혼 관련 교육 및 홍보 등 폭넓은 영역에 걸쳐 있음. 특별히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나 중도입국 자녀 등 취약 집단에 대한 세부 지원 규정도 마련되어 있음
 - 더불어, 김해시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설치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제도함
 - 조례에는 정책 조정, 제도 개선, 공동체 구현 등을 위한 심의·자문 기능이 명시되어 있으며, 민간위탁, 전문인력 양성, 센터 운영 등 실행체계 구축에 대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음

- 특히, 매년 5월 20일을 ‘김해시 세계인의 날’로 지정하고, 이 날을 포함한 일주일을 ‘다문화주간’으로 설정하여 다양한 문화·예술·국제교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시정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주민에 대해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됨

▣ 김해시 외국인 전담 부서

- 김해시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과 정책 수립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두 개의 전담 부서인 인구청년정책관 소속의 ‘외국인정책팀’과 복지국 여성가족과 소속의 ‘외국인복지팀’을 운영하고 있음
- 외국인정책팀은 외국인 인구 유입 확대와 정주 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적 정책 기획 및 조정 기능을 담당하며,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 외국인 정책 종합계획 수립
 - 외국인 유입 및 유치 전략 발굴
 - 부서 간 외국인 관련 사업 연계 및 추진 관리
 - 외국인 관련 통계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 제도 개선 건의
- 외국인복지팀은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생활밀착형 복지 지원과 지역사회 적응 지원을 전담함
 - 「김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운영
 - 외국인 주민 지원 정책 개발 및 총괄
 - 외국인 공동체 지원 및 관리
 - 긴급 지원사업 및 정착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통번역 지원단 운영 및 관리

3) 김해시 외국인 정책

(1) 김해시 외국인 정책의 추진 동향

- 최근 4년간 김해시 외국인 지원 정책은 사업 건수의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규모는 2022년 546백만 원에서 2024년 1,243백만 원으로 약 2.3배 증가함

- 특히, 2023년 대비 2024년 정책의 예산 규모가 92.1%가 급증한 것은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 수요가 양적 증가를 넘어 외국인 정책 수요 확대, 다문화·체류 지원 강화 및 중앙정부 매칭사업 확대 등 정책의 질적 고도화와 실행 체계 강화를 요구하는 전환점에 도달했음을 의미함
- 다만, 올해 외국인 지원 정책의 규모가 2023년 수준으로 회귀하여 지난해 지원 정책의 양적 증가는 일시적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지원 정책의 확대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높은 것을 확인함

<표 3-8> 김해시 외국인 지원 정책 현황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8.5% (전년대비)	▲92.1% (전년대비)	▼45.4% (전년대비)
3개 분야	20개	21개	21개	22개
외국인 정책	546백만원	647백만원	1,243백만원	679백만원

자료) 김해시 내부자료(2025)

(2) 김해시 생애주기별 외국인 정책 추진 분석

- 김해시는 제도적 기반 구축과 전담부서 운영을 통해 외국인 정책의 법적·행정적 토대를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주민의 체류·정착 단계의 차이를 고려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체계를 점차 강화함
- 2025년 6월 기준 김해시 외국인 전체 인구는 31,354명이며, 이 중 청년층(19~45세)이 72.9%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반면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층은 각각 2.6%, 4.8%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나타나 노동시장 중심의 외국인 인구 유입 구조가 명확히 드러남
- 등록외국인 역시 청년층이 79.9%로 집중되어 있으며, 국적동포의 경우 중·장년 및 노년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임
- 이는 김해시 외국인 정책이 단순 초기 정착 지원을 넘어, 청년층 노동력 확보-가족 동반 증가-교육·복지 수요 확대-중·장년 및 노년기 사회안정망 필요성으로 이어지는 인구구조 변화의 흐름을 반영해야 함을 시사함

<표 3-9> 김해시 생애주기별 외국인 통계(2025년 6월 기준)

구 분		영·유아기 (0~5세)	아동·청소년기 (6~18세)	청년 (19~45세)	중·장년 (46~64세)	노년기 (65세 이상)
총 계 31,354	인원	827	1,495	22,857	5,049	1,126
	비율	2.6%	4.8%	72.9%	16.1%	3.6%
등록외국인 26,079	인원	803	1,085	20,826	3,129	236
	비율	3.1%	4.2%	79.9%	12.0%	0.9%
국적동포 5,275	인원	24	410	2,031	1,920	890
	비율	0.5%	7.8%	38.4%	36.4%	16.9%

주) 청년 연령은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함

자료)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통계 및 김해시복지재단(2025) 자료를 참조하여 현행화

- 김해시는 특히 외국인 정책팀과 외국인복지팀의 업무 분담 구조는 고용·정착 기반 구축(정책팀)과 현장 실천 기반의 생활밀착형 지원(복지팀)의 역할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정책 전달 체계를 구축하였음
- 올해는 생애주기별 특성과 정책 수요를 고려하여 총 26개 정책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표 3-10> 참조), 그 중 청년층 대상 사업이 20개로 가장 많고, 중·장년층 17개, 아동·청소년기 14개, 노년기 10개 및 영·유아기 6개 순임
 -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단계에서는 보육료, 다문화 자녀 교육, 사회 적응 프로그램 등 취약계층의 기초 지원에 집중됨
 - 청년층은 지역 산업 연계 취업 지원, 대학생 인턴제, 기술 교육, 원스톱 정착지원센터 구축 등 경제활동 중심의 정책 지원이 뚜렷함
 - 중·장년층은 고용·건강검진·정착지원과 같은 생활 안정 및 사회적 안전망 정책 비중이 큼
 - 노년층은 각종 외국인 주민 적응 정책 등 기초 생활 지원을 실시 중임
- 김해시의 외국인 인구 구조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반영하여 청년기 노동·정착 기반 지원 중심 정책 구조가 현재 정책 추진의 핵심축임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김해시 외국인 인구의 청년층 중심 구조는 산업·교육·정주 전략과 연계된 경제기반형 정책 확대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함
- 또한, 최근 가족 동반 및 자녀 증가로 생애주기확장형 정책의 전환이 요구되며, 장기 정주화 추세를 고려해 외국인 정책은 사회통합 패러다임 기반의 정책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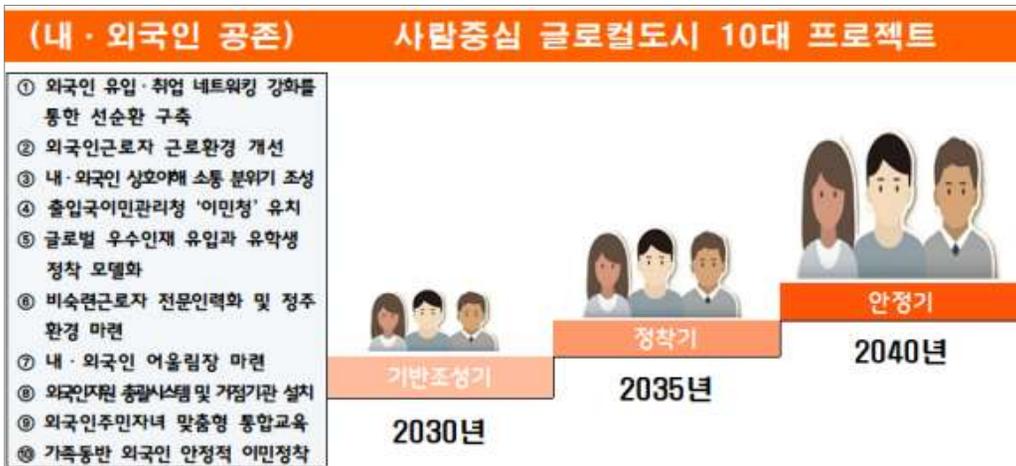
<표 3-10> 2025년 김해시 생애주기별 외국인 지원 정책 현황

부서	사업명	영·유아기 (0~5세)	아동·청소년기 (6~18세)	청년 (19~45세)	중·장년 (46~64세)	노년기 (65세 이상)	예산 (백만원)
세부사업 수 (27개)		6	14	20	17	10	
외국인 정책팀	지역 맞춤형 인재 유입 및 양성			○ (대학생)			비예산
	외국인근로자 입국, 정착 원스톱 복합센터 건립			○	○		500
	지역 산업 연계 협업 취업 지원			○ (대학생)	○		비예산
	공공기관 외국인 유학생 인턴제			○ (대학생)			8
	외국인 근로자 기사사 리모델링 지원 시범사업			○	○		5
	외국인 인식개선 시민교육		○	○	○	○	22.7
	외국인 서포터즈 '시정 홍보단'		○	○	○	○	
정착 모범사례 외국인 콘텐츠 제작		○	○	○	○		
외국인 복지팀	외국어 통번역지원단 운영		○	○	○	○	115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	○		
	외국인주민 사회적응 교육		○	○	○		
	외국인주민 진로탐방 교육		○				
	외국인 다(多)어울림 축제	○	○	○	○	○	
	외국인주민 기술교육지원			○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사업	○	○	○	○	○	12
	고려인 동포 한국어 교육사업		○	○	○	○	10
	고려인동포 자녀사회적응지원		○ (12~19세)				
	외국인 근로자 지역 정착 지원 사업			○	○		540
외국인 근로자 무료 건강검진			○	○		3 (전체 근로자예산)	
가족 지원팀	공공형 예식장 운영			○	○	○	59 (김해시민)
가족 지원팀	외국인자녀 교육지원사업(김해시가족센터)		○ (7~19세)				1,525
보육팀	외국인 유아 부모보육료	○ (3세-5세)					월10만
보육팀	시간제 보육 및 시간제 보육료 사업	○ (6개월-2세)					시간당 2천원
행복 안전팀	김해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	○	○	○	○	200 (김해시민)
체육 지원팀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	○	○	○	비예산
의약팀	외국인 가정 다문화 학생 의료 지원		○ (초·중학생)				비예산

주) 청년 연령은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함
 자료) 김해시(2025) 「2025년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 정책 현황」을 참조하여 연구진 재작성

(3) 김해시 외국인·다문화 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

- 정책비전 : 내·외국인이 함께 성장하는 사람중심 글로벌 포용도시 김해
- 김해시는 외국인 중·장기 정책 방향을 3단계로 설정하여 외국인이 머무는 도시에서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도시로 전환하는 정책을 목표함
- 1단계 : 정주 기반 구축 (기반조성기, 2025~2030년)
 - 초기 정주 지원과 생활·노동·교육 접근성 강화
 - 일상 속 행정·의료·언어 장벽 해소
- 2단계 : 지역사회 통합 (정착기, 2030~2035년)
 - 시민-외국인 간 상호 이해 확대 및 공동체 형성
 - 갈등 예방 기반의 지속 가능한 지역 통합 구조 구축
- 3단계 : 글로벌 도시 조성 (안정기, 2035~2040년)
 -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과 다문화 정책 고도화
 - 지속 가능한 다문화·이민정책 체계 구축



자료) 김해시 내부자료(2025)

(그림 3-2) 김해시 외국인 중·장기 정책 추진계획

(4) 다문화 교육 특구 김해

-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2024)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김해시 다문화학생 수는 2,565명, 다문화학생 비율(3.83%)로 경상남도도 평균(3.72%)을 상회함. 특히 최근 3년간 다문화학생 수 증가율은 연평균 10% 이상임
- 김해시 다문화학생의 특징은 외국인가정 및 중도입국 학생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으로, 외국인가정 학생 비율은 32.67%로 경남 평균(13.00%)의 두 배 이상에 달함
- 경상남도교육청은 2023년 8월, 국립김해박물관에서 「김해 다문화교육 특구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김해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 단위 다문화교육 협력 모델의 본격적인 추진을 선언함
- 김해 다문화교육 특구는 학교-교육지원청-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등 지역 교육공동체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다문화학생과 비(非)다문화학생의 전인적·통합적 성장을 지원하고, 김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다문화교육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임
- 이후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2024)은 「2024년 김해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을 통해, 교육과정 중심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 다문화학생 단계별 맞춤형 지원(공교육 진입-적응-성장), 학교-지역사회-유관기관 연계형 지원 체계 구축을 핵심 축으로 하는 ‘다 가치, 더 활짝’ 다문화교육 모델을 운영 중에 있음

비전

다 같이 배우며 성장하는 학생, 다양하고 조화로운 학교

목표

- ✓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공동체 다문화 이해교육 활성화
- ✓ 다문화학생 단계별 맞춤지원으로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격차 해소
- ✓ 체계적인 단위 행정 인프라 체제 구축

추진 과제

교육과정 중심의 다문화 이해교육	① 교육과정연계 다문화교육 운영 시작 공교육 진입과 초기 적응 확대	1. 학교교육과정 및 수업을 통한 다문화교육 2. 다가치 꾸러미 대여 사업 활성화 3.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강조
	②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1.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2. 학교-지역사회 협력 모델 개발 지원 3. 징검다리과정 예비학교	특색
	③ 교육공동체 다문화 감수성 역량 지원	1. 다문화교육 교원 연수 2. 다문화교육 학부모 연수 3. 다문화 협력 강사 연수	
다문화학생 단계별 맞춤지원	시작 공교육 진입과 초기 적응 확대	1. 다문화학생 편입학 및 학적생성 지원 2. 다문화교육 특별(한국어)학급 3.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4. 다문화 예비학교 5. 다문화(이중)언어강사 활용	강조
	발달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학습 및 심리정서 지원	1. 찾아가는 다문화학생 맞춤형 상담 2. 대학생 멘토링 3. 기초학력 교육지원 4. 다문화학생 온라인 누리교실	특색
	키움 자아존중감 및 꿈 희망찾기로 글로벌 인재 육성	1. 다가치 어울림교육프로그램 2. 대입정보센터 협력 진학프로그램 3. 이중언어 강점 개발 프로그램 4. 김해알기 다문화학생 체험캠프 운영 5. 타요타요 다문화 체험활동 지원 버스 운영	특색 특색
다문화교육 지원 체계 구축	① 김해다문화교육 협의체 운영	1. 김해 다문화교육지원단 2. 거점형 다문화교육센터 지원 3. 유관기관 협업 다가치지원협의체 4. 다문화 협력강사 인력풀 구성	강조 강조
	② 다문화교육특구 운영	1. 김해다문화교육특구 운영	항점
	③ 지역 연계 사업 운영 및 지원	1. 지역 다문화축제 연계 사업 2. 다가치 통번역 지원단 3. 지역 연계 다문화교육 협력 단체 공모 4. 보건의로 지원 업무 협력(MOU) 이행 5. 고신대학교복음병원 희망 무료진료소 운영	특색 특색

자료)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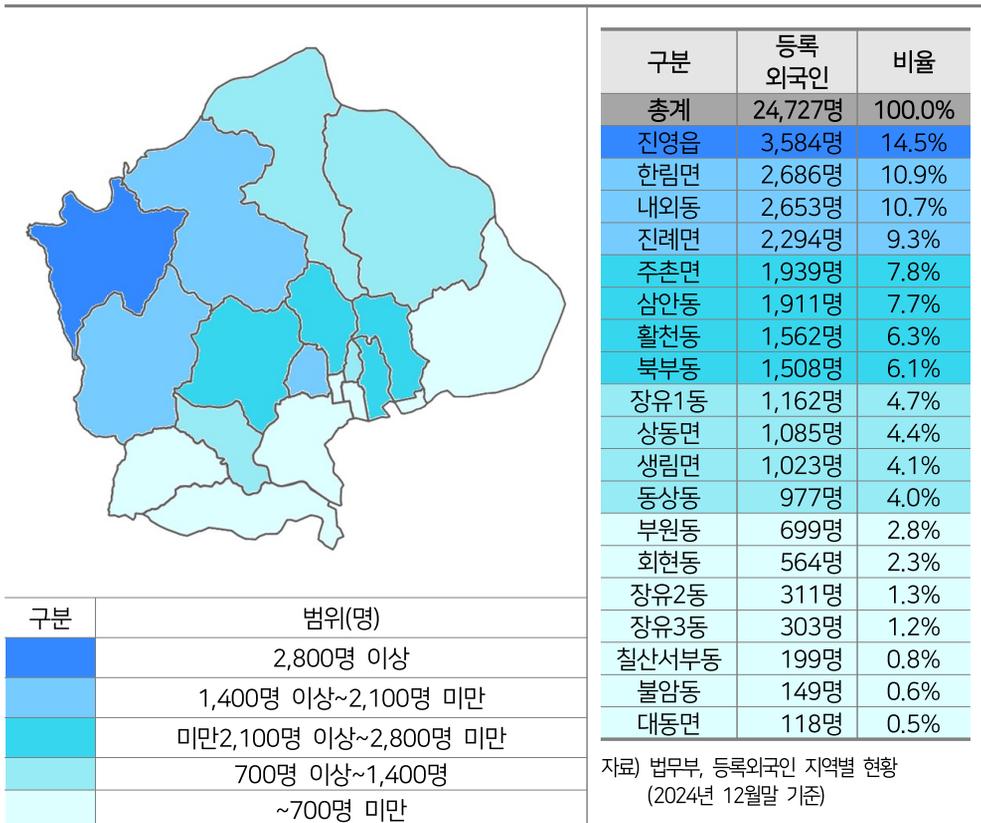
(그림 3-3) 김해 다문화교육 지원체계

4) 김해시 정주 기반 여건 분석

(1) 정주 기반 및 지원시설

□ 외국인 주요 거주지(등록외국인 통계, 2024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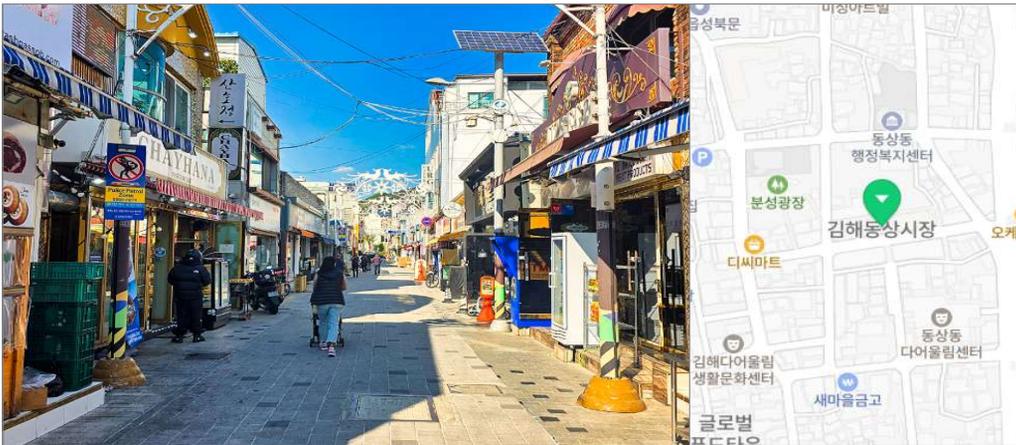
- 김해시 내 외국인 거주 분포를 살펴보면, 진영읍(3,584명, 14.5%), 한림면(2,686명, 10.9%), 내외동(2,653명, 10.7%), 진례면(2,294명, 9.3%), 주촌면(1,939명, 7.8%) 등이 상위 5개 지역으로, 전체 등록외국인의 절반 이상(약 53%)을 차지함
- 내외동을 제외한 주요 지역은 산업단지가 인접한 산업연계형 정주지역으로, 제조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 중심의 거주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남
- 반면, 내외동은 도심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된 생활형 정주지역으로, 결혼이민자·유학생 등 다양한 체류자격군이 공존하는 복합적 특성을 보임



(그림 3-4) 김해시 지역별 등록외국인 현황

□ 외국인 커뮤니티 지역 및 지원시설

- 김해 동상동 ‘외국인 거리’: 김해의 다문화 상징 공간이자 외국인 정착 및 커뮤니티의 중심지
 - 김해시의 대표적인 외국인 커뮤니티 지역은 동상동·서상동 일대 ‘외국인 거리(종로길 일대)’임
 - 이 지역은 조선시대 읍성 내 전통 중심지로서 과거 김해읍사무소, 경찰서, 김해군청 등이 위치하였고, 교통·상업 중심지로 발전했으나, 신도시 개발과 함께 상권이 침체되면서 2000년대 후반부터 이주노동자 중심의 다문화 거리로 재편됨
 - 동상시장 일대를 중심으로 외국인이 운영하는 음식점과 상점이 확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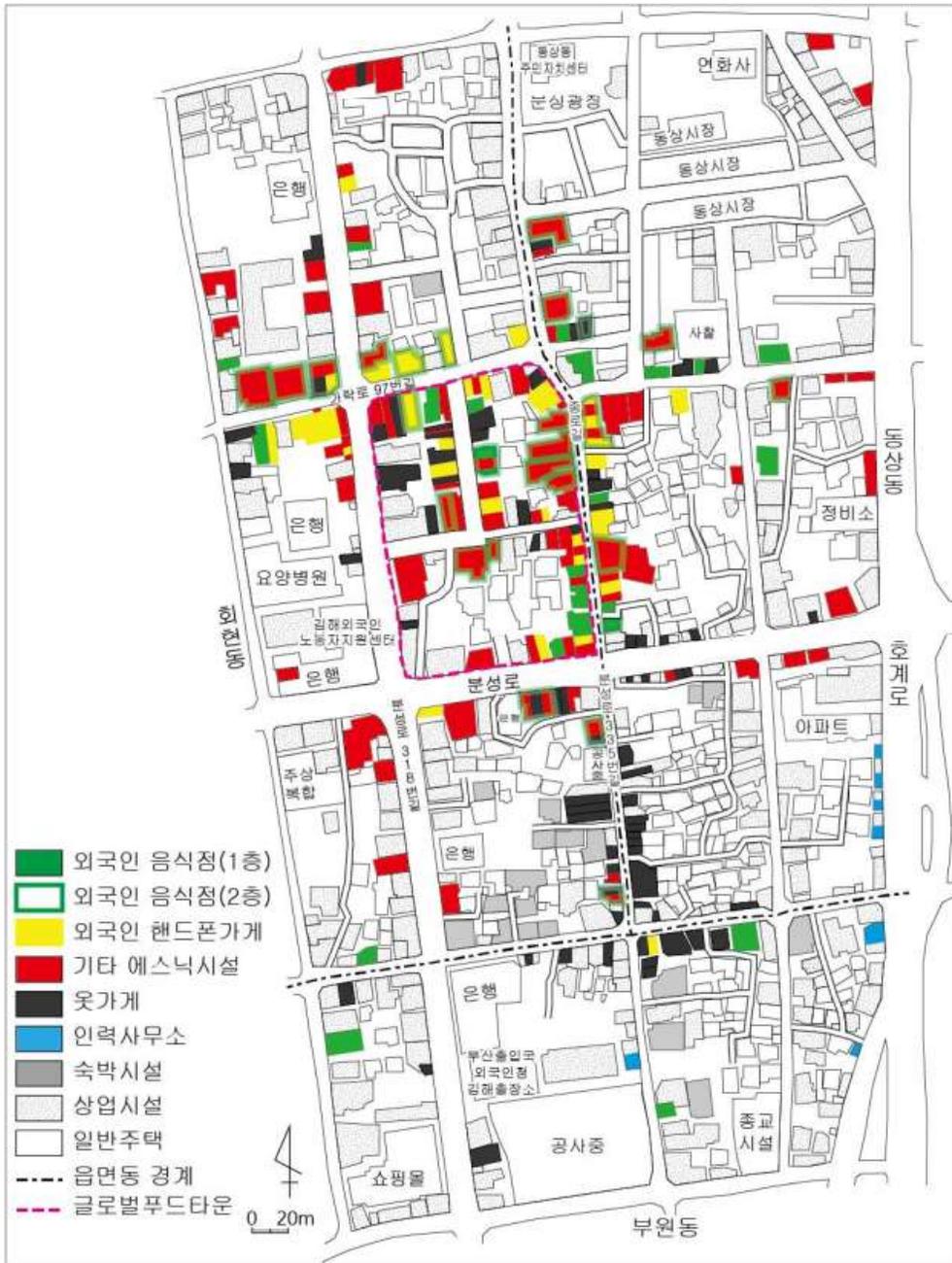
위치: 김해시 동상동 일대 종로길
 주요 기능: 외국인 식당·상점 밀집 / 정보교류·심리적 안정 / 다문화 네트워크 중심지
 연계 시설: 김해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가야글로벌센터, 김해다문화치안센터
 공간 성격: 고국문화 재현, 생활·소비공간, 심리적 안정공간

사진자료) 김해시 공식블로그(검색일: 2025.11.25.)

(그림 3-5) 김해시 동상동 외국인 거리

- 동상동 ‘외국인 거리’의 공간적·기능적 실태에 대해서는 전지영(2023)의 연구가 있으며, 2020년 기준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김해 원도심 일대에는 에스닉 상점이 200개 이상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이동통신업체 39개, 환전소 6개, 아시아마트 10개, 음식점 57개, 외국인 근로자 쉼터 및 지원센터 8개 등으로 확인됨

- 이 중 음식점은 할랄 음식점을 포함하여 우즈베키스탄·인도네시아·베트남·태국·인도·중국·네팔·모로코·미얀마·러시아 등 다양한 국적과 문화권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건물 1~2층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음
- 아울러 3층 이상에도 외국인 음식점 2개소와 PC방·유흥시설 등 기타 상업시설 9개소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 상권이 수평적 집적을 넘어 수직적 확장 양상까지 보이고 있음
- 의류 판매점은 총 84개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분성로 335번길 일대를 따라 구제의류점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특징을 보였음
- 장영환(2025.5.29.)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김해시 외국인 인구가 약 3만 1,114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 자영업자 비율은 최소 6.5%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를 적용할 경우 프리랜서와 소규모 자영업업을 포함한 김해시 내 외국인 자영업자 수는 2,000명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평가됨
- 이러한 외국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2020년을 기준으로 조사된 동상동 외국인 상권은 현재 시점에서 규모와 업종 다양성 측면 모두에서 더욱 확대·심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같은 동상동 외국인 상권은 단일 업종이나 특정 국적에 편중된 구조가 아니라, 음식점·아시아마트·이동통신·환전·의류·종교·인력지원 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형태를 띠고 있음
- 이는 중국·중국계 중심으로 상권이 과도하게 편중된 수도권 일부 지역과 달리, 다양한 국적과 생활 기능이 결합된 다국적·생활밀착형 외국인 상권이라는 점에서 김해시만의 차별적 특성으로 평가할 수 있음



자료) 전지영(2023)

(그림 3-6) 동상동 일원의 외국인 상점 분포(2020년 기준)

- 현재 김해시 외국인 거리 일대에 가야글로벌센터, 김해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김해다문화치안센터 등을 운영하며 상담·교육·치안·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거리 내 분성광장에서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고 있음
 - 이들 시설은 외국인 거리 내 상권 및 생활공간과 연계되어, 언어·문화·행정·치안이 통합된 다문화 정주 기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
 - 이 지역은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외국인들이 고국의 언어·음식·문화·종교를 공유하며 외국인의 사회문화적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 잡음

<표 3-11> 김해시 외국인 지원시설

시설명	김해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가야글로벌센터	김해다문화치안센터
사진			
위치	가락로 81	동상시장 공영주차장 6층	분성로335번길 36
주요 기능	외국인근로자 고충·노무·생활상담, 통번역, 법률·의료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 복지센터 커뮤니티 공간 제공 (북카페, 상담실, 교육장, 동아리실 등 외)	외사 전담 경찰관 배치, 기초질서·방범순찰·범죄상담, 2층 외국인 쉼터 운영

사진자료) 김해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홈페이지(접속일: 2025.11.25.), 가야글로벌센터 홈페이지(접속일: 2025.11.25.), 송봉준(2025.4.29.)

(2) 김해시 외국인의 경제활동 및 정책

■ 김해시 외국인 상시근로자 현황

- 김해시 외국인 상시근로자는 2022년 기준 8,716명으로, 이 중 89.5%인 7,803명이 광·제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어 산업 편중도가 매우 높은 모습을 보임. 이는 김해시 산업단지 기반의 제조업 중심 경제구조가 외국인 근로 수요를 지속적으로 형성해 왔음을 보여줌
- 반면 서비스업 종사자는 832명(9.6%), 건설업 28명(0.3%)에 그쳐 제조업 의존도가 절대적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성별로는 남성 상시근로자가 7,295명으로 전체의 83.7%를 차지하며, 이

중 92.9%가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음. 반면 여성 근로자는 1,421명이며, 제조업 비중이 72.3%로 남성보다 낮고 서비스업 종사 비율이 27.2%로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별로는 29세 이하와 30대가 전체 외국인 근로자의 약 75%를 차지하는 등 젊은 노동력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 29세 이하 근로자의 91.3%, 30대 근로자의 91.2%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어 생산직 일자리의 주된 연령대가 비교적 젊은 층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줌. 반면 50대와 60세 이상은 서비스업 종사 비중이 각각 16.9%, 23.1%로 높아, 고령층 외국인은 제조업보다 서비스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3-12> 김해시 외국인 상시근로자의 일자리 산업별 현황

(단위: 명, %)

구 분		계(비율)	산업별			
			광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기타
2020년		8,722(100.0)	7,892(90.5)	28(0.3)	736(8.4)	66(0.8)
2021년		7,876(100.0)	7,067(89.7)	31(0.4)	732(9.3)	46(0.6)
2022년		8,716(100.0)	7,803(89.5)	28(0.3)	832(9.6)	53(0.6)
성 별	남성	7,295(100.0)	6,775(92.9)		446(6.1)	
	여성	1,421(100.0)	1,028(72.3)		386(27.2)	
연 령 대 별	29세이하	2,667(100.0)	2,435(91.3)	5(0.2)	207(7.8)	20(0.7)
	30대	3,826(100.0)	3,490(91.2)	8(0.2)	307(8.0)	21(0.6)
	40대	1,314(100.0)	1,145(87.1)	9(0.7)	152(11.6)	8(0.6)
	50대	710(100.0)	584(82.3)		120(16.9)	
	60세이상	199(100.0)	149(74.9)		46(23.1)	

자료) 김해시(2025), 2024년 김해시 다문화·외국인가구 통계

□ 산업단지 입지와 외국인 상시근로자 분포

- 김해시는 총 28개 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 20개 단지가 준공되어 가동 중에 있음. 준공된 산업단지는 주로 진영읍(5개), 한림면(5개), 주촌면(4개) 등에 집중되어 있음(이연정, 2024)
- 이러한 산업단지 구조는 외국인 상시근로자 분포에도 그대로 반영됨. 지역별 상시근로자 8,716명 중 진영읍(1,606명, 18.4%), 한림면(1,270명, 14.6%), 진례면(1,009명, 11.6%), 주촌면(871명, 10.0%) 순으로 많으며, 상위 5개 지역에 전체의 62.3%가 집중되어 있음

- 이는 제조업 중심 산업단지 입지가 외국인 노동력의 주요 유입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표 3-13> 김해시 지역별 외국인 상시근로자의 일자리 산업별 현황(2022년 기준)

지역	상근 근로자 수	비율	
상위 5개 지역	진영읍	1,606명	18.4%
	한림면	1,270명	14.6%
	진례면	1,009명	11.6%
	주촌면	871명	10.0%
	내외동	668명	7.7%
	소계	5,424명	62.35
그 외 지역	3,292명	37.8%	
합계	8,716명	100.0%	

자료) 김해시(2025), 2024년 김해시 다문화·외국인가구 통계



자료) 이연정(2024)

(그림 3-7) 김해시 산업단지 위치도

□ 김해시 외국인 자영업자의 일자리 현황

- 외국인 자영업자는 2022년 1,104명이며, 상시근로자와는 다른 산업 분포를 보임. 제조업 비율이 18.6%에 불과한 반면, 76.3%인 842명이 서비스업을 운영 하고 있음
- 성별 측면에서는 여성 자영업자의 88.9%가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어 여성 외국인의 창업 형태가 대부분 서비스업 중심이며, 남성 자영업자는 제조업 비중이 25.0%, 서비스업 66.7%로 나타나 여성보다 업종 분포가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30~40대가 전체 자영업자의 약 60% 이상을 차지함
- 김해시 외국인의 경제활동은 “제조업 중심의 근로자 구조”와 “서비스업 중심의 자영업 구조”라는 특성을 보이며, 산업단지 기반 경제구조와 지역 생활상권의 성격이 외국인 고용 환경에 명확하게 반영되고 있음

<표 3-14> 김해시 외국인 자영업자의 일자리 산업별 현황

(단위: 명, %)

구 분		계(비율)	산업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2020년		818(100.0)	113(13.8)	50(6.1)	655(80.0)
2021년		848(100.0)	131(15.5)	44(5.2)	673(79.4)
2022년		1,104(100.0)	205(18.6)	57(5.2)	842(76.3)
성별	남성	627(100.0)	157(25.0)	52(8.3)	418(66.7)
	여성	477(100.0)	48(10.1)	5(1.1)	424(88.9)
연령 대별	29세이하	204(100.0)			170(83.3)
	30대	317(100.0)	74(23.3)	21(6.6)	222(70.0)
	40대	278(100.0)	54(19.4)	13(4.7)	211 (75.9)
	50대	172(100.0)	29(16.9)	17(9.9)	126(73.3)
	60세이상	133 (100.0)			113(85.0)

자료) 김해시(2025), 2024년 김해시 다문화·외국인가구 통계

□ 외국인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김해시 정책

- 외국인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김해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매 주말 평균 700명이 넘는 인원이 이용하며, 산업안전 VR 체험장, 생활법률 상담,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음(이종훈, 2025.10.23.)

(3) 문화활동 및 사회 통합 여건

▣ 역사적·문화적 상징성

- 이민정책은 지향하는 가치와 사회적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문화·역사적 맥락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김해는 국내 여타 도시와 차별화되는 역사적·문화적 상징성을 보유한 지역으로 평가될 수 있음
- 김해는 가야 건국 신화와 더불어 김수로왕과 허황옥의 국제결혼 서사를 보유한 도시로, 이는 한국 역사 기록에서 확인되는 대표적인 국제적 인적 이동과 문화 결합의 사례로 해석될 수 있음
- 특히 허황옥이 인도 아유타국에서 바다를 건너 김해에 도래했다는 서사는, 고대 시기부터 한반도가 외부 세계와 단절된 공간이 아니라 개방적 교류의 장이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됨
- 이러한 역사적 서사는 단순한 지역 문화자산을 넘어, 현대 이민정책이 지향하는 다문화 공존과 사회통합의 가치를 설명하는 상징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이는 김해가 이주·이민의 역사적 기원을 현대 외교·이민정책 담론으로 확장할 수 있는 상징적 공간임을 시사함

▣ 김해시 다문화 축제 및 정책 세미나

- 김해시는 외국인주민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다문화 도시로서, 지역사회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와 다문화 외국인 관련 정책 세미나 등을 추진 중에 있음
- 다(多)어울림 축제는 김해를 대표하는 다문화 축제로 네팔·베트남·미얀마 등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 근로자와 가족이 참여해 국가별 입장 퍼레이드, 전통공연, 외국인 K-POP 가요제, 단체 경기와 응원전, 각국 음식과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홍보관 등을 운영하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유하는 개방적 교류의 장이 되고 있음
- 외국인 월드컵 대회는 생활체육 중심의 국제교류 행사로, 외국인 근로자와 김해 시민이 함께 어울리는 대표적인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며, 스포츠를 통한 자연스러운 상호작용과 유대 형성을 촉진하고 있음

- 연말에는 세계크리스마스 문화축제(12월)가 김해의 중 광장 및 분성광장 일원에서 개최됨. 대형 성탄 트리와 국가별 테마 조명존, 세계 음식 체험, 다국적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임

<표 3-15> 김해시 주요 외국인·다문화 축제 현황

행사명	개최 시기	내용
다(多)어울림 축제	가을	내·외국인이 함께 어울리는 지역 대표 다문화 화합축제 네팔·베트남 등 외국인 근로자와 가족이 참여하여 국가별 입장 퍼레이드, 전통공연, 외국인 K-POP 가요제, 국가별 단체 경기 및 응원전 등의 문화·체육 행사를 진행하고 각국 음식과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홍보관도 운영함
외국인 월드컵 대회	11월	외국인 근로자와 김해 시민이 함께 즐기는 축구대회 네팔과 미얀마,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중국, 태국, 캄보디아 등 7개국 10개 팀이 참가함. 선수단은 200여 명 규모(이경민, 2025.11.14.)
세계크리스마스 문화축제	12월	김해 시민의 중 광장 및 분성광장 일원에서 열리며, 대형 성탄 트리, 나라별 테마 조명존을 조성, 세계 음식 체험, 다국적 공연 등으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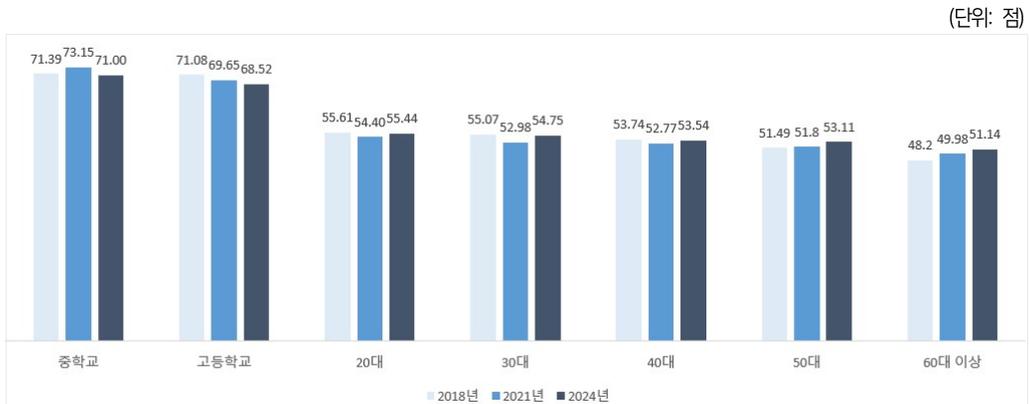
- 이와 함께 김해시는 축제·문화행사 중심의 다문화 정책을 넘어, 외국인 정책·복지·사회통합을 아우르는 공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음
 - 2024년에는 「지방소멸 대응·미래 성장을 위한 외국인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여 외국인 정책을 지역의 중장기 발전전략 차원에서 논의하였으며, 2025년에는 김해시복지재단 주관 「김해 거주 외국인 지원방안 복지포럼」을 통해 외국인 복지·정주 지원체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함
 - 또한 (재)김해문화관광재단과 김해여성포럼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김해생활」을 주제로 다문화 포럼을 개최하고, 내·외국인 상호이해와 지역 사회 공존을 위한 논의를 확장함
 - 이와 함께 김해시는 내·외국인이 직접 참여하는 상호문화 소통 프로그램인 ‘너나들이’ 토크쇼를 운영하며, 형식적 참여를 넘어선 생활 밀착형 사회통합 논의를 이어가고 있음

<표 3-16> 김해시 다문화·외국인정책 관련 세미나 및 포럼 개최 현황

년도	주관기관	주제
2024	김해시	지방소멸 대응·미래 성장 위한 외국인 정책 세미나
2025	김해시복지재단	김해 거주 외국인 지원방안 복지포럼
2025	(재)김해문화관광재단, 김해여성포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김해생활’을 주제로 다문화 포럼
2025	김해시	내·외국인 상호문화 토크쇼 ‘너나들이’

▣ 시민사회의 수용 태도

- 시민사회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과 수용 태도는 지역사회 통합의 핵심 요소로 평가됨
- 여성가족부(2025)의 2024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층(중·고등학생)의 수용성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수용성 점수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특히 중학생은 2024년 71.00점(100점 기준), 고등학생은 68.52점으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성인의 경우 20대는 55점 내외, 30대는 54점대, 40대는 53~57점, 50대는 51점대, 60대 이상은 48점 수준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낮아지는 전형적 세대 차가 확인됨
 - 이는 다문화 수용성이 교육·세대 경험과 연계되며, 젊은 세대일수록 문화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함을 시사함



자료)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5.6.4)

(그림 3-8) 청소년 학교급별·성인 연령대별 다문화 수용성

- 김해시는 제조업·서비스업 중심 산업구조와 외국인주민 비중 증가로 인해 외국인과의 일상적 접촉이 빈번한 도시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특성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직접 경험 기반의 긍정적 인식이 형성될 가능성을 높이며, 지역사회 내 다문화 수용성과 사회통합 기반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잠재 요인으로 평가됨

- 특히 김해시는 2024년 기준 전체 인구 중 외국인 비율이 5.4%로 비수도권 도시 중 높은 수준의 다문화 인구구성을 보유하고 있음
 - 또한 제조업 종사 외국인뿐 아니라 다문화가정 자녀의 증가로 인해 학교와 지역생활 전반에서 어린 시기부터 다국적·다문화 배경을 자연스럽게 접촉하는 환경이 확산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인구·교육환경 변화는 김해를 젊고 역동적인 다문화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장기적으로는 지역 내 문화적 다양성 수용도를 높이는 긍정적 기반이 됨
- 향후 김해시 차원에서도 지역 실정을 반영한 다문화 수용성 조사 및 인식 변화 추적 평가를 실시하여 정책 방향의 정합성을 높이고, 김해 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사회통합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 김해시 유치 당위성

1) 국가 차원의 정책적 당위성

▣ 국가적 정책 기조 변화

-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인구절벽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노동력 확보와 이민정책의 중요성이 국가 차원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 이에 정부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통해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과 함께 이민행정의 통합 및 지방 분권 추진 방향을 명시하였음
- 이는 기존의 분산된 행정체계를 통합하고, 지방 거점 중심의 효율적 이민행정 체계를 구축하려는 국가 전략적 변화로 평가됨

▣ 수도권 중심의 행정 불균형 완화 필요

- 현재 외국인 관련 주요 행정기관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비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민은 체류, 고용, 복지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 이용에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음
- 이러한 수도권 편중 구조는 국가적 차원의 행정 효율성과 균형발전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수도권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한 행정 분산과 서비스 접근성 개선이 필수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외국인 분포 변화

- 2024년 기준 전국 체류 외국인의 약 55%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나, 그 비율은 최근 몇 년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반면 비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인구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지방 중소도시로 외국인 인력이 확산되고 있음
- 외국인 분포 변화를 고려한 이민행정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한층 강화시키고 있음

<표 3-12> 국가 차원의 정책적 당위성

구분	주요 내용	시사점
국가적 정책 기조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인구절벽 가속 정부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통해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이민행정 통합·분권 추진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민행정 체계 개편은 국가 전략과제로 격상 지방 분권형 행정모델 구축 필요성 증대
수도권 중심의 행정 불균형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외국인 관련 주요 행정기관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 수도권 내 행정 서비스 접근성은 높지만, 비수도권 지역은 민원·체류·노동 등 지원 공백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수도권 거점 도시의 행정 분산 필요성 대두 지역 균형발전 프레임과 연계된 이민 행정 거점 조성 필요
외국인 분포 변화 추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체류 외국인의 약 55%가 수도권에 거주하나, 그 비율은 점차 감소 추세 반면 비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인구 증가율은 지속 상승 중, 산업단지·농공단지·지방도시로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민행정의 지방 분권화 필요성 강화 비수도권 외국인 증가세에 대응한 행정 거점 확충 필요

2) 동남권 차원의 전략적 당위성

□ 산업 및 인력 수요의 집중

- 부산·울산·경남으로 이어지는 동남권은 대한민국 제조업과 수출산업의 핵심 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항만·물류·기계·조선·자동차 등 주력 산업이 집중되어 있음
- 이러한 산업구조 속에서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다양한 유형의 이주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동남권은 전국적으로 이민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대표 권역으로 평가됨
 - 동남권은 비수도권 권역 중 등록외국인 비율 및 산업인력 집중 1위 지역
- 따라서 산업 현장과 정주 생활권을 포괄하는 통합적 이민행정 관리 거점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교통·지리적 접근성 우위

- 김해국제공항과 가덕신공항(예정), 부산항 및 부산·진해 신항, KTX역 등 국제·국내 교통망이 집적된 동남권은 지리적 접근성과 연계성이 우수함
- 이와 같은 교통·물류 기반은 향후 출입국·이민 관련 행정기관이 설치될 경

우 권역 전반의 서비스 접근성과 행정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됨

▣ 광역권 연계 및 균형발전 효과

-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산업·생활·문화가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광역 경제·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수도권 다음으로 인구·산업·물류 기능이 집적된 전국 유일의 대규모 권역임
- 동남권은 제조업과 수출산업의 중심지로서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다양한 이주민의 정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수도권에 집중된 행정 기능을 분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최적의 지역으로 평가됨
- 특히 동남권은 비수도권 중 유일하게 공항·항만·산단이 모두 결합된 권역으로, 출입국·이민관리 기능이 설치될 경우, 지방 분권형 이민행정체계의 선도 모델이자 권역별 시범지로서 정책적 의미가 매우 큼
- 또한 향후 이민행정 서비스 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경우, 동남권을 중심으로 대경권(대구·경북), 호남권(광주·전남) 등 타 권역으로의 확산·확장 효과도 기대됨

<표 3-13> 동남권 차원의 전략적 당위성

구분	주요 내용	시사점
산업 및 인력 수요 집중	· 울산·부산·경남으로 이어지는 동남권은 제조·물류·항만산업의 핵심 축 ·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이주민 수요 전국 상위권	· 동남권은 이민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권역으로, 통합적 행정관리 거점 필요
교통·지리적 접근성 우위	· 김해국제공항, 가덕신공항(예정), 부산·진해 신항, KTX역 등 국제·국내 교통망 집중	· 동남권 전체의 이민행정·출입국 서비스 접근성 향상 효과 기대
광역권 연계 및 균형발전 효과	· 울산·부산·경남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연결 · 인천·경기 중심의 수도권 행정집중을 완화할 거점 필요	· 국가균형발전형 이민행정 모델 구축의 권역적 시범지로 적합

3) 김해시 차원의 유치 당위성

- 김해시는 동남권의 지리적 중심성과 산업·인구·다문화 기반을 고르게 갖춘 도시로서, 권역형 이민행정 기능(출입국 서비스, 외국인 민원, 통번역·상담, 체류 지원 등)의 거점도시로서 높은 적합성을 지님
- 특히 제조업·서비스업 기반 외국인 근로자의 밀집, 다양한 체류유형의 증가, 동상동 외국인 거리 등 자생적 다문화 생태계의 형성은 김해가 동남권에서 “이민정책 실증·선도 도시”로 기능할 충분한 기반이 됨을 보여줌
- 지리적 중심성 및 권역 교통허브
 - 김해는 부산-울산-경남을 30~40분 내에 연결하는 동남권 핵심 중심도시로서 광역교통망의 절절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김해국제공항과 가덕신공항(예정)을 동시에 포괄할 수 있는 입지를 갖추고 있으며, 부산항·부산진해 신항 등 주요 항공·항만 기반에도 가장 근접한 도시라는 점에서 동남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출입국·이민행정 서비스의 접근성을 가장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는 지리적 우위를 차지함
- 산업·경제 기반
 - 김해는 진례·주촌·한림·생림 등 다수의 산업단지가 밀집한 지역으로, 외국인 근로자·기술인력·물류 종사자가 대규모로 집중되어 있음
 - 경남 지역에서 외국인 산업인력 비중이 높은 도시 중 하나로, 실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체류·노무·민원 행정 수요가 매우 큼
 - 이는 이민행정 기능이 산업정책과 연계된 형태로 운영될 수 있는 거점도시 요건을 충족함을 의미함
- 인구·정주 기반
 - 김해는 2024년 기준 전체 인구의 5.4%가 외국인이며, 경상남도 등록 외국인의 약 30%인 3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음
 - 근로자뿐 아니라 결혼이민자, 유학생, 방문·동거, 기술인력 등 다양한 체류 유형이 공존하고 있어 생활·근로·교육·문화가 자연스럽게 결합된 생활 중심 다문화 도시의 모습을 띠고 있음
- 다문화 수용성과 시민사회 기반
 - 동상동 외국인 거리, 가야글로벌센터, 김해외국인지원센터 등 자생적인 다문화 커뮤니티와 교류 인프라가 이미 구성되어 있음

- 김해 시민은 어린 시기부터 다국적·다문화 환경을 경험하는 비중이 높아 다문화 수용성과 시민사회 기반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음
- 이는 김해가 동남권의 사회통합형 이민행정 시범도시로서 정책적 실험과 확산을 감당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임

○ 행정·정책 인프라 및 준비성

- 김해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다문화가족센터, 통번역 지원체계 등 외국인 지원 행정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으며, 김해시 인구청년정책관 외국인정책팀과 연계해 지방정부-지역기관-시민사회가 협력하는 구조를 즉시 가동할 수 있음
- 이는 권역형 이민행정 기능을 신속하게 정착시키고 지역 내 서비스 체계를 고도화할 수 있는 행정적 준비성이 높은 도시임을 의미함

○ 이와 같이 김해는 지리적·산업적·인구적·문화적·행정적 측면에서 동남권 이민행정 기능의 거점도시로서 충분한 경쟁력과 당위성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이민정책 실증과 권역형 행정체계 구축의 최적지로 평가됨

<표 3-14> 김해시 차원의 유치 당위성

구분	주요 내용	근거 및 분석
① 지리적 중심성 및 교통 결절점	· 김해는 부산-울산-경남을 30분~40분 내에 연결하는 동남권 핵심 중심도시 · 김해국제공항과 가덕신공항(예정), 부산항·부산진해신항 등 주요 항공·항만 인프라에 가장 근접한 지리적 이점을 보유	· 동남권 전체 접근성이 우수한 도시, 공항·항만·철도·고속도로가 만나는 동남권 교통 허브 → 권역형 이민·출입국 행정센터 설치 시 이용 편의 극대화
② 산업·경제 기반	· 진례·주촌·한림·생림 등 다수의 산업 단지 밀집 · 외국인 근로자·기술인력·물류 종사자 집중	· 경남 지역에서 외국인 산업인력 비중 최상위권, 제조업·물류 중심의 외국인 행정 수요 실질적 발생지 → 이민행정-산업정책 연계 거점 가능
③ 인구 및 정주 기반	· 2024년 기준 김해시 전체 인구 중 외국인 비율 5.4% · 경남 등록외국인의 약 30% 김해 거주	· 결혼이민자, 유학생, 방문·동거, 근로자 등 다양한 체류 유형 공존 → 외국인의 생활-근로-정주권이 연결된 생활 중심 다문화 도시 구조 형성
④ 다문화 수용성과 시민사회 기반	· 동상동 외국인 거리 · 외국인, 다문화 축제 활발히 개최	· 김해는 어린 시기부터 다문화 접촉이 자연스러운 젊은 다문화 도시로 교류 경험 축적 → 사회통합형 이민행정 시범도시로 적합
⑤ 행정·정책 인프라 및 준비성	· 김해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다문화가족센터 등 다양한 지원체계 구축 · 전담부서와 지역 정책 연계 가능	· 이미 운영 중인 외국인 지원기관 간 연계로 즉시 가동 가능한 행정 기반 확보 → 지방정부-지역기관-시민사회 협력구조 구축 용이

4) 종합 평가

▣ 김해는 “동남권의 요충 도시이자 국가 이민행정의 최적 입지”

- 김해시는 ① 국가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지방분권형 이민행정 확대), ② 동남권의 산업·교통·생활권 중심성, ③ 김해 자체의 산업·인구·행정·다문화 기반을 모두 충족하는 도시로 평가됨
- 특히 김해는 외국인 인구와 산업인력의 실제 수요가 높은 ‘현장형 도시’이자 다문화 커뮤니티와 시민사회의 수용성이 이미 안정적으로 구축된 ‘사회통합 기반 도시’이며 행정 인프라를 즉시 가동할 수 있는 ‘준비된 도시’이므로 권역형 이민행정 거점도시로서 정책적·지리적·사회문화적·행정적 경쟁력이 모두 확보된 최적 후보지로 판단됨
- 국가 정책적 측면
 - 김해시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형 이민행정’ 기조와 부합하는 도시로서, 수도권 집중 구조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형 이민행정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음
 - 이는 최근 정부의 이민·출입국 체제 개편 방향과도 맞물려 있으며, 김해가 비수도권의 실질적 시범지이자 정책 실증 도시로서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정책적 정당성이 강화됨
- 공간적 측면
 - 김해시는 부산·울산·창원을 연결하는 동남권의 지리적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항(김해국제공항·가덕신공항(예정)), 부산·진해 신항, 산업단지, 생활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복합거점 도시임
 - 또한 대구·경북 등 인접 권역과의 연계성이 높아 권역 간 확장성과 접근성이 우수한 도시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이러한 입지적 강점은 김해를 동남권 전체의 행정·경제·물류 허브로 성장시킬 수 있는 잠재적 기반이 됨
- 사회문화적 측면
 - 김해는 외국인 거리와 다양한 외국인 축제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나, 다문화 기반이 형성되어 있음
 - 다문화 도시로 자리잡으면서, 시민의 포용성과 사회적 수용성이 높음
 - 외국인 주거, 교육, 복지, 편의 등 생활형 인프라가 이미 조성되어 있어

외국인 주민의 정주 여건이 우수하고, 지역사회 내 다문화 공존의 토대가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음

○ 행정적 측면

- 행정적 측면에서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다문화가족센터, 가야글로벌센터 등 각종 지원 인프라를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김해시 인구청년정책관 내 외국인정책팀이 설치되어 있어 행정적 지원과 특화정책 추진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있음
- 이를 통해 김해는 즉시 가동 가능한 현장형 행정거점 도시로서의 준비성을 확보하고 있음

○ 정책 수요 측면

- 김해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외국인 인구 6위, 비수도권 내 외국인 인구 1위, 외국인 인구 비율이 5% 이상인 대표적 다문화 대도시임
- 산업단지 기반의 외국인 근로자와 가족이 집중되어 있으며, E-9 비자 등 산업인력 중심의 외국인 고용 비중이 높아 국가 차원의 노동력 안정성 확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표 3-15> 김해시 차원의 이민정책 거점도시 종합 평가

구분	내용
정책적 측면	· 김해시는 수도권 중심 행정 구조의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형 이민행정 거점 도시로 성장 가능
공간적 측면	· 김해는 부산·울산·경남을 연결하는 동남권의 지리적 중심축으로, 공항(김해국제공항 가덕신공항(예정))·항만(부산항, 진해신항)·산업단지·생활권이 결합된 복합거점임 · 대구·경북권 등 인접 권역과 연계성이 높아 권역 간 확장성과 접근성이 우수함
사회문화적 측면	· 외국인 거리·축제 등 자생적 다문화 기반이 형성되어 있고, 시민의 포용성과 수용성이 높음 · 외국인 주거·교육·편의·복지 등 생활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어 정주 여건이 우수함 · 허황후 설화를 통한 국제 교류·다문화 수용의 역사적 상징성 보유
행정적 측면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다문화가족센터, 가야글로벌센터 등 지원 인프라를 이미 구축하고 있어, 즉시 가동 가능한 현장형 행정거점 도시로 평가됨 · 김해시 인구청년정책관 내 외국인정책팀 존재하여 행정적 지원 확대 및 특화정책 추진 중
정책 수요	· 김해는 비수도권 내 외국인 인구 1위, 전국 기초지자체 중 6위로, 외국인 인구 비율이 5% 이상인 대표적 다문화 대도시임 · 산업인력(E-9 등) 중심의 외국인 고용 비중이 높아 노동력 안정성 확보에 기여 가능

IV 출입국·이민정책 기구 김해시 유치 전략

1 | 전략 방향 도출

1) SWOT분석

- 김해시는 동남권의 핵심 교통·경제·생활권 중심지로서 외국인의 정주·근로·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조업 기반의 외국인 산업인력 수요도 비수도권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음
- 또한 동상동 외국인 거리, 다문화가족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 자생적·공공적 다문화 인프라가 결합되어 있어, 출입국·이민정책 기구의 권역 거점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구조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 반면 중앙정부 이민정책과의 연계 구조 미흡, 다국어 민원체계의 한계, 지역 내 인식 격차 등 제도적·사회문화적 보완 과제도 존재함. 특히 김해시 차원에서 이민정책 전반에 대한 공론화와 정책 경험 축적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은 향후 보완이 필요한 요소로 판단됨
- 한편, 다수 지자체에서 출입국·이민 관련 기관 유치를 공식화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최근 정부 조직 개편 방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관 신설 일정과 방식이 유동적인 상황도 외부 환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러한 내부·외부 여건을 종합하여, 김해시의 출입국·이민관리 기구 유치 여건을 SWOT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표 4-1> 김해시 출입국·이민관리 기구 유치 전략 도출을 위한 SOWT 분석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해·가덕(예정) 공항, 부산·진해항, 철도가 연결된 동남권 복합 관문성 • 제조·물류 중심 산업 밀집과 비수도권 상위 외국인 정주 기반 • 허황후 설화를 통한 국제 교류·다문화 수용의 역사적 상징성 보유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다문화가족센터·가야글로벌센터 등 지원 인프라 구축 • 경남지역 최대 외국인 거리·축제 등 자생 커뮤니티와 시민 포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다문화 정책은 활발하지만 이민 정책 공론화 및 이민정책 분야의 전문성·정책 경험 부족 • 중앙정부와의 정책 연계 및 데이터 표준화 미흡 • 지역 내 인식 격차 및 외국인 관련 오해 가능성 • 글로벌 정책 교류 및 국제협력 기반의 부족
Opportunity(기회)	Threat(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이민행정 통합·분권 추진 흐름 강화 • 가덕신공항·부산진해신항·부울경 메가시티 등 광역 프로젝트 연계 가능 • 제조·물류 산업의 외국인 노동 수요 급증 • 비수도권 외국인 증가로 지방권 이민행정 거점의 필요성 증대 • 해외 인재·유학생 유치 정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및 타 지자체와의 유치 경쟁 심화 • 정부조직 개편의 일정·방식의 불확실성 • 지역 내 외국인 증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및 수용성 리스크

2) 전략방향 도출

▣ 전략 방향

○ SO 전략

- 김해시는 동남권의 복합 관문도시로서 공항·항만·철도망이 집적된 입지적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중심의 산업구조와 높은 외국인 노동 수요, 안정적인 정주 기반과 자생적 다문화 커뮤니티를 갖추고 있음
- 이러한 강점은 최근 정부의 이민행정 기능 권역별 분산·확대 기조, 비수도권 외국인 증가 추세 등 외부 기회 요인과 결합하여, 김해가 동남권 권역형 이민행정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음

○ WO 전략

- 반면 중앙정부 이민정책과의 연계 구조 미흡, 지역 간 데이터·민원 서비스 표준화 부족, 이민정책 분야의 정책 경험 축적 한계 등은 내부적 약점으로 지적됨
- 이에 김해시는 이민행정 통합 논의 확대와 디지털 행정 전환이라는 정책

환경 변화를 활용하여, 내부 행정 역량을 단계적으로 보완하고 정주·사회 통합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권역 거점으로서의 실질적 수용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ST 전략

- 수도권 및 타 지자체와의 유치 경쟁 심화, 정부 조직 개편의 일정과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은 외부 환경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김해시는 단일 기관 유치 경쟁에 집중하기보다, 동남권 관문성·산업 집적·외국인 정주 규모라는 고유한 강점을 전면화하여 ‘기능 중심·권역 거점’이라는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함

○ WT 전략

- 아울러 이민정책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편차와 외국인 증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가능성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관리가 필요한 요소임
- 따라서 급격한 제도 도입보다는 정주 환경 개선, 사회통합 프로그램 강화, 단계적 정책 축적을 통해 정책 리스크를 완화하고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함께 높여가는 접근이 요구됨

○ 이러한 SO·WO·ST·WT 전략을 종합하여, 김해시는 단순한 ‘기관 유치’ 차원을 넘어 유치-정주-사회통합-행정혁신-국제협력을 포괄하는 다층적 전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동남권 이민행정을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핵심 허브 도시로 기능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함

○ 이를 실제 정책 추진과 실행 단계로 구체화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략 유형별 핵심 과제를 성격에 따라 외부지향-내부강화-행정혁신-국제협력의 4개 실행 트랙(Track A~D)으로 재구성함

<표 4-2> 김해시 출입국·이민정책 기구 유치를 위한 실행 트랙 구성

트랙	전략 방향	핵심 목적
Track A 외부지향(유치 중심)	권역형 이민행정 기능 유치 및 분산 이전 대응	동남권 관문도시 기반을 활용하여 출입국·이민행정 기능 확보
Track B 내부강화(정주·사회통합)	외국인 정주 환경 및 사회통합 기반 강화	외국인이 실제로 살고 일하고 정착하는 도시 실현
Track C 행정혁신	AI·데이터 기반의 이민행정 선도	‘동남권 AI 이민행정 시티’ 구축
Track D 국제협력	글로벌 인재 유입·교류 확대 및 협력체계 구축	국제 네트워크 기반의 글로벌 개방도시 실현

<표 4-3> SWOT 전략유형과 실행 트랙 연계 체계

전략유형	연계 핵심 요소	전략 방향	연계 트랙
SO 전략	동남권 복합 관문성 산업단지·외국인 정주 기반 권역형 이민행정 분산 기초	김해의 입지·산업·정주 강점을 활용하여 동남권 권역형 이민행정 핵심 거점으로 도약	Track A 외부지향 Track D 국제협력
WO 전략	정책 연계·행정 경험 부족 데이터·민원 표준화 미흡 디지털 행정 전환 기초	내부 행정 역량과 정주·사회통합 기반을 강화하여 권역 거점으로서의 수용 능력 보완	Track B 내부강화 Track C 행정혁신
ST 전략	관문도시 기능·산업 집적 타 지자체 유치 경쟁 심화	단일 기관 유치 경쟁을 넘어 기능 중심·권역 거점 전략으로 차별화	Track A 외부지향
WT 전략	정책 공론화 부족 사회적 수용성 관리 필요 조직 신설 불확실성	단계적·축적형 전략을 통해 정책 리스크와 사회적 갈등 요인 관리	Track B 내부강화

3) 비전 및 전략

▣ 비전: “동남권의 관문, 글로벌 이민도시 김해”

- 김해시는 동남권의 복합 관문성과 산업·정주·다문화 기반을 바탕으로, 이민 행정의 권역별 분산·확대 흐름에 부합하는 동남권 핵심 거점 도시로 도약하고자 함
- 이를 위해 김해는 유치-정주-통합-혁신-국제협력을 포괄하는 4-Track 전략 체계를 구축하여, 출입국·이민행정 기능의 지역 분산 및 권역형 거점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궁극적으로 동남권을 대표하는 글로벌 이민도시를 실현하고자 함

▣ 전략

- Track A. 외부지향 전략: 권역형 이민정책 기구
 - 김해의 관문성·산업성·광역 접근성을 기반으로 국가와 권역 단위의 유치 명분을 강화하고, 법·제도·네트워크 등 외부 협력체계를 확립함
 - 이를 통해 권역형 이민행정 기능 분산·배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김해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확보함
- Track B. 내부강화 전략: 정주·사회통합 기반 강화
 - 외국인의 주거·의료·교육 등 생활 인프라를 강화하고 상호문화 기반의 사회통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실제로 정착하기 좋은 도시를 마련함

- 유학생·숙련기능인력·가족정착 확대 등 인구 기반 확충을 통해 지속가능한 다문화 도시 생태계를 구축함
- Track C. 행정혁신 전략: AI 기반 이민행정 혁신
 - AI·데이터 활용을 통한 이민행정 효율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민원 처리 및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함
 - 외국인 관련 통계·행정 데이터를 연계·활용할 수 있는 정책 환경 조성을 통해 중장기적 이민행정 대응 역량 강화를 도모함
- Track D. 국제협력: 국제협력·글로벌 도시외교
 - 해외 송출국 정부·대학·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외국인 노동력·인재 유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글로벌 교류 기반을 확장함
 - 국제포럼·도시외교·창업·투자 협력을 통해 김해를 동남권 대표 글로벌 이민도시로 브랜딩함

동남권의 관문, 글로벌 이민도시 김해		
추진전략		
트랙	전략군	주요내용
Track A 권역형 이민정책 기구 유치전략	A-1. 정책·입법 기반 강화	권역형 이민행정 모델 설계, 국회·정부 협력
	A-2. 관문 인프라 활용	공항·항만 기반 거점 모델 (공항형 출입국 서비스, 항만 연계 인력관리)
	A-3. 산업맞춤 행정거점	산업특화 비자·기업지원 원스톱, 현장형 이동민원센터
	A-4. 여론형성·네트워크 구축	다기관 협의체계 구축, 이민정책토론회 정례화
Track B 정주·사회통합 기반 강화	B-1. 생활·주거 기반 확충	공공기숙사·정주지원, 외국인 금융·의료 접근성 강화
	B-2. 상호문화·갈등관리	갈등영향평가, 상호문화 교육 확대
	B-3. 인구 확대	가족정착 패키지, 우수 외국인·유학생·숙련기술인 유치
	B-4. 김해 특화 전략	동상동 글로벌 문화 중심지, 가야문화 연계 국제교류 브랜딩
Track C AI 기반 이민행정 혁신	C-1. AI 기반 행정혁신	AI 행정서비스 시범 운영
track D 국제협력·글로벌 도시외교	D-1. 송출국 파트너십 구축	베트남·네팔·우즈베키스탄 등 핵심 송출국 협력 강화
	D-2. 국제 인재·교육 협력	해외대학·김해 기업 연계 인재 공동양성
	D-3. 글로벌 브랜드·도시외교	글로벌 포럼(이민·다문화), 국제도시 브랜드 캠페인

<그림 4-1> 비전체계도

21 세부 추진전략

1) Track A. 권역형 이민정책 기구 유치전략

○ 목표: 김해의 관문성·국제 접근성·산업 기반을 활용한 ‘권역형 이민정책 기구’ 유치

(A-1) 정책·입법 기반 강화

① 권역형 이민행정 기구 설치 근거 마련

- 정부조직법·시행령 개정 논의 시 ‘권역형 이민정책 기구(가칭)’ 설치 조항 반영 요구
- 이민행정의 분산·권역화를 통해 국가 이민정책의 현장 대응력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 제안

② 분산형 이민행정 모델 공론화

- ‘이민행정 분산·권역화 포럼’ 개최
- ‘김해공항·가덕신공항 기반 관문형 이민행정 모델’ 제안
- 북극항로 개척, 글로벌 물류 재편 등 중장기 국제 이동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남부권 핵심 관문 행정 거점 필요성 제시
- 수도권 중심 행정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는 국가정책 대안 프레임 구축

(A-2) 관문 인프라 활용

① Ready-to-Run 청사·부지 패키지 제안

- 공항·항만·KTX 등 광역 교통망과 연계된 접근성 우수 청사 후보지 사전 확보
- 기존 김해국제공항과 가덕신공항(예정)을 연계한 동남권 복합 관문 행정 입지 강조
- 북극항로 활성화, 글로벌 항공·해운 노선 재편에 대응하는 미래 관문도시로서 김해의 전략적 입지 부각
- ‘준비된 도시 김해(Ready-to-Run Gimhae)’ 이미지 강화

② 현장 중심 민원서비스 체계 설계

- 공항-항만-산단 중심 3개 현장민원센터 설계
- 정부 분산정책에 부합하는 현장 행정 시범모델 제시

(A-3) 산업맞춤 행정거점

- ① 산업특화 비자(E-7 등) 실증사업
 - 조선·항공·물류·의료기기 등 김해 핵심 산업을 고려한 산업 연계형 비자 정책 적용 가능성 검토
- ② 외국인 고용기업 One-Stop 지원
 - 비자·고용·통번역·교육 정보를 연계한 기업 지원 창구 운영 방향 제시
 - 지역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외국인 인력 활용 환경 조성
 - 안정적인 외국인 인력 수급 여건 마련을 통해 권역형 이민행정 거점의 정책적 타당성 강화

(A-4) 여론형성·네트워크 구축

- ① 유치지원 네트워크 구축
 - 김해시-김해상공회의소-대학-외국인 커뮤니티 등 다기관 협의체 구성
 - 중앙·광역·기업의 공동 유치 지원체제 구축
- ② 정책 공론장 운영
 - “Global Gateway Gimhae Migration Forum” 개최
 - 학계·산업계·시민·외국인이 참여하는 다층적 공론장 운영을 통해 관문형 이민행정 모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Track B. 정주·사회통합 기반 강화

- 목표: 외국인이 ‘살고 싶고, 살기 좋은 도시’ 기반 구축

(B-1) 정주·생활 기반 확충 전략

- ① 외국인 공공기숙사·임대주택 공급
 - 외국인 근로자 및 가족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 주거 지원
 - 단신형·가족형 등 체류 유형을 고려한 다양한 주거 모델 적용
- ② 의료·교육·금융 접근성 강화
 - 다국어 공공 의료 서비스
 - 초·중·고 외국인학생 지원 강화
 - 외국인 금융·송금 편의 인프라 확충

(B-2) 사회통합·포용성 강화 전략

① 갈등영향평가 시행 및 다문화 수용성 제고

-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갈등 요인 및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영향 분석
- 지역 내 편견과 오해 완화를 위한 소통·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② 상호문화 교육 확대

- 연령·생활권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상호문화 교육 확대
- 외국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문화·체험 활동을 통한 일상형 교류 활성화

(B-3) 인구 확대 전략

① 가족동반 정착 패키지

- 주가·의료·교육·고용·상담 정보를 연계한 가족 단위 정착 지원 패키지 지원

② 유학생·숙련외국인 유입 확대

- 지역 대학 및 산업단지와 연계한 유학생·숙련 외국인의 장기 체류·정착 지원 정책 지원
- 지역 산업 수요와 연계된 인재 정착 환경 조성

(B-4) 김해 특화 전략

① 동상동 글로벌 문화 중심지 활성화

- 이주·다문화·국제교류의 역사와 일상을 담은 ‘글로벌 문화 중심지’로 재편
- 문화·교육·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형 다문화 교류 거점으로 기능 강화

② 가야문화 연계 국제교류 브랜딩

- 김해의 가야문화와 허황옥(허황후)의 국제결혼·이주 서사를 연계하여, 김해를 한국 이민·다문화의 역사적 출발점이자 상징 도시로 브랜딩
- 허황옥 설화를 단순 관광 자원이 아닌, 국제교류·이주·문화융합의 역사적 상징성으로 재해석하여 현대적 다문화 정책 메시지로 확장
- 가야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페스티벌 및 ‘다문화 가야축제’ 추진을 통해, 문화교류와 사회통합을 동시에 촉진

▣ Track C. AI 기반 이민행정 혁신

○ 목표: AI 기반 이민행정 선도도시 구축

(C-1) AI 기반 행정혁신 전략

① 24시간 AI 이민 행정 인프라 구축

- 다국어 민원 응대, 기본 행정 안내 등 AI 기반 비대면 민원 지원
- “AI 이민행정 시범도시” 이미지 확보
- G-Immigration Hub(민원·정주·일자리 통합)

② 외국인-기업 매칭 시스템

-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자격, 직무 특성, 산업 수요 등을 고려한 정보 연계 및 행정 지원
- 고용·체류 관련 행정 정보 제공 체계 제시
- 외국인 근로자-기업 간 매칭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절차·정보 접근의 비효율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모델 시범 운영

▣ Track D. 국제협력·글로벌 도시외교

○ 목표: 외국인 인재의 유입-정착-교류-귀환으로 이어지는 순환형 글로벌 인재 생태계 구축을 통해 김해시의 국제 경쟁력 강화

(D-1) 송출국 파트너십 구축

① 송출국 정부와의 노동·정주 협력 강화

- 베트남, 필리핀, 네팔 등 주요 외국인력 송출국을 대상으로 고용-교육-정주 연계 협력 모델을 단계적으로 구축
- 송출국 정부·공공기관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사전 교육, 직무 연계, 정착 지원이 결합된 협력 구조 마련
- 해외 고용·교육 기관과의 정기적 실무 교류 및 정보 공유 체계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외국인력 유입 기반 조성

(D-2) 국제 인재·교육 협력

① 김해형 국제 인재유치 프로그램

- 지역 대학-김해 소재 기업-해외 대학 간 협력을 통해 공동 교육과정

및 현장 연계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 유학생, 청년 외국인 인재를 대상으로 지역 산업과 연계된 취업·정착 경로를 제공하여 장기 체류 및 지역 정착 유도
- 산학연 연계를 기반으로 한 지역 맞춤형 글로벌 인재 육성 모델 정착

(D-3) 글로벌 브랜드·도시외교

① 국제도시 브랜드 강화

- 이민·다문화·국제교류를 주제로 한 국제 포럼 및 교류 행사 정례 개최를 통해 글로벌 도시 이미지 제고
- 김해의 관문성, 다문화 수용성, 국제 교류 역량을 집약한 ‘Global Gateway Gimhae’ 도시 브랜드를 체계적으로 구축·확산
- 외신, 유학생, 외국인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한 글로벌 홍보 전략을 추진하여 국제적 인지도 강화

3 | 추진 로드맵

□ 단기

- 핵심 목표: 유치 명분 확보 및 기초 인프라 및 제도 기반 확립
- 단기 단계는 김해가 ‘이민행정 기구 설치에 가장 준비된 도시’임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둠
 - Track A는 권역센터 법령 반영 요구, 정책포럼 정례화 등 중앙·광역 레벨에서의 정책 명분 확보와 유치 논리를 공식화하는 데 중점을 둠
 - Track B는 전담조직 신설, 데이터 대시보드 기획, 외국인 기숙사·임대주택 계획 등 정주 기반의 제도적 틀을 마련함
 - Track C는 AI 민원시스템 시범운영 등 스마트 행정 기반을 조성함
 - Track D는 동상동 외국인거리의 글로벌 브랜드화와 송출국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외 신뢰와 도시 이미지 기반을 확보함

□ 중기

- 핵심 목표: 기능의 본격 운영 및 정주·통합 기반의 실질적 성과 창출
- 중기 단계는 단기 기반 위에서 현장 중심 행정 모델을 전면 가동하고, 김해형 통합정책을 정착시키는 시기임
 - Track A는 산업특화 비자 실증을 확대하고 중앙-광역-지자체 유치 컨소시엄을 구축해 유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함
 - Track B는 외국인 정주지구 조성과 다문화 교육·갈등영향평가의 정착을 통해 정주·사회통합 체계를 도시규모로 확산함
 - Track C는 AI 기반 이민행정 서비스를 도입하여 김해형 스마트 이민행정 모델을 구축함
 - Track D는 글로벌 인재교류 네트워크 확립과 주요 송출국과의 사업형 협력을 통해 김해의 국제협력 깊이를 강화함

▣ 장기

- 핵심 목표: 권역형 이민행정 기구 공식 운영 및 글로벌 관문도시 완성
- 장기 단계는 김해가 동남권을 대표하는 국가적 이민정책 허브도시로 자리 잡는 시기임
 - Track A는 동남권 이민정책 기구의 공식 운영을 통해 김해를 권역 중심 이민행정 허브로 확장함
 - Track B는 김해형 글로벌 정주·사회통합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면서 대표적 다문화·정주 도시 모델을 완성함
 - Track C는 AI 기반 스마트 이민행정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여 대한민국의 기준 모델을 제시함
 - Track D는 ‘Global Gateway Gimhae’ 구축을 통해 글로벌 인재 순환 허브 및 국제교류 중심도시로서 도시브랜드를 확고히 함

<표 4-4> 김해시 출입국·이민행정 기능 유치를 위한 단계별 추진 로드맵

구분	단기	중기	장기
Track A	권역센터 법령반영 요구 정책포럼·유치세미나 정례화	산업특화 비자 실증 확대 중앙·광역·지자체 유치 컨소시엄 구축	동남권 이민정책 기구 운영
Track B	전담조직 신설 대시보드 기획·구축 외국인 기숙사·임대주택 계획 수립	외국인 정주환경 구축 다문화 교육·갈등영향평가 정착	김해형 글로벌 정주·사회통합 모델 전국 확산
Track C	AI 민원시스템 시범운영	AI 이민행정(외국인 정책) 서비스 도입	AI 이민정책 선도 도시
Track D	주요 송출국 정부·대학 협력 강화 동상동 외국인거리 브랜드화	글로벌 인재교류 네트워크 정착 해외 국가와 경제·청년·문화 교류 확대 국제 인재·교육 협력 프로그램 운영	국제교류 도시 ‘Global Gateway Gimhae’

V 결론 및 정책 제언

1 | 결론

-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인구위기 속에서 정부의 이민행정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김해시가 갖는 정책적·공간적·사회문화적 잠재력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음
- 연구 결과, 김해시는 국가적 이민행정의 지방 분권화와 권역별 기능 확충이라는 정책 흐름에 적합한 도시 중 하나로 판단됨
- 우선, 국가 정책 환경은 수도권 중심의 이민행정 체계를 보완하고, 산업현장 중심의 분산형·권역형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화하고 있음. 특히 지역 정주 기반을 고려한 이민정책의 필요성은 김해와 같은 산업도시·다문화도시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 둘째, 동남권 환경 분석 결과, 동남권은 산업·물류·노동력 수요가 비수도권 최고 수준이며 외국인 인구 증가세가 매우 빠른 권역임이 확인되었음. 이 가운데 김해는 공항·항만·산단을 단일 도시 내에서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도시로서, 동남권 전체를 아우르는 ‘광역형 이민행정 서비스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입지적 우위를 갖추고 있음
- 셋째, 김해시 내부 분석에서는 외국인 정주 규모, 다문화 커뮤니티의 자생력, 행정인프라 등 다양한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도시 구조가 확인됨. 결혼이민자, 유학생, 비전문취업·방문취업 근로자 등 체류유형이 폭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김해국제공항과 가덕신공항 예정지에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입지 특성은 이민행정 기능의 실제 수요와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함
- 또한 외국인 거리, 다문화축제, 외국인 지원센터 등 지역 기반의 사회통합 생태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으며, 지역사회 수용성이 비교적 높은 점은 김해가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이민정책 실증·확산 모델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음을 시사함

- 다만, 정부조직 개편의 불확실성, 지자체 간 경쟁 심화, 일부 시민의 인식 편차 등은 향후 유치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임
- 종합적으로, 김해시는 인구·산업·입지·정주·사회문화 기반이 균형적으로 갖추어진 동남권 이민행정 핵심거점 도시로서 충분한 정책적 정당성과 실행 여건을 보유하고 있음
- 이번 연구는 이러한 잠재력을 체계적 전략과 실행방안으로 전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김해가 향후 국가적 이민행정 체계 개편의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분명히 확인함

2 | 정책적 제언

-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김해시가 향후 출입국·이민정책 기구 유치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방향을 단계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음

■ 권역형 이민행정 모델을 국가정책 의제에 선제적 제시

- 김해의 관문성, 동남권의 산업·물류 구조, 빠르게 증가하는 외국인 인구는 단순한 지역적 특성을 넘어 국가 이민행정 분권화의 전략 거점이라는 의미를 지님
- 따라서 김해시는 이러한 지역적 강점을 ‘권역형 이민정책 기구’ 설립의 국가정책 근거로 제도화하는 과정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함
-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시행령 개정 대응, 국회·중앙부처와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이민행정 분산·권역화 포럼’ 등 공론장 운영과 같은 정책 외교 활동을 정례화하여, 김해의 정책 메시지를 명확히 정부 의사결정 구조 속에 반영해야 함

■ 외국인 정주·사회통합 기반을 확충하여 ‘수요가 존재하는 도시’임을 증명

- 이민행정 기구 설치에 단순한 행정 수요가 아니라 지속적 정주 기반을 갖춘 도시인지 여부가 핵심임
- 따라서 김해시는 외국인이 실제로 살아가며 서비스 수요를 발생시키는 도시임을 수치와 정책으로 명확히 보여줄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공공기숙사·임대주택 등 주거 기반 확충, 다국어 의료·금융·교육 접근성 강화, 갈등영향평가 및 상호문화교육 정례화, 외국인·시민 공동참여형 사회통합 프로그램 확대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김해가 안정적·지속적 정주 수요를 지닌 도시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함

■ AI·데이터 기반의 ‘AI 이민행정 모델’을 선도적으로 구축

- 국가 이민행정 개편 논의에서 디지털 기반의 업무 효율성 및 자동화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음

- 김해는 AI 활용정책, 공공데이터 체계, 산업단지 기반의 기업 수요 등을 결합하여 ‘AI 이민행정 선도도시’라는 차별화된 포지션을 확보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G-Immigration Hub’ 통합 플랫폼 구축, 외국인 인구·체류·고용 데이터 대시보드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행정혁신을 통한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함

▣ 국제협력·도시외교를 강화하여 글로벌 인재순환 생태계를 구축

- 김해가 동남권의 관문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기관 유치가 아니라 글로벌 인재의 유입-정착-귀환이 순환하는 구조를 조성해야 함
- 이에 따라 베트남·필리핀·네팔 등 주요 송출국 정부 및 대학과의 MOU, 해외대학-김해기업-지역대학 간 공동 인재양성, 국제 인재·청년 교류 프로그램 운영, ‘Global Gateway Gimhae’ 국제브랜딩 캠페인, 외신·유학생·글로벌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도시 외교 등을 통해 김해의 글로벌 위상을 제도권과 국제사회 모두에 확실히 각인할 필요가 있음

▣ 유치 추진체계를 제도화하고 지속가능한 행정 추진동력을 확보

- 출입국·이민정책 기구 유치는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중장기 전략이 요구되는 정책 분야임
- 따라서 김해시는 추진체계를 제도적으로 고도화하여 행정의 연속성과 정책 신뢰성을 확보해야 함
- 김해형 이민정책 기본조례 제정, 10년 단위 중장기 이민정책 로드맵 수립, 중앙정부·광역단체·기업·대학과의 공동 추진협약 체결 등을 통해 정책 메시지를 명확히 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출해야 함

| 참고문헌 |

-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2024), 2024. 김해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안).
- 김동욱(2010), 중앙행정기관의 공간적 위치 선정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48(1), 1-24.
- 김수한·박찬열·전유정(2023),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인천연구원.
- 김해시(2025), 2024년 김해시 다문화·외국인 가구 통계.
- 김해시(2025), 2025년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 정책 현황.
- 김해시(2025.10), 김해시 인구정책 브리프.
- 김해시 내부자료(2025).
- 김해시복지재단(2025), 제30차 김해복지포럼 발표자료.
- 법무부(2024.9.26.),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하는 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08),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3),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8),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2),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체류 길잡이 비자 내비게이터」.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3),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3년.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5),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5년도 4월호.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5),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5년도 7월호.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4),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김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경상남도김해시조례 제1826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 경상남도김해시조례 제2139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법률 제20734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514호.
- 라휘문·조경훈·홍성준·이상엽·이현우·김진덕(2024), 「외국인 전담기구 경기도 유치 추진 당위성 및 경제적·사회적 효과분석」, 경기연구원.
- 장연주·정창용(2024), 「경남의 외국인·이민전담조직 유치 당위성 및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경남연구원.
- 장영환(2025.5.29.), 「김해 '다문화 상권' 확장 중... '공동체 상생모델' 필요」, 「경남매일」.

- 조은정·박정숙·채성주·오명근(2024), 「출입국·이민관리청 청주시 유치 타당성 및 기대효과 분석」, 청주시정연구원. 청주 이슈 BRIEF Vol.11.
- 송봉준(2025.4.29), “김해중부경찰서, 경남 유일 다문화치안센터 '오픈하우스' 행사”, 「노컷뉴스」, 중앙일보(2023.12.6.), “이민청 1차장·1관·4국 신설…한동훈 “난민심사 강화””.
- 이민정책연구원(2021), “외국인정책 백서 2021”, 「외국인정책 연차보고서」, 제2021호, 이민정책연구원.
- 이경민(2025.11.14.), “경남 외국인 거주 1위… 김해에서 ‘작은 월드컵’ 열린다”, 부산일보.
- 이연정(2024), 김해경제동향&ISSUE 2024년 10월, 김해연구원.
- 이종훈(2025.10.23.), “다문화 도시 김해시, 외국인 복지 정책 선도”, 경남신문.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5.6.4.), “「2024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 발표”.
- 전지영(2023), 김해 원도심 에스닉상점의 공간적 분포 특성. 지역과 지리, 29(2), 255-266.
- 행정안전부(2025.10.), 202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 가야글로벌센터, “센터활동”, <https://gaya.clickn.co.kr/>, 접속일: 2025.11.25.
- 김해시 공식블로그, “동상동 외국인거리”, <https://blog.naver.com/gimhae4you>, 검색일: 2025.11.25.
- 김해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센터소개”, <http://gimhaekorea.or.kr/>, 접속일: 2025.11.25.

출입국·이민정책 기구 김해시 유치를 위한 기초연구

발 행 2025년 12월 31일
발 행 인 김 재 원
발 행 처 김 해 연 구 원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2층
Tel (055)344-7700
Homepage : www.ghri.re.kr
ISBN : 979-11-991749-8-6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GHRi 김해연구원
Gimhae Research Institute

50969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2층
TEL : 055-344-7700

비매품/무료
93060



9 791199 174986
ISBN 979-11-991749-8-6